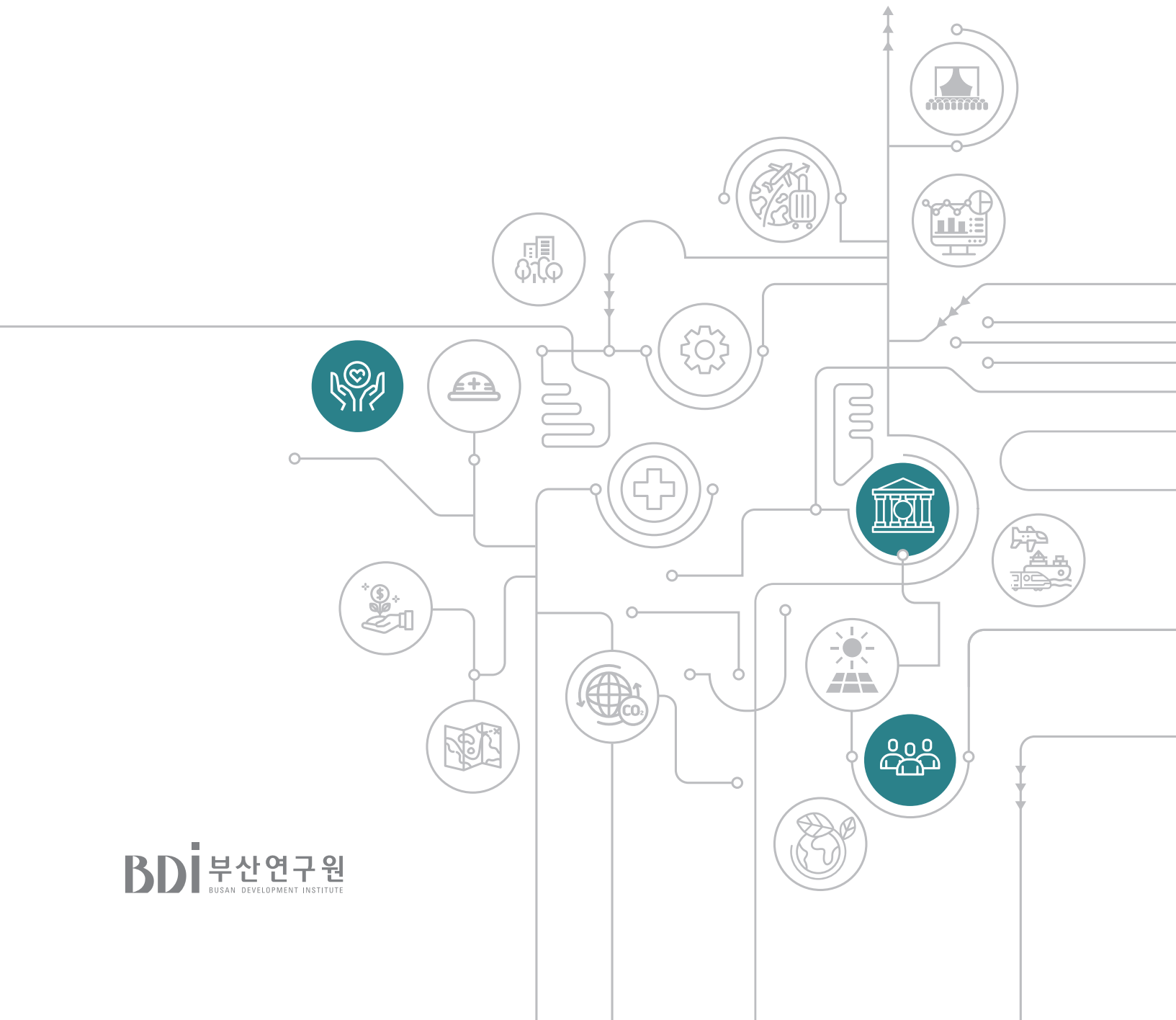


축소사회, 부산청년정책 재구조화 및 실천전략

Restructuring Busan Youth Policy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a Shrinking Society

손헌일·김두레·권태상·박봉철·김세현·이가현





손 헌 일 문화·복지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김 두 례 문화·복지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권 태 상 문화·복지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박 봉 철 도시·해양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김 세 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위원
- 이 가 현 문화·복지연구실 연구원

※ 곁장에 강조해 표시한 아이콘은 해당 연구 주제를 알기 쉽게 표현한 그림 기호로 아래에 기술한 주제별 키워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합니다.

	행정 및 제도: 법·제도, 조직, 지역분권, 행정통합, 주민자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행·재정 등		삶의 질: 행복, 교육, 학습, 인권, 가정, 보험, 연금, 취약 계층, 공정과 정의, 평화, 연대, 성평등, 생활 등
	사회 및 복지: 인구,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노동, 가구, 공동체, 불평등, 저출생(산), 교육 등		도시설계 및 경관 디자인: 장소, 건축, 공원 및 광장, 녹지, 거리, 보행, 색채 및 재료, 공공(시설) 디자인 등



요 약

◆ 연구 배경 및 문제 인식

- 부산은 1995년 이후 인구 388만 → 326만(-16.0%), 연평균 -0.7%로 감소세가 '소멸위험 기준선(-0.15%)'의 4.7배에 달함
- 65세 이상 비율 23.0%, 광역시 최초 초고령사회 진입
- 합계출산율 0.75명(전국 최저), 청년 고용률 56.7%(전국 평균 이하)
- 청년 1인 가구 9,100세대(2015) → 13,300세대(2021), 46.2% 급증
- 청년정책 예산 4.3배 증가(973억 → 4,146억 원)에도 정책 인지율·체감도 개선 필요

◆ 부산지역의 구조적 과제

과제	주요 내용
연쇄수축	인구·경제·공간이 동시에 축소
다차원 이탈	탈부산 의향 38.2%(20대 51.6%) 이탈 원인 76%가 일자리 부족·질적 불일치 설문조사 응답자의 70%는 서울 거주가 경쟁력 향상 요인 인식
정책 투자의 역설	예산 4.3배 증가에도 정책 미인지율 70%, 신청 자격 장벽 45.2% 예산 구조가 일자리(63.1%)→교육(57.6%)으로 전환
가치관 전환	가족·건강 최우선; 81.8%가 “여유 있으면 일 안 하고 싶다” 결혼 개인 선택 93.3% AI 신뢰(2.57점) > 정치인 신뢰(1.81점)

◆ 정책 재구조화 기본 방향

- 스마트 전환: 인구 감소를 전제로 정책 설계, ‘스마트 축소’ 전략 채택
- 삶의 질 중심: ‘청년 생활인구’ 개념 도입, 15분 도시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 생애 통합성: 일·주거·복지·관계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
- 청년 주도 공동 창조: 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 청년에게 이양

◆ 5대 전략 영역별 실천 방향

- 전략 1. 미래 노동 전환 대응
 - AI·디지털 전환 대비 4대 전략산업(해양물류·바이오헬스·디지털·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 자동화 위험 직종 조기경보 시스템 및 단계별 리스킬링 사다리 운영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표준계약·사회보험 지원
- 청년기술아카데미 3단계 교육과정 운영 + 멘토링·연구 프로젝트 지원

○ 전략 2. 경제 자립·생활 기반 보장

- 단계별 자산형성 로드맵: '청년 첫걸음 통장'(매칭형 저축) → 주거·창업 자금 → 내 집 마련
- 소득 하위 30% 대상 기본소득 시범(월 30만 원, 24개월, 지역화폐 연계)
- 전략 거점(센텀·에코델타·북항) 인근 직주근접 특구 지정, 정주 인센티브 제공

○ 전략 3. 사회 재생산·돌봄 생태계 혁신

- 임신·출산·보육·초등 연계 통합 가족지원 체계 구축(핀란드 네우볼라 모델 벤치마킹)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 청년 주도 돌봄 협동조합 지원
- 1인 가구, 무자녀 가족, 반려동물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정책 설계

○ 전략 4. 청년 사회통합·공동체 재건

- 고립·은둔 청년 5,484명 지원: '청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생활 안전망(약국·편의점 등) 네트워크 구축
- AI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 '청년 마음봇' 도입, 연 12회 무료 상담 쿠폰 제공
- 복합문제 협의체 운영(보건소·정신건강센터·고용센터 연계)
- 세대 통합 멘토링 프로그램·공동창조 공모사업 제도화

○ 전략 5. 미래세대 권리·포용 거버넌스

- 청년 정책 공동결정제: 1억 원 이상 사업 청년 사전 승인, 공무원: 청년 5:5 위원회
- 16개 구·군 청년자치회 구성, 지역 청년예산 20% 이상 자율 편성
- 청년 자율예산 10% 확대, 디지털 참여 예산 플랫폼 도입
- 미래세대 영향평가제 도입(웨일스 미래세대법 모델), 100억 원 이상 사업 적용
- AI 기반 원스톱 '청년 정책 나침반' 플랫폼 구축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
	2. 연구의 구성	2
제2장	축소사회의 개념과 주요현상	3
	1. 축소사회의 정의와 구성개념	3
	1) 축소사회의 정의	3
	2) 축소사회 구성요소	5
	2. 부산의 축소사회 현황	18
	1) 축소사회와 사회변화	18
	2) 부산의 축소사회 진단	26
	3) 소결	33
제3장	축소사회, 부산지역 청년정책의 과제	35
	1. 축소사회, 청년정책의 중요성	35
	1) 축소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청년문제	35
	2) 축소사회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주요역할	41
	2. 부산시 청년정책 현황	46
	1)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46
	2) 부산시 주요 청년정책 현황	55
	3) 부산 청년들의 정책 수요	68
	3. 축소사회, 부산시 청년정책의 과제	78
	1)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성과	78
	2) 부산시 청년정책의 과제	80

제4장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83
	1. 조사배경 및 구성	83
	1) 조사배경 및 목적	83
	2) 조사개요	83
	2. 주요 조사 결과	86
	1) 사회적 웰빙에 관한 가치	86
	2) 결혼 및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	96
	3) 노동과 투자에 관한 인식	107
	4) 청년 이동성과 도시 격차 인식	114
	3. 요약 및 시사점	124
	1) 조사결과 요약	124
	2) 시사점	125
 제5장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향과 실천전략	 127
	1. 부산시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향	127
	1) 축소사회와 부산시 청년정책의 과제	127
	2) 청년정책 재구조화의 기본원칙과 핵심방향	130
	2. 청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실천전략	135
	1) 미래 노동 전환에 대응	136
	2)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생활 기반 보장	139
	3) 사회 재생산·돌봄 생태계 혁신	140
	4) 청년 사회통합 및 공동체 재건	142
	5) 미래세대 권리·포용 거버넌스	145
 제6장	 결론	 147
	1. 연구요약	147
	1) 축소사회와 부산지역 실태	147
	2) 축소사회와 부산지역 청년정책의 과제	148

2. 정책제언	150
1) 축소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포괄적 정책 프레임 재설계 필요	150
2)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기회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150
3)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151
4) 미래사회 대비한 선제적 정책 도입 및 연구의 발전 과제 제시	151
Abstract	153
참고문헌	155
부록	161

표 목차

〈표 1-1〉 축소사회와 유사개념에 관한 정의와 주요 내용	3
〈표 1-2〉 축소사회 관련 주요연구	4
〈표 1-3〉 축소도시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5
〈표 2-1〉 축소사회에 따른 지역 산업 쇠퇴의 주요 영향	12
〈표 2-2〉 최근 10년 내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 변화	14
〈표 2-3〉 축소사회로의 전환 단계별 주요변화와 내용	26
〈표 2-4〉 축소사회 진단 지표	28
〈표 2-5〉 부산광역시 주요 연령대별-권역별 인구증감 현황(2019년 대비 2024년 기준)	30
〈표 3-1〉 축소사회 전환에 따른 주요 사회문제 발생과정	41
〈표 3-2〉 부산시 청년정책 전담조직 변화	47
〈표 3-3〉 부산시 청년거점공간	48
〈표 3-4〉 부산시 전체 예산 중 청년 정책 예산 비중	49
〈표 3-5〉 부산시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의 변화	50
〈표 3-6〉 부산시 청년 정책 중 부산시 자체 예산 비중	50
〈표 3-7〉 부산시 청년 관련 주요 조례 추진 현황	53
〈표 3-8〉 부산시 청년 관련 주요 거버넌스	54
〈표 3-9〉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 연혁	56
〈표 3-10〉 제1차 vs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교분석	63
〈표 3-11〉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현황	65
〈표 3-12〉 부산시 청년정책의 연도별 주요 변화	68
〈표 3-13〉 부산시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인지도	76
〈표 3-14〉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의 주요 변화	79
〈표 4-1〉 조사 설계	83
〈표 4-2〉 조사 빈도분석 결과	84
〈표 4-3〉 응답자별 특성: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	87
〈표 4-4〉 응답자별 특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	89
〈표 4-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	92
〈표 4-6〉 평균 차이 검정 요약: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	92
〈표 4-7〉 평균 차이 검정: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수도권과 지방)	93
〈표 4-8〉 평균 차이 검정: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남성과 여성)	94
〈표 4-9〉 평균 차이 검정: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한국인과 외국인)	95
〈표 4-10〉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선택권	97
〈표 4-11〉 평균 차이 검정 요약: 가구구성에 대한 인식	97
〈표 4-12〉 평균 차이 검정: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98

〈표 4-13〉 평균 차이 검정: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99
〈표 4-14〉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 형태 및 부양	101
〈표 4-15〉 평균 차이 검정 요약: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102
〈표 4-16〉 평균 차이 검정: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102
〈표 4-17〉 평균 차이 검정: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103
〈표 4-18〉 평균 차이 검정: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104
〈표 4-19〉 노동에 대한 인식	108
〈표 4-20〉 평균 차이 검정 요약: 노동에 대한 인식	109
〈표 4-21〉 평균 차이 검정: 노동에 대한 인식 - 2) 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110
〈표 4-22〉 투자에 관한 인식	111
〈표 4-23〉 평균 차이 검정: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매력적이다	112
〈표 4-24〉 평균 차이 검정: 부산 계속 거주 의향	115
〈표 4-25〉 응답자별 특성: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117
〈표 4-26〉 응답자별 특성: 부산 외 거주지로서 선호하는 지역	119
〈표 4-27〉 평균 차이 검정: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	121
〈표 5-1〉 헬싱키 ‘오호야모 센터(Ohjaamo Centre)’ 운영 사례	132
〈표 5-2〉 유럽연합(EU) 청년 회의(Youth Dialogue) 개요	133
〈표 5-3〉 우리나라 주요 지자체의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 사례	135
〈표 5-4〉 포르투시의 TERA 전략(Talento·Evoluir·Reter·Atrair)	13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2
〈그림 2-1〉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인식(1998~2024년)	6
〈그림 2-2〉 초등학교 학생수(2000~2024년)	7
〈그림 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00~2023년)	7
〈그림 2-4〉 출생아수와 사망자수(2000~2023년)	8
〈그림 2-5〉 청년순이동률(2001~2024년)	8
〈그림 2-6〉 평균 가구원 수(전국, 2010~2023년)	9
〈그림 2-7〉 2022~2032 취업자수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천명)	10
〈그림 2-8〉 산업별 추가필요인력('32년, 천명)	11
〈그림 2-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비중 변화	12
〈그림 2-10〉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2000년~2024년)	13
〈그림 2-11〉 전국과 부산의 어린이집 수 변화 현황(2001년~2024년)	15
〈그림 2-12〉 지역별 빈집현황(2024년)	16
〈그림 2-13〉 15분도시 파리 개념	17
〈그림 2-14〉 인구감소의 연쇄적인 파급효과	18
〈그림 2-15〉 학령인구 중위 추계	19
〈그림 2-16〉 합계출산율 OECD주요국 비교(2023년)	20
〈그림 2-17〉 OECD주요국의 연령대별 빈곤율(2023년)	20
〈그림 2-18〉 생산가능인구 추계(2022년~2050년)	21
〈그림 2-19〉 청년순이동 현황(19~39세)	21
〈그림 2-2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비교(2015년~2025년)	22
〈그림 2-21〉 사회복지비 비율(2013년~2023년)	23
〈그림 2-22〉 주택보급률(2010년~2023년)	24
〈그림 2-23〉 국가채무(2001년~2023년)	25
〈그림 2-24〉 분기별 고용률 변화(부산시-전국 비교)	31
〈그림 2-25〉 부산시 청년인구의 순유출입 규모(단위, 명) (2015년~2024년)	32
〈그림 2-26〉 부산시 구·군별 빈집현황(2024년 기준)	33
〈그림 3-1〉 부산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56
〈그림 3-2〉 부산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추진전략의 변화 과정	57
〈그림 3-3〉 부산시 2023년 청년정책 중점과제	58
〈그림 3-4〉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60
〈그림 3-5〉 2025년 청년G대 추진계획	61
〈그림 3-6〉 일자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69
〈그림 3-7〉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	70

〈그림 3-8〉 연령대 별 생활비 부족경험 비율	70
〈그림 3-9〉 연령대 별 주거비 부담에 관한 동의비율	71
〈그림 3-10〉 연령대별 부산을 떠날 의사	72
〈그림 3-11〉 부산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	72
〈그림 3-12〉 연령대별 이주 선호 지역	73
〈그림 3-13〉 연령대별 부산으로 돌아올 의사(부산을 떠난 청년들 대상)	73
〈그림 3-14〉 문화여가활동이 어려운 주된 이유	74
〈그림 3-15〉 결혼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	75
〈그림 3-16〉 청년정책 지원 시 어려움 점	76
〈그림 3-17〉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가 필요한 사업 분야	77
〈그림 4-1〉 인생 주요 요소별 중요도(4점 척도)	86
〈그림 4-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1,2순위 선택 비율)	86
〈그림 4-3〉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	88
〈그림 4-4〉 현대 사회 구성 요소에 대한 신뢰도	90
〈그림 4-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	91
〈그림 4-6〉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96
〈그림 4-7〉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101
〈그림 4-8〉 노동에 대한 인식	107
〈그림 4-9〉 투자에 대한 인식	111
〈그림 4-10〉 부산 계속 거주 의향	114
〈그림 4-11〉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116
〈그림 4-12〉 부산 외 거주지로서 선호하는 지역	118
〈그림 4-13〉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	121
〈그림 4-14〉 서울 출생 및 거주가 개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22
〈그림 4-15〉 서울 출생 및 거주가 개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123
〈그림 5-1〉 축소사회 부산 청년정책 재구조화 5대 전략 영역	136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규모가 축소되는 ‘축소사회’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정체, 도시 쇠퇴, 재정 악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히는 거시적인 현상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인구 순유출이 지속되고 고령 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축소사회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청년층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청년정책은 주로 인구 유입을 목표로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으나, 축소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청년인구 유치를 넘어 이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소사회라는 구조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산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구체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축소사회 진입을 앞둔 부산시를 사례로,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는 청년정책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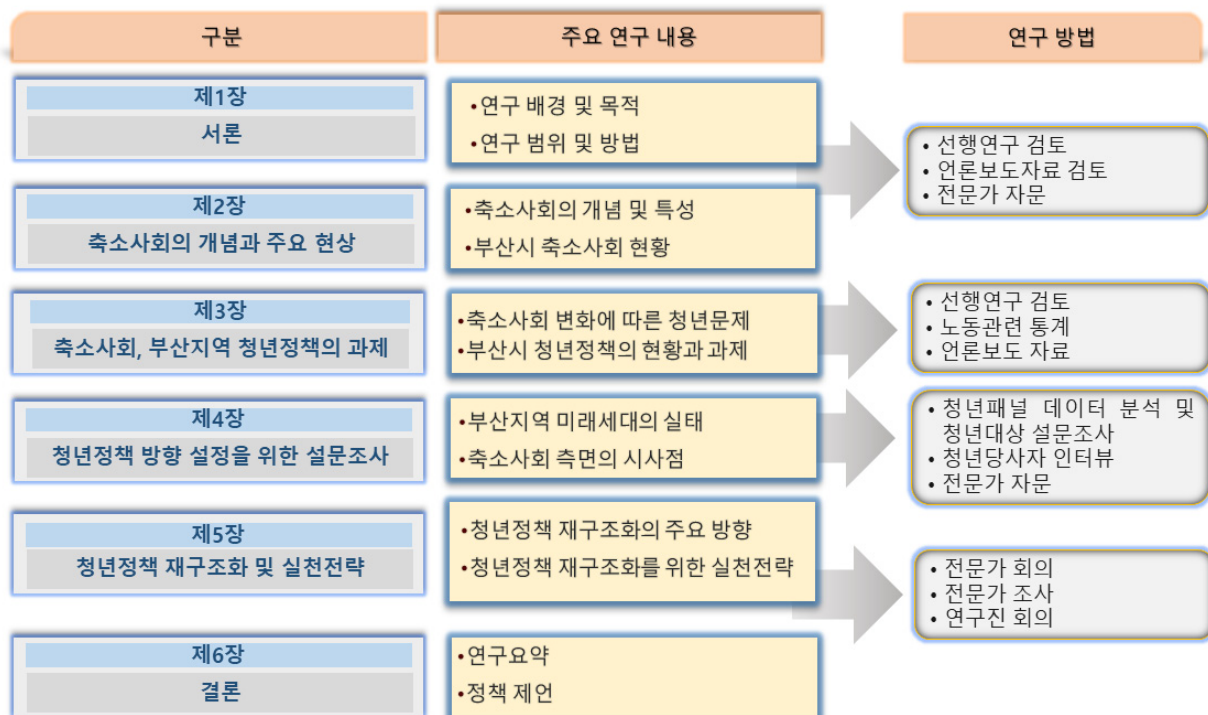
첫째, 축소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구, 경제, 사회, 공간 측면에서 부산시의 축소 현황을 진단한다.

둘째, 국내외 축소사회 및 청년정책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축소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부산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한다.

셋째, 부산시 청년들의 삶의 실태(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정, 일자리 등)와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목적과 구성을 밝히는 제1장 서론을 시작으로,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축소사회의 개념과 주요 현상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축소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인구, 경제, 사회, 재정, 공간 측면에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의식을 구체화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연구의 주요 대상인 부산시 청년 삶의 실태와 정책적 과제를 파악한다. 부산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취업, 주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한다. 제4장은 축소사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 핵심 장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고, 축소사회에 적합한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앞서 제안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부산시 청년정책 실천전략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제언을 통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에 필요한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제2장. 축소사회의 개념과 주요현상

1. 축소사회의 정의와 구성개념

1) 축소사회의 정의

‘축소사회’는 단순한 도시 단위의 인구감소를 넘어, 저출산·고령화·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경제 정체와 재정 악화, 과잉·노후화된 주거·기반시설이 동시에 얹혀 사회 규모와 기능을 장기적으로 축소시키는 거시적 현상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출생률 저하로 인해 경제·사회·문화 시스템 전반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복합적 구조를 포괄한다(Martinez-Fernandez et al., 2012; Wiechmann & Pallagst, 2012).

‘축소도시·쇠퇴도시·지방소멸’이 혼용되며 정의·진단이 미성숙하다는 지적은 개념을 ‘도시’에만 한정해 인구·경제·공간·재정·복지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축소사회의 분석은 도시축소를 내포하고 그 상위의 인구·경제·정책·공간 거버넌스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학술적으로 별도의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이정은·박윤미·김민주, 2023; Turok·Mykhnenko, 2007).

유사 개념인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은 모두 인구감소를 핵심 현상으로 삼지만 강조하는 지점과 정책 대응이 다르다.

〈표 1-1〉 축소사회와 유사개념에 관한 정의와 주요 내용

주요개념	정의	주요 내용	정책 대응방향
축소도시	탈산업화·교외화 등으로 특정 도시 단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과잉 인프라가 남아 물리적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현상	도시 곳곳에 빈 공간이 생기는 ‘도시천공’ 현상	과잉 인프라 정비 및 규모 적정화
쇠퇴도시	인구·산업·환경 등 다차원적 요인으로 도시 전반 또는 특정 지역이 낙후되어 도시재생이 필요한 상태	인구·사업체 증감률, 노후주택 비율 등 공식 지표	도시재생법 기반 활성화 사업 실행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유출이 결합해 지역의 자립능력(지방세수·인구 유지 등)이 상실되는 현상	지역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상실	청년 유출 방지·지역창생(로컬 크리에이션)

자료: 이정은·박윤미·김민주(2023), Turok·Mykhnenko(2007)

축소사회와 관련성 높은 개념들 모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저하, 경제 침체, 공동체 기능 약화를 다루지만, 축소사회는 시스템 차원의 전환과 적응을 강조하며, 물리적 정비(축소도시), 재생 활성화(쇠퇴도시), 인구유출

방지(지방소멸)로 나뉜다(홍유진, 2024).

〈표 1-2〉 축소사회 관련 주요연구

연구자(연도)	축소사회 정의	주요 내용	연구제목
Pallagst (2008)	인구·경제·산업활동이 동시 감소하며 공간 구조와 사회경제 체계가 퇴행하는 현상	- 장기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상업·주거·공공 서비스 축소 및 지역 경제 재편 동학 분석 - 축소사회 개념 도입 및 특성 규명	Shrinking Smart: Patterns of Urban Decline
Martinez-Fernandez et al. (2012)	경기침체·고용감소 등 사회문제와 맞물려 도시 기능·인프라·커뮤니티가 구조적으로 쇠퇴하는 다층적 현상	- 경제·고용·사회문화 측면에서의 다층적 쇠퇴 특성 규명 - 재활성화 정책·거버넌스 전략 제안 및 사례 비교분석	Shrinking Cities: Urban Challenges
Schilling & Logan (2008)	40년간 인구 25% 이상 감소 지역에서 유희공간 증가와 부동산 가치 하락이 상호작용하며 도시 기능이 축소되는 현상	- 주거·상업·산업용지 유희화 증가 확대 - 부동산 가치 하락 메커니즘 분석 '활용 불가능 공간' 확산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 제시	Greening the Rust Belt
구형수 외 (2016)	인구·경제·고용 활동이 감소하며 공공·상업·산업 인프라가 과잉·유희화되는 현상	- 산업·상업시설 가동률 저하 및 거주인구 유출 - 과잉공급된 공공인프라 유지비 부담 증가 - 지역 자산 재배치 및 소멸 위험성 평가	도시 쇠퇴 지역의 공간 재구조화
이삼수 외 (2018)	인구감소와 산업쇠퇴가 결합하여 도시 기능·용도가 폐기되고 재생·녹지화 과정을 동반하는 구조적 축소 현상	- 유희부지 패턴 분석 - 재생·녹지화·축소계획 모델 제시 -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 효과 검증	도시수축과 재생전략
최재현 외 (2020)	인간활동 감소로 인해 주거·도로·산업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사회적 부작용이 증대되는 현상	- 과잉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 분석 - 인프라 축소·통합 전략 및 한계 검토 - 커뮤니티 주도형 축소관리 방안 제안	과잉환경과 축소사회: 물리환경 변화 연구

종합하면 축소사회란 “인구, 경제, 자원, 지역사회 등 사회 시스템의 주요 변수가 장기적으로 총량 감퇴·수축되는 환경 아래 새로운 사회질서와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도시 쇠퇴 등 단계적 축소가 기존 역동적 성장사회와 확실히 구분되는 특성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축소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이정희 외, 2023; Martinez-Fernandez et al., 2012).

“저출산·고령화·청년층 순유출로 인구수와 생산연령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지방세수·공간구조에 누적 충격이 발생해 사회의 유지·재생산 능력이 저하되는 장기적 상태”

2) 축소사회 구성요소

축소사회와 관련된 논의는 ‘축소도시(shrinking city)’ 연구를 통해 먼저 이루어졌다. 그러나 축소도시와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축소’라는 개념에

대한 통일된 정의나 분류 기준 없이 인구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왔다(윤윤규 외, 2012). 축소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특정 도시나 시·군·구를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했지만 인구감소와 도시 쇠퇴의 원인, 과정,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축소사회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축소도시와 다른 다차원적인 구성개념, 축소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축소사회는 축소도시의 논의를 포괄하고 확장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축소도시는 축소사회의 가장 명확한 현상 중 하나이며, 축소사회는 이러한 지역적 쇠퇴의 원인과 결과를 아우르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축소사회가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공간 구조 및 정책 환경에 걸친 다차원적 변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는 점에서 축소사회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표 1-3〉 축소도시 관련 주요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연도)	연구목적 및 내용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송유미·이제상 (2011)	저출산의 원인을 산업사회 변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과 연관하여 규명	저출산의 원인을 가치관,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
김명선·이제연 (2019)	외국과소화에 따른 주요축소도시 쇠퇴 진단 및 정책 시사점 도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활성화 대책의 필요함을 제언
강인호 (2019)	국내 축소도시 실태 현황 분석	'스마트 축소'와 같은 새로운 도시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나, 현장에서는 기존의 팽창적 개발 정책을 선호
주보혜 외 (2019)	국제사회와 선행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자기관리역량 강화'와 '정책 연대 강화'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
박민선 (2021)	국내 인구변화 및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연구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양적 증대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해야 함을 제언
김세현 (2023)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쇠퇴에 미치는 영향 진단	인구 증가 지역에서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도시쇠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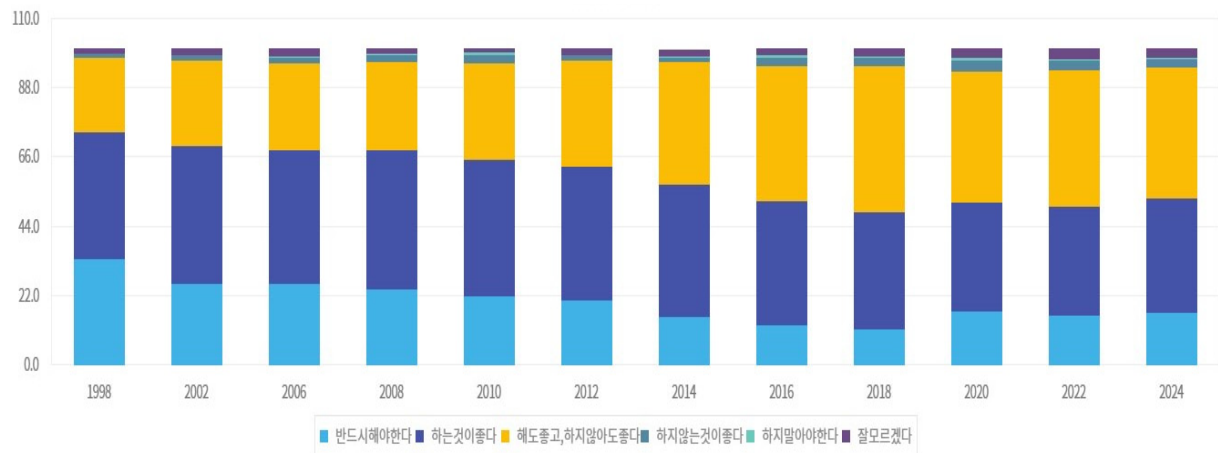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축소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을 제시한다. 이 개념들은 인구구조, 경제, 사회 구조, 도시 및 공간, 정책과 거버넌스 등 다양한 차원에서 축소사회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축소사회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요소

① 인구변동: 저출생과 고령화

우선 축소사회의 핵심 인구사회학적 요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요약된다.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과 결혼에 드는 기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과도하게 경쟁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위한 충분한 여유와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 가치가 약화되고 있는 점이 꼽힌다(홍석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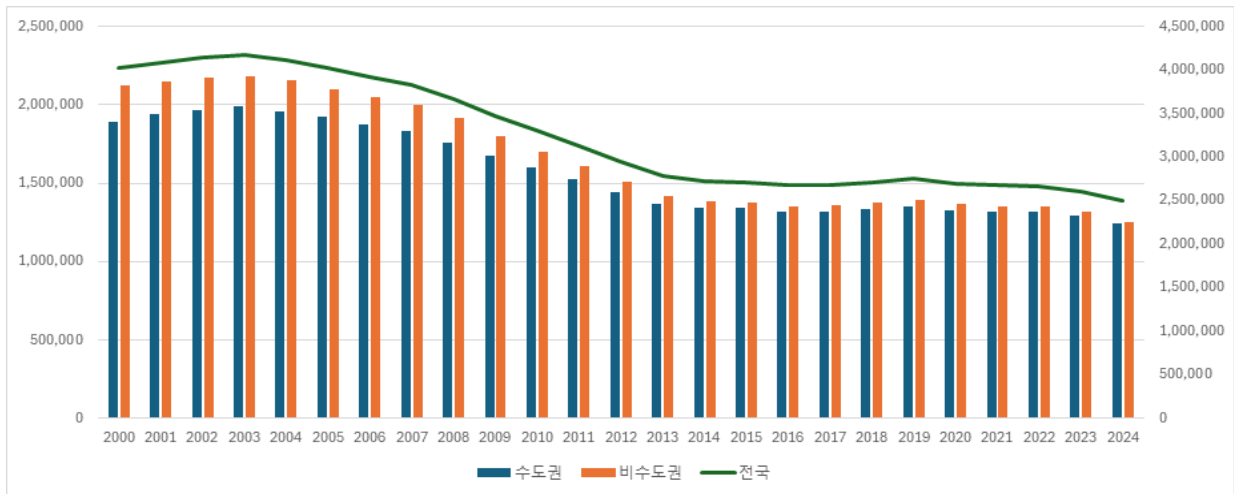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1〉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인식(1998~2024년)

이러한 요인들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 및 여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기존 가부장제와 성별 분업에 따른 제도적 제약과 맞물려 저출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비용에 비해 사회적 보상체계가 부족하다는 점 또한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송유미·이제상, 2011).

실제 저출생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나타난다. 2000년 초등학생 수는 402만 명에서 2024년 250만 명으로 약 152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선택 이상으로 사회 구조적, 제도적, 경제적 복합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다층적 문제라는 점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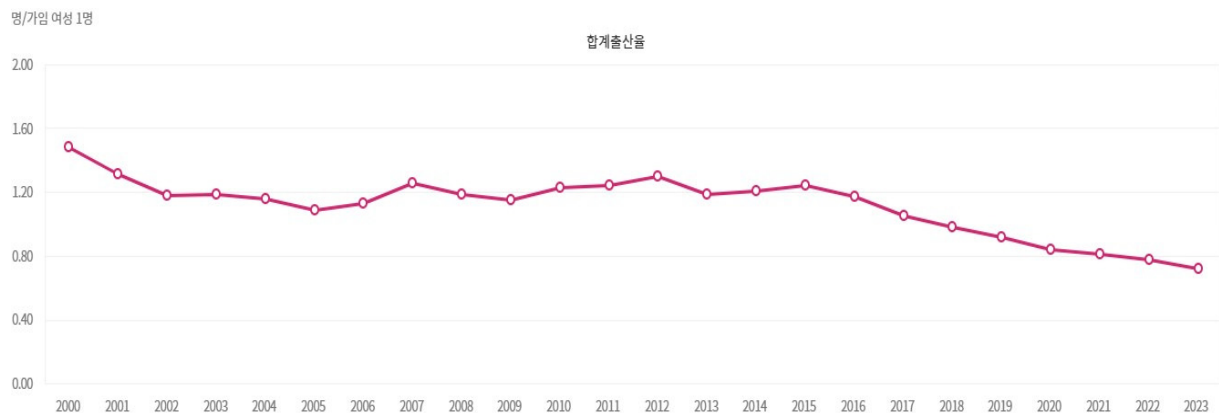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2-2〉 초등학교 학생수(2000~2024년)

② 인구 감소의 역동적 특성: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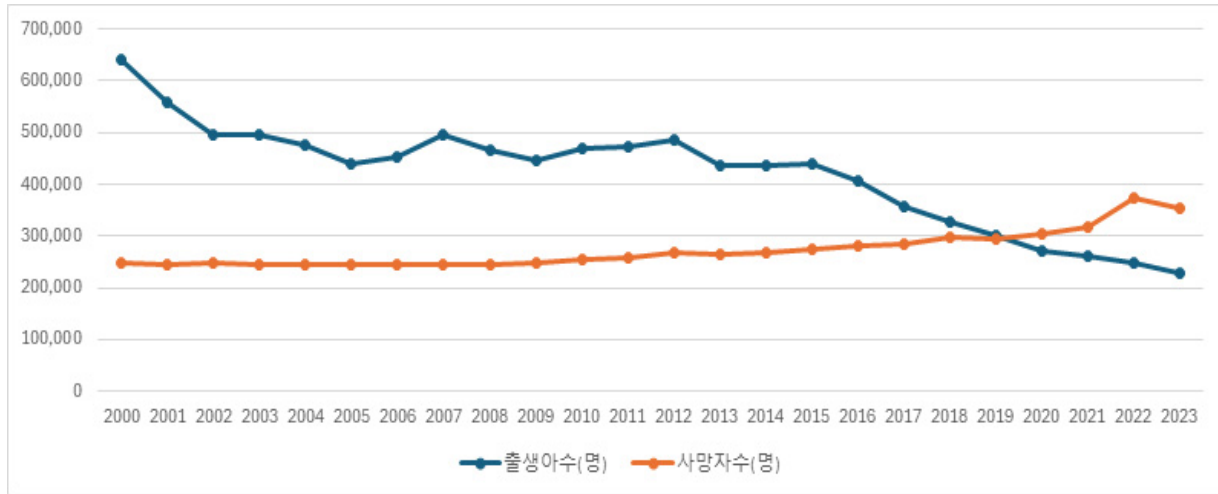
인구 감소는 자연적 감소와 사회적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자연적 감소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사회적 감소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0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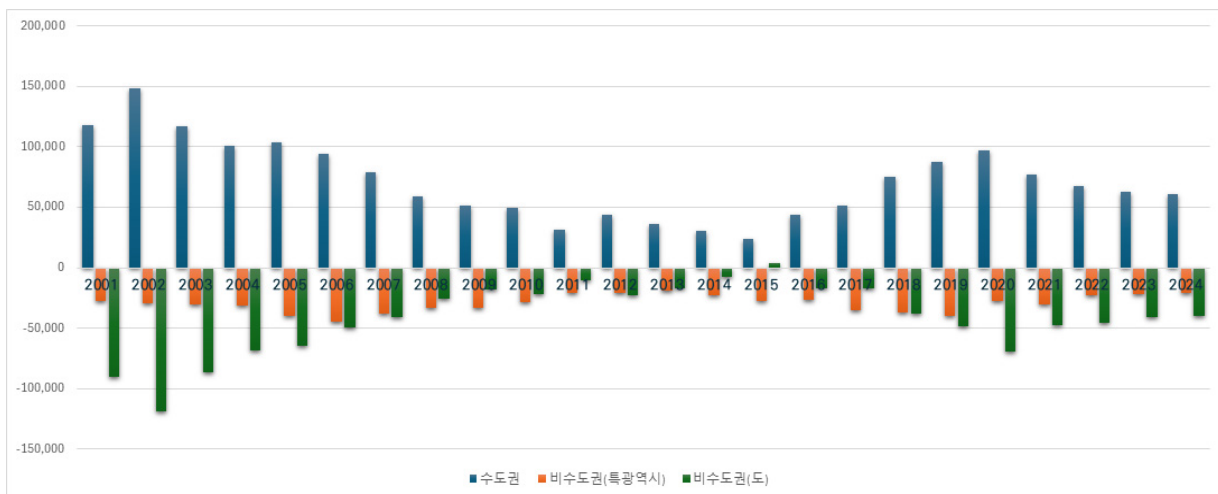
과거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사회적 감소, 즉 특히 청년층의 도시 유출이 인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10년 이후로는 자연적 감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장인수 외, 202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4〉 출생아수와 사망자수(2000~2023년)

이러한 변화는 단지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자연적 소멸’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그치는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젊은 인구 특히 20~30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인구 변화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관계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비혼, 만혼,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상이 지속되면서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하고,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가 약화된다는(박민선,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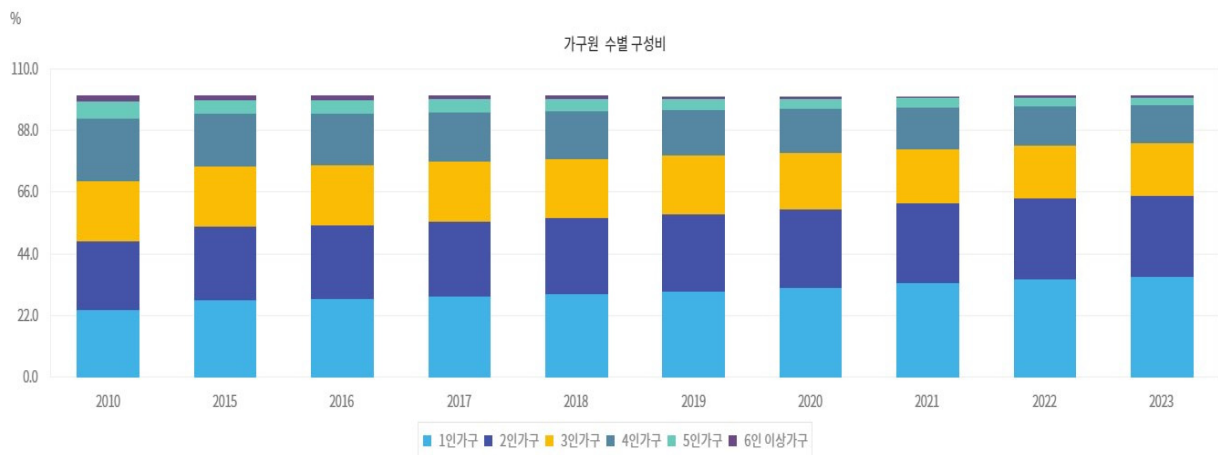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5〉 청년순이동률(2001~2024년)

③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와 공동체의 약화

인구변화는 개인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관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혼 및 만혼 현상이 지속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평균 가구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족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박민선, 2021).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2-6〉 평균 가구원 수(전국, 2010~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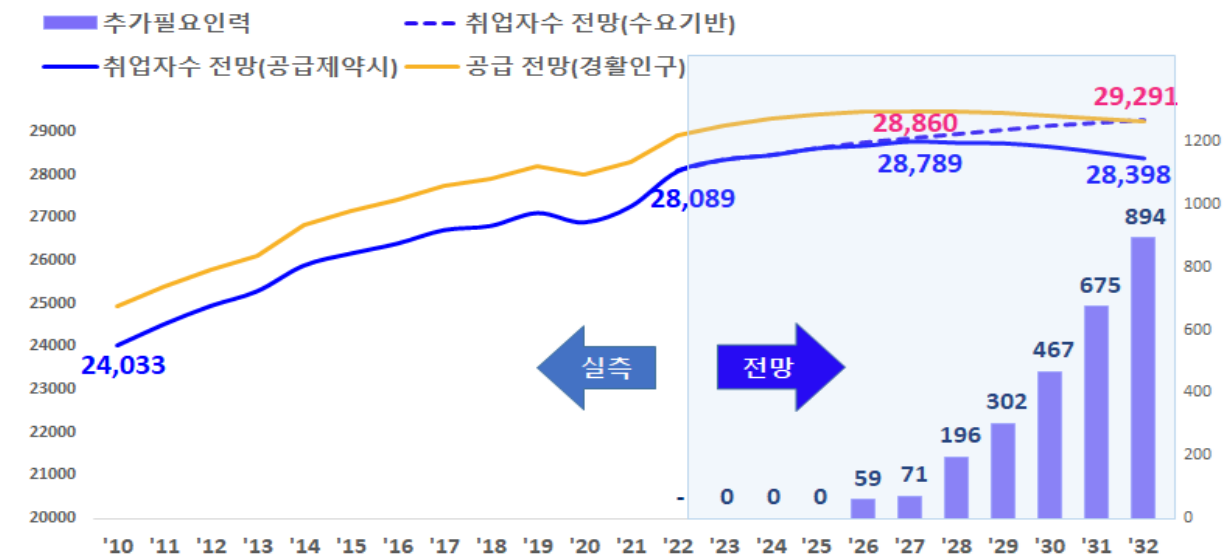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망의 피폐화와 공동체의 와해로 직결되는 현상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동체 와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은 물리적·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재건하고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야 한다.

(2) 축소사회의 경제적 구성요소

①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축소사회는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수반한다. 한국고용정보원(2024)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전망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

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과거 10년간(2012~2022년) 증가폭인 314.1만 명의 1/10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7년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8년부터 본격적인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 2032년까지 89.4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고용정보원,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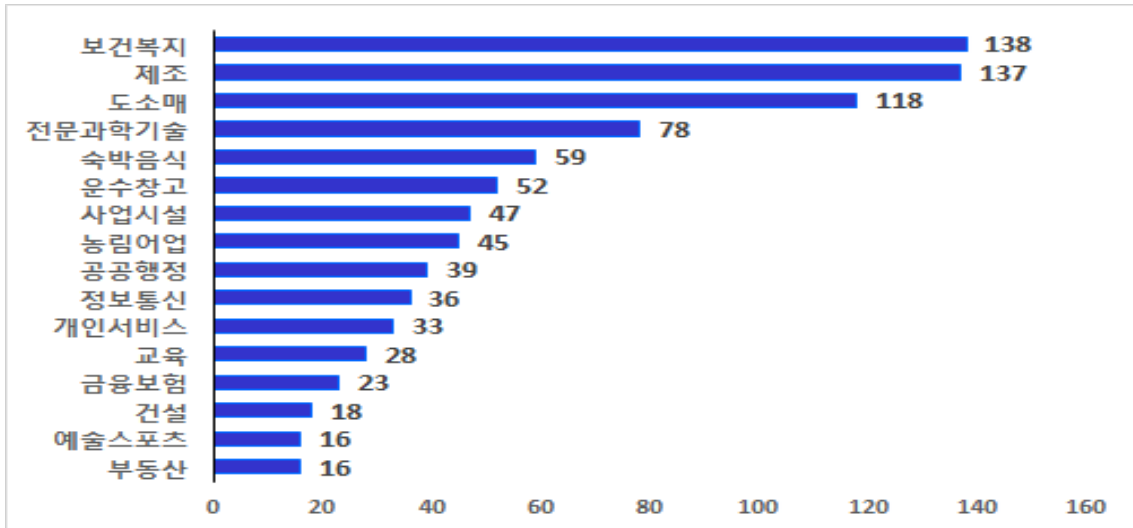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그림 2-7〉 2022~2032 취업자수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천명)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초과), 2028년부터 본격적인 노동력 감소 시작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임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근본 동력인 노동 공급에 구조적 제약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고용정보원(2024)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변화가 진행될 경우 보건복지 서비스업과 전문가 직종에서 추가 필요인력이 가장 많을 것이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직, 서비스직, 생산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24).

이처럼 한국은 본격적인 노동력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이다.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회의 질적 강화를 통해 축소경제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적정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24)

〈그림 2-8〉 산업별 추가필요인력('32년, 천명)

② 산업 및 지역경제의 쇠퇴와 불균형

인구 감소는 지역의 주력 산업 침체를 가속화하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겨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지역의 쇠퇴는 인구사회학적, 산업·경제적, 물리·환경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지역의 주력 산업 침체가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인구 규모가 큰 중심도시와 나머지 지역 간의 쇠퇴 수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김명선 외, 2019).

축소사회의 경제적 문제가 인구 감소라는 단일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산업 구조의 취약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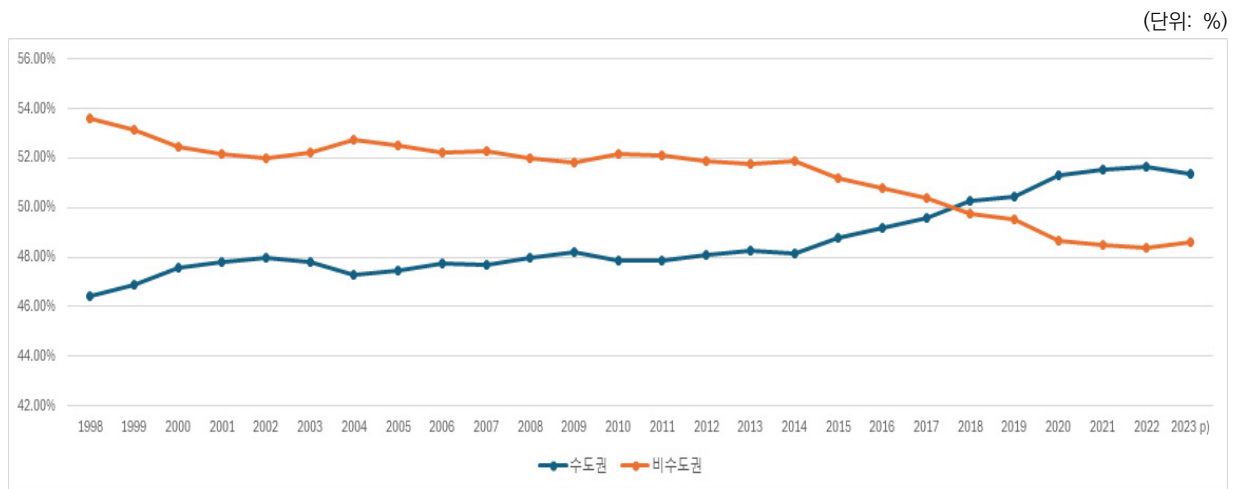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고, 이는 다시 취업자 수 및 GRDP의 감소로 이어진다.

KDI(2024)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2024년 18만 명, 2025년 14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업률은 2.7%에서 2.8%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인구 유출은 단순히 인구 규모의 축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을 약화시키고 자원 및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기 강화적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감소에 더하여 청년들의 유출에 따른 이중적 위기 상황에 이미 놓여있다.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청년 인력의 집적 효과로 성장을 지속해 온 반면, 그 성과가 지역에 대한

투자나 기술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역 경제는 정체된다(김규식 외, 2023).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축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난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비수도권의 GRDP 비중은 1998년 53.8%에서 2023년 49.8%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수도권은 46.2%에서 50.2%로 증가하여 2019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다.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2-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비중 변화

축소사회로의 전환이 비수도권에 더 큰 경제적 충격을 주는 주요 원인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악순환 구조에 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은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지역 내 경제활동 축소와 GRDP 비중 하락을 초래한다.

〈표 2-4〉 축소사회에 따른 지역 산업 쇠퇴의 주요 영향

구분	주요 영향
인적자본	고학력 청년 인력의 유출로 인한 인적자본 둔화 및 중장기 성장 추세 저하
산업구조	수도권의 집적 효과와 지역 투자 부재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 정체(김규식 외, 2023), 저숙련·저부가가치 산업구조 고착화
특정 산업	건설업: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감소폭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KDI, 2024)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기반 위축으로 직접적인 타격(통계청, 2023)

자료: 한국은행(2023), 김규식 외(2023), KDI(2024), 통계청(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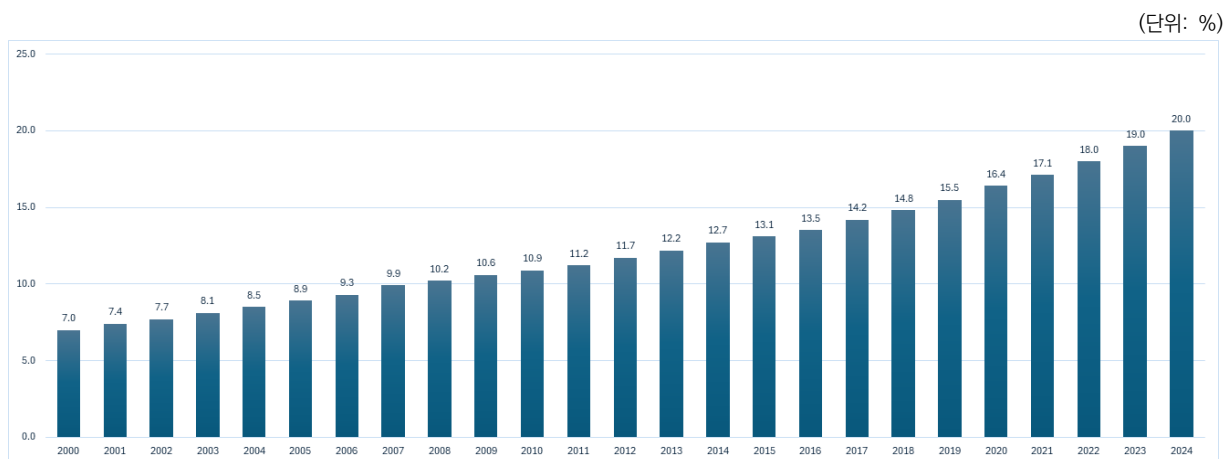
또한 고령인구 증가와 생산성 저하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이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비수도권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인구 유출이 단순히 인구 감소가 아닌, 지역의 산업구조를 저숙련-저부가가치 구조로 고착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 고착화된 산업 구조는 다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을 형성한다(한국은행, 2023; 김규식 외, 2023).

③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위기

급격한 고령화는 연금과 의료비 증가, 요보호 수급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에 따라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되며, 정책적 대응은 단순히 국가나 젊은 세대의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책임과 연대 강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주보혜 외, 2019).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축소사회의 도래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자료: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그림 2-10〉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2000년~2024년)

국회예산정책처(2023)는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보고했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증가율(연평균 7.2%)보다 지출 증가율(연평균 8.9%)이 더 높은 구조적 불균형으로 재정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2028년에는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고, 2032년에는 누적 적자액이 6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3). 이러한 전망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기임을 보여주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위협이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당장의 현실임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는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2024)은 2023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90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만성질환 진료비는 연평균 8.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 10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2.2배 증가했다(질병관리청, 2024).

〈표 2-5〉 최근 10년 내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 변화

질환명	진료비		증가액	증가율(%)
	2013년	2023년		
총 계	23,186,303,756	51,775,817,997	28,589,514,241	123.3%
출생	1,045,538,913	2,480,996,022	1,434,557,109	137.3%
신경계통 질환(치매, 파킨슨)	1,314,661,214	3,002,028,112	1,687,366,898	128.3%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5,572,524,565	12,469,278,885	6,896,754,320	123.8%
만성하기도질환	583,747,710	832,541,654	248,793,944	42.6%
악성신생물(암)	4,157,694,136	10,185,823,556	6,028,139,120	145.0%
소화계통 질환	2,635,456,303	6,248,135,206	3,612,678,903	137.1%
비뇨질환	1,086,521,589	2,062,124,049	975,602,460	89.8%
근골격계 질환	5,408,103,240	11,662,536,481	6,254,433,241	115.6%
신부전증	1,382,065,786	2,833,254,032	1,451,188,246	105.0%

자료: 질병관리청(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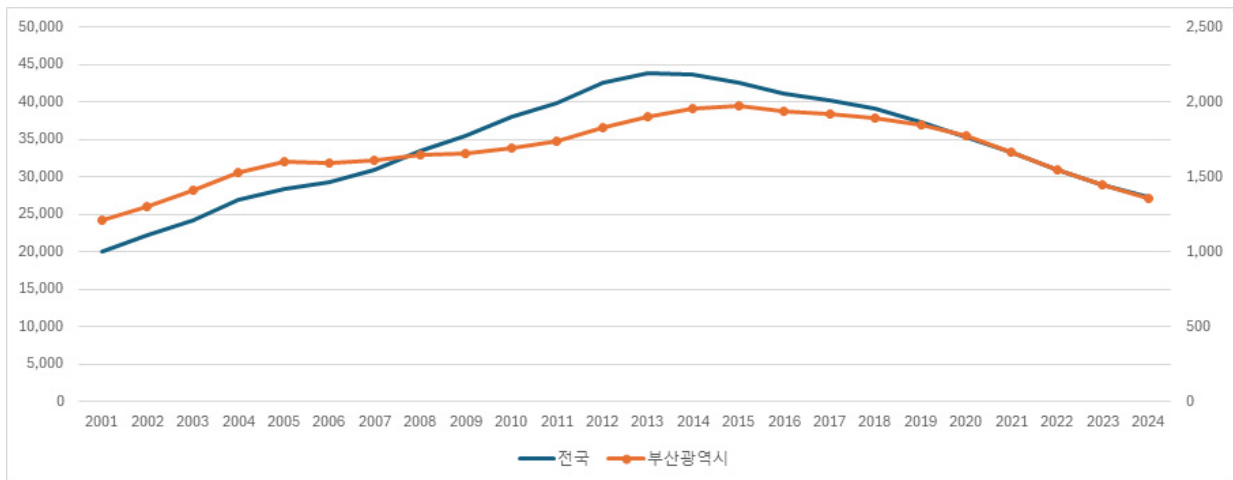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단순히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 폭증이라는 지출 측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KDI, 2023). 예방적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와 공적지출의 효율성 증대가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에 달려 있다. 축소사회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향후 중요하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축소사회의 물리적 및 인프라적 구성요소

① 도시 인프라 미스매치에 따른 비효율 발생

축소사회로의 전환은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감소가 초래하는 도시공간의 비효율과 쇠퇴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축소사회에서는 과거 인구 증가에 맞춰 구축된 물리적 인프라가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기능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정원 대규모 미달 사태와 어린이집 시설의 폐원 증가가 꼽힌다(김세훈, 2022; 강인호, 2019).



자료: 통계청,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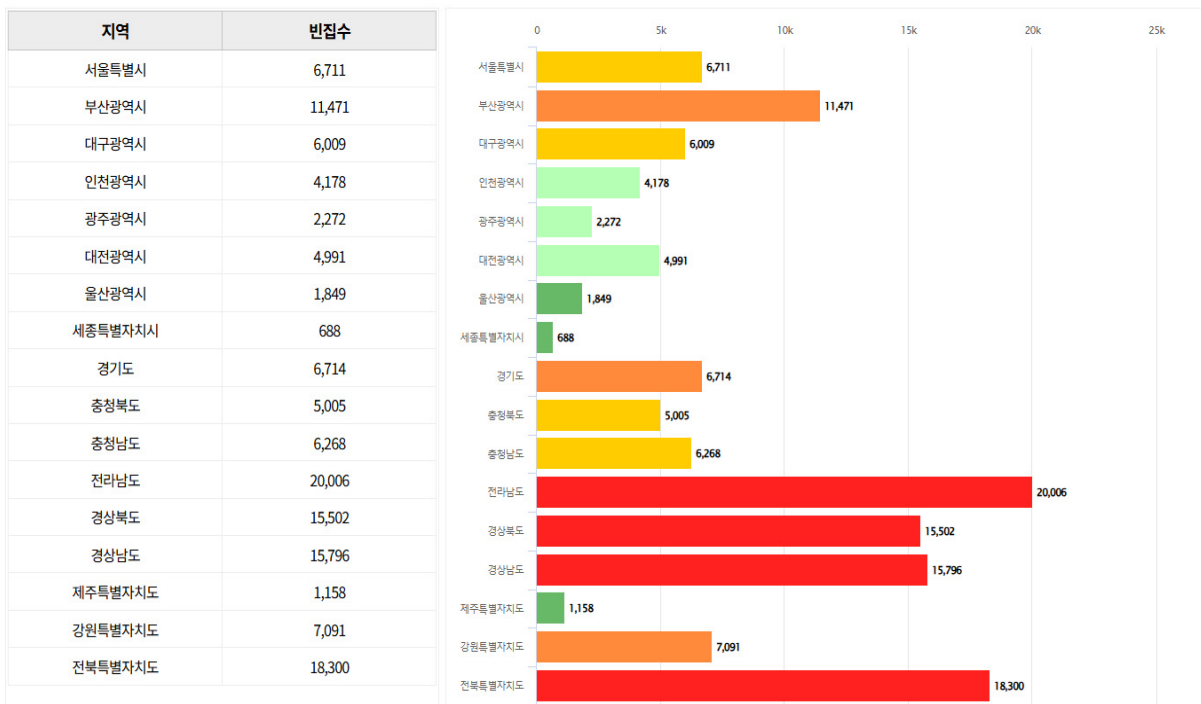
〈그림 2-11〉 전국과 부산의 어린이집 수 변화 현황(2001년~2024년)

인구 감소는 도시의 물리적 시설과 인프라가 본래의 규모와 기능을 상실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초래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은 사회적·경제적·물리적 복합적인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외곽에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심 내 주요 기능이 분산되면서 더욱 가속화된다(국토연구원, 2023).

② 도시 인프라의 기능적 쇠퇴

인구 증가를 전제로 건설된 주택, 도로, 상업 시설 등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제 기능을 잃어가면서 경제적·물리적 쇠퇴 현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도시 성장기에 맞춰 확대되었던 원도심 공간은 인구 정체라는 여건 변화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23).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경우 도심 전역에 걸쳐 공실(빈 공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 공간에 밀집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시의 핵심 기능이었던 주거와 상업 기능이 숙박 및 음식점업 등과 혼재되어 무질서가 심화되고 있으며, 문화·복지·여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차 서비스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국토연구원, 2023).



자료: 한국부동산원 빈집예(<https://binzibe.kr/binzibe/binzibplatform/statisticInfo/binzibStatus.do>)

〈그림 2-12〉 지역별 빈집현황(2024년)

인구 감소와 도시 인프라의 비효율성은 기존의 ‘성장 지향적’ 도시계획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축소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국토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23).

축소사회 전환에 따른 도시공간의 물리적 쇠퇴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개념이 ‘스마트 축소’, ‘스마트 쇠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김세훈, 2022; 강인호, 2019).

축소사회의 도래는 기존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도시는 무분별한 팽창을 지양하고, 인구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여 효율적인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추가 인프라 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의 도시 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구형수 외, 2023). 구체적으로, 도시 공간을 주거, 도시 기능, 생산 유도 지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시규모 적정화 계획’을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었다(이삼수 외, 2023). 이는 도시공간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는 이원적 공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이삼수 외, 2023).

축소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는 모든 도시를 성장시키려 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축소를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 ‘스마트 축소’를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료: Anne Hidalgo, 『le paris du quart d'heure』,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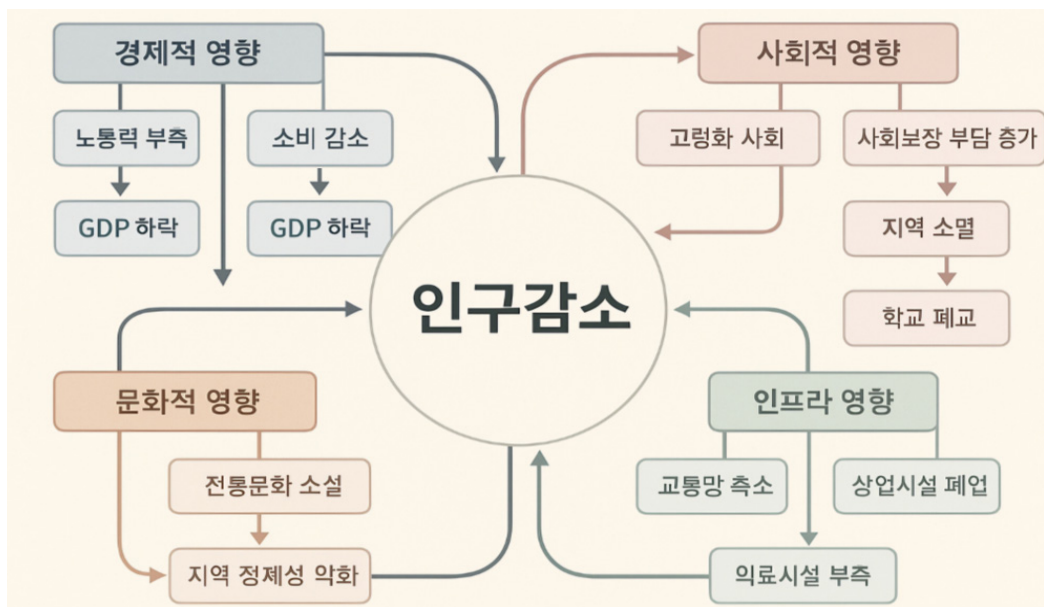
〈그림 2-13〉 15분도시 파리 개념

2. 부산의 축소사회 현황

1) 축소사회와 사회변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존의 성장 중심적인 사회 시스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며 등장한 개념이 축소사회이다.

인구 감소는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며 '다운사이징'으로 이어진다. 인구감소는 그 자체로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및 물리적 쇠퇴를 초래하고, 이 쇠퇴가 다시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이는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져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기획재정부,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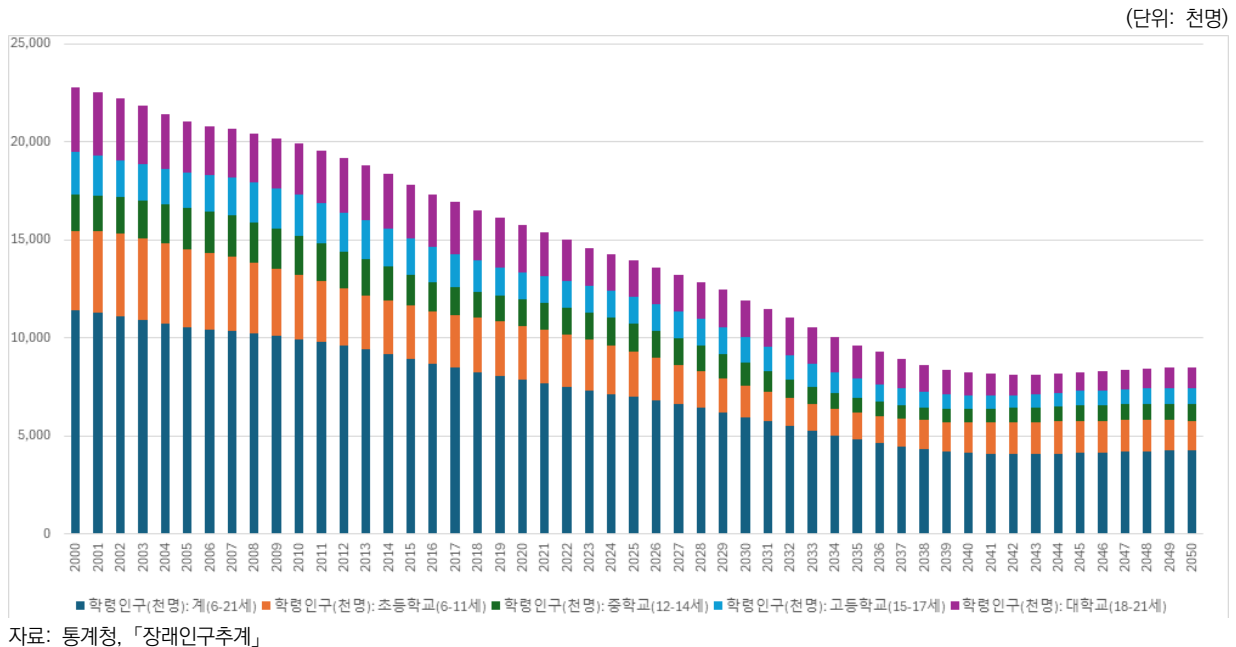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4〉 인구감소의 연쇄적인 파급효과

한국의 축소사회는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의 사례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수성을 지닌다. 인구구조 변화가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50~60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사회 시스템, 제도, 정책이 변화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갈등과 비효율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든다(이정은 외, 2023). 예를 들어,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데 교육 재정은 내국세와 기계적으로 연동되어 증가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23).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인구 성장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축소사회 현상이 단순한 인구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2-15〉 학령인구 중위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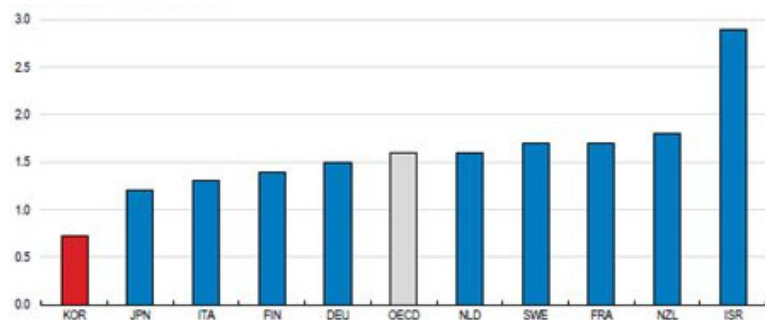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전쟁 중인 국가보다도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압축적 고도성장이 낳은 부정적 결과들이 농축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경쟁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그동안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합계출산율을 0.7명대 이하로 떨어뜨렸고, 이는 장기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초래하여 축소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말라흐, 2024).

축소사회화는 단일한 원인이 아닌, 탈산업화, 인구학적 변화, 교외화·스프롤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다차원적인 프로세스이다(구형수, 2023).

축소사회 전환의 출발점은 도시 기반 산업의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서 출발한다. 세계화, 탈산업화, 기술 자동화 등으로 인해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기

반이 악화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다. 이는 특히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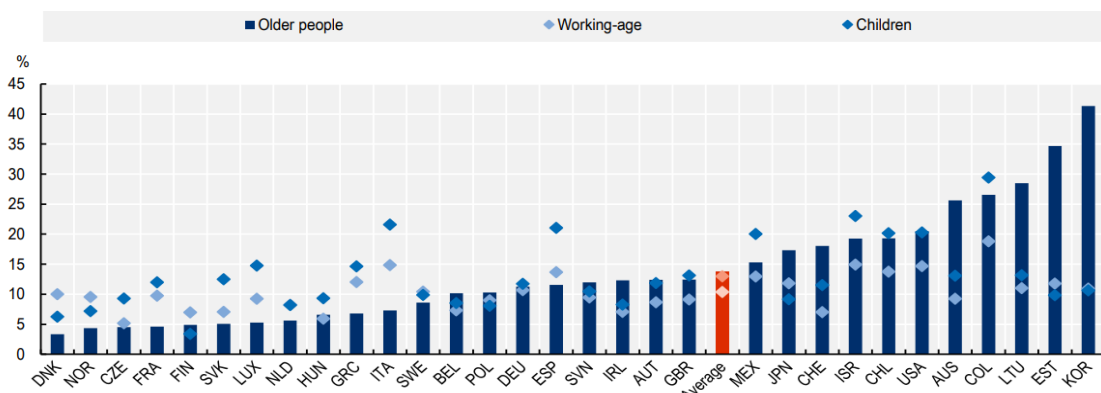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 축소를 통해 취업자 감소와 성장 둔화를 연쇄적으로 유발한다(김재영·이근희, 2023). OECD는 한국이 2012년 네 번째로 젊은 국가에서 2050년 세 번째로 고령 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자료: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OECD, 2024)

〈그림 2-16〉 합계출산율 OECD주요국 비교(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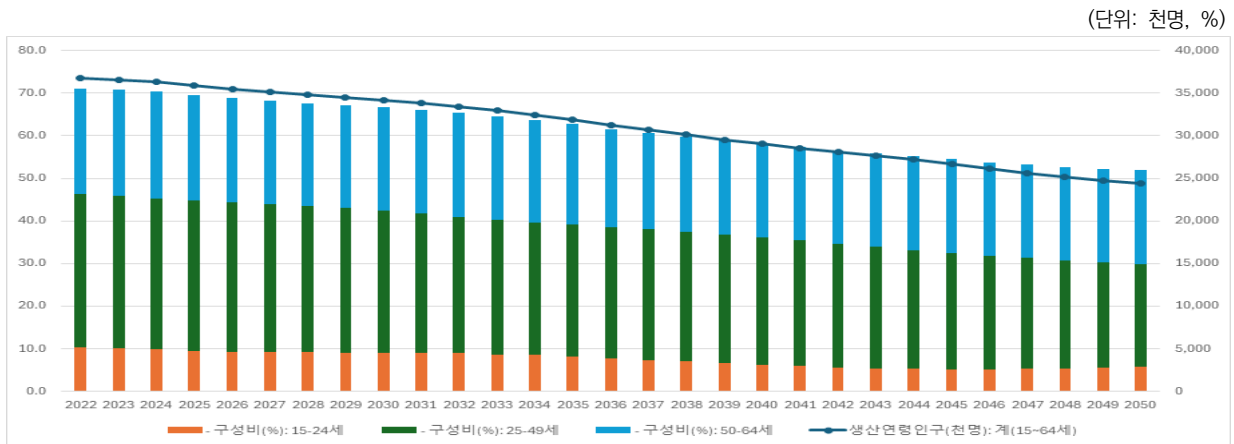
2017년 15~64세 인구가 3,757만 명에서 2067년 1,784만 명으로 줄어들고 (총인구 비중 45.4%), 노년부양비는 2014년 18%에서 2050년 72%, 2067년 120.2%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활동 둔화 뿐 아니라 노인인구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OECD의 주요국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고령자가 아동보다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빈곤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ECD(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Can We Get Through the Demographic Crunch?,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2-17〉 OECD주요국의 연령대별 빈곤율(2023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총노동투입 축소뿐 아니라 기업 역동성 약화를 통해 총요소생산성(TFP) 둔화를 유발하여 성장률의 구조적 하방 압력을 강화한다(OECD,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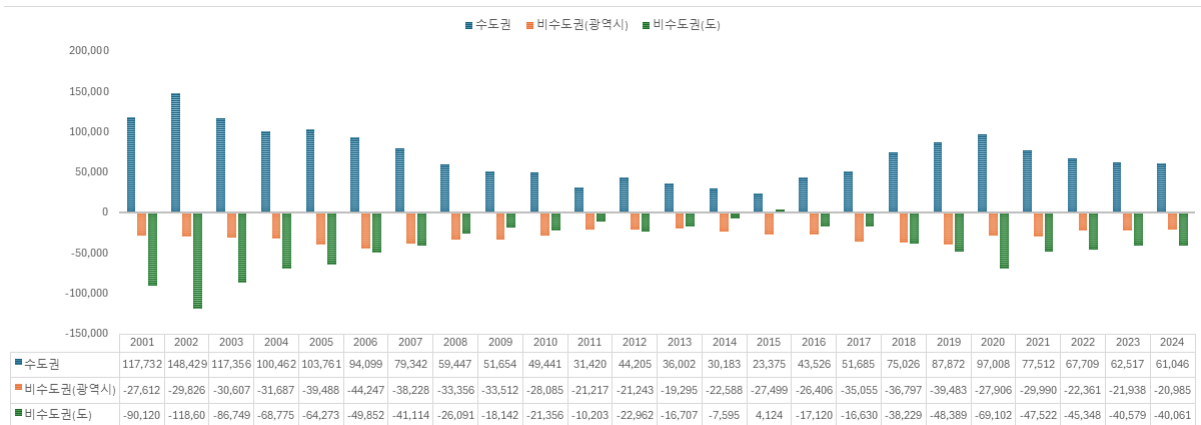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18〉 생산가능인구 추계(2022년~2050년)

한국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도시들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창조적 일자리가 부족하여 인재 유출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산업 쇠퇴가 인구 유출의 시작점이 되며, 청년층 유출 방지가 비수도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실제 청년들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비수도권(광역시·도) 청년은 61,046명이었다. 2001년부터 년 평균 71,284명의 청년이 매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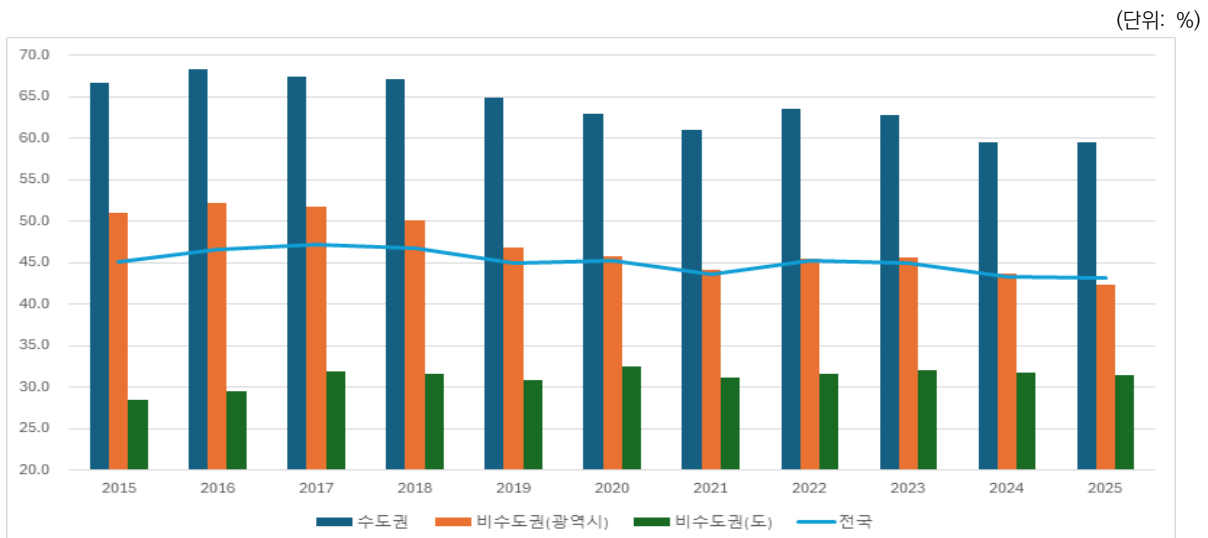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2-19〉 청년순이동 현황(19~39세)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인구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총인구 감소와 동시에 고령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의 고령화가 가속화된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 도시의 생산력과 혁신 역량을 크게 저하시킨다. 고령화는 도시의 활력과 창조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생산력 상실과 사회적 부양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청년들이 떠난 자리에는 고령 인구가 남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동적 균형이 무너지고, 소비 패턴과 서비스 수요도 크게 변한다.

이 단계의 핵심 시사점은 고령화로 인한 도시 활력 저하가 복지 중심 지출로 이어져 도시 쇠퇴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낮고 자립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수도권은 2015년 67%에서 2025년 60%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도 지역은 28~31%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어 약 30%포인트의 큰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구조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 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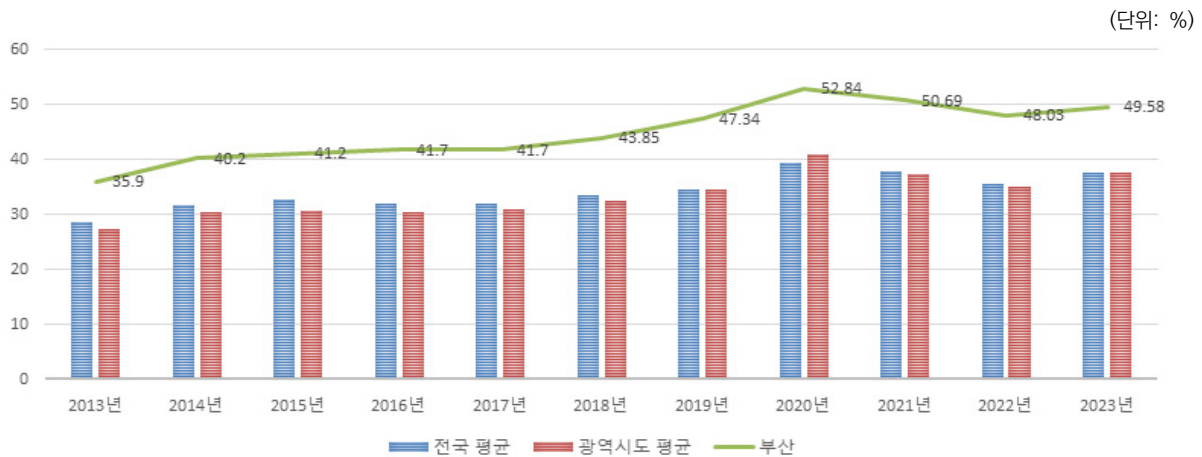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그림 2-20〉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 비교(2015년~2025년)

구형수(2023)의 경로모형 분석에 따르면, 도시의 재정 상태는 세수 감소보다 재정 지출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지출의 급증이다. 의료, 돌봄, 사회보장 등 고령화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8.7%에서 2023년 37.51%로 증가했다. 그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인 부산은 2013년 35.9%에서 2023년 49.58%로 증가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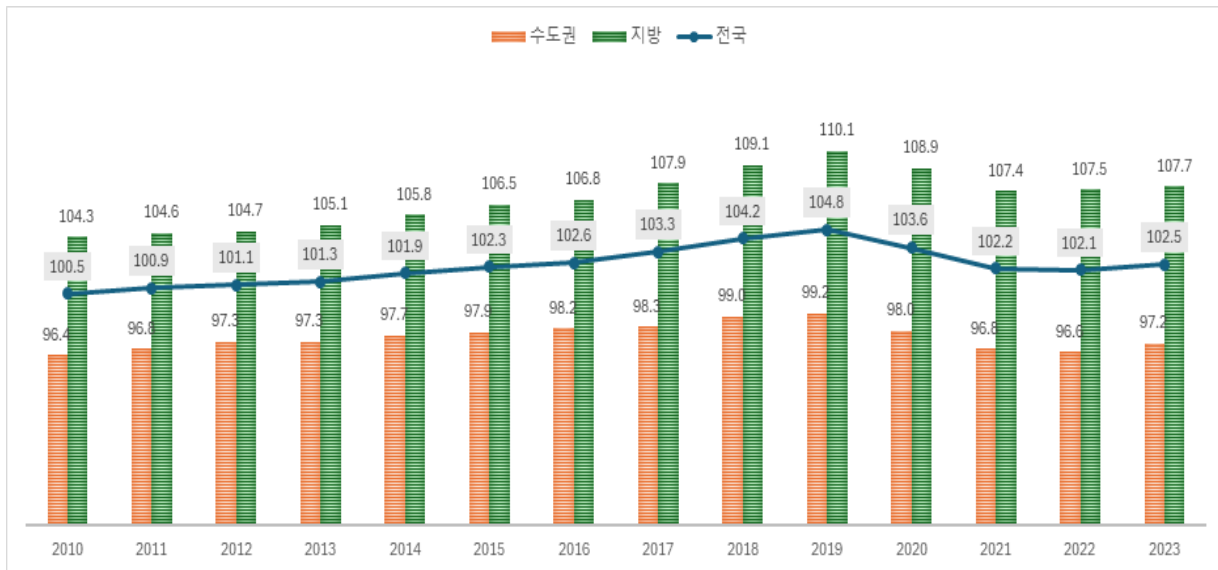
〈그림 2-21〉 사회복지비 비율(2013년~2023년)

둘째, 유희 부동산과 공공시설의 관리 및 철거 비용 증가이다.

유희 부동산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심화된다. 특히 인구감소와 유출이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위축된다. KDI는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2030년 전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Cho et al., 2015; 조만·송인호 외, 2015).

통계청 장래인구에 따르면 2070년 총인구는 3,800만 명 내외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비중이 46%대까지 상승하는 반면 15~64세 비중은 45%대까지 하락한다. 이는 세대별 주택 수요 축소와 고령 가구 순공급 전환 확대를 동반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중소도시 수요 위축이 두드러진다(통계청, 2021; OECD, 2022). 국토부(2025)는 2025년 2월 기준 전국 신규 미분양

23,722가구 중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준공 후 ‘악성 미분양’ 26,716가구 중 83.5%가 지방에 집중된다. 상반기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39.6% 감소하여 2~3년 후 입주량 급감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국토교통부, 2025; Maeil Business, 202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2-22〉 주택보급률(2010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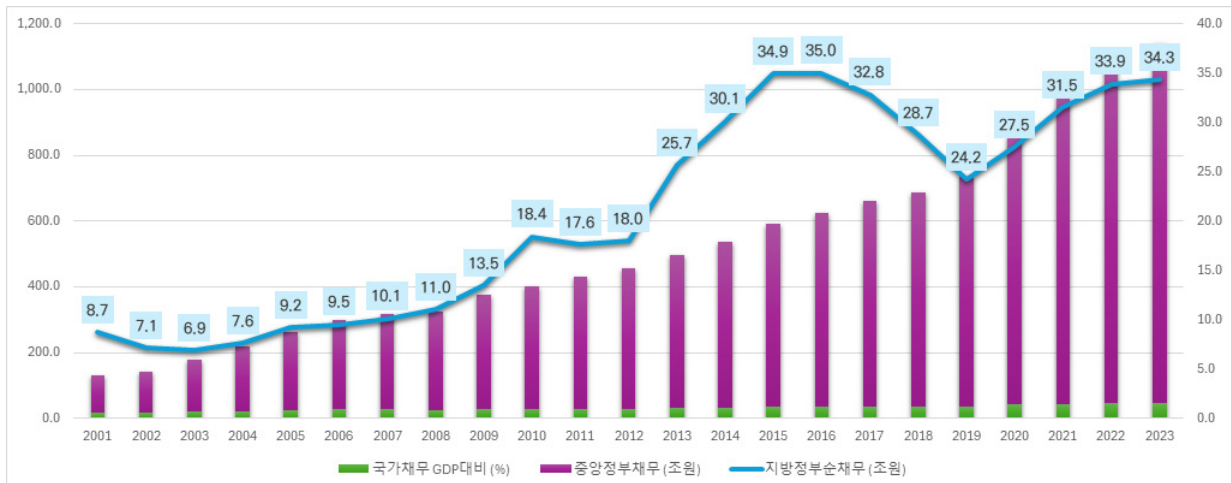
유휴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로,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존에 건설된 물리적 인프라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 유지·관리 비용은 줄지 않는다. 특히 한국처럼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과도하게 확장된 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광범위한 물리적 인프라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 단계의 시사점은 도시 재정 위기가 필수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도시 매력도 감소와 악순환 심화 단계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주민세, 소득세, 재산세 수입이 연쇄적으로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급격히 하락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에 따르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 재정의 자체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지역 기업의 매출 감소와 폐업이 이어지면 법인세 수입마저 줄어들어,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할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반면, 지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축소사회에서는 젊은 인구가 빠져나

가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져 연금, 의료, 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비용이 급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임곤(2020)은 고령화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전력망 등 도시 기반 시설은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계속 유지·관리해야 하므로, 1인당 서비스 제공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현정(2024)은 인구가 급감한 지역일수록 의료 및 교통 지원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단위 비용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수입은 줄어 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방채 발행이지만,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채무 상환 부담으로 인해 추가 재정 조달이 어려워진다(박성문, 2021).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그림 2-23〉 국가채무(2001년~2023년)

궁극적으로 이러한 재정 위기는 공공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킨다. 교육 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 시설이 폐쇄되며, 대중교통 서비스가 줄어들고, 문화·체육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고, 그 결과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촉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교육, 의료, 복지, 치안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추가적인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다.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질 저하는 특히 젊은 세대와 중산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 자녀를 둔 가정이 떠나게 되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해지면 중장년층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는

이주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과 저소득층만 남게 되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 결국 지역 경제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은 결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 지원 확대라는 형태로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구형수, 2017).

〈표 2-6〉 축소사회로의 전환 단계별 주요변화와 내용

구분	주요변화	내용	시사점
1단계	일자리 감소와 생산가능인구 유출	도시 기반 산업 쇠퇴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청년층의 다른 도시 유출을 유발	산업 쇠퇴가 인구 유출의 시작점이 되며, 청년층 유출 방지가 도시 재생의 핵심 과제
2단계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청년층 유출로 인한 총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비율 증가가 도시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생산력 상실과 사회적 부담 부담 증가	고령화는 도시 활력 저하와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도시 쇠퇴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
3단계	재정적 악화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외에도, 유흥 부동산 관리·철거 비용과 고령 인구 복지 지출 증가로 재정 지출 부담 증가로 인프라 유지 비용은 감소하지 않아 비효율 심화	도시 재정 위기는 필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도시 경쟁력 약화와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
4단계	도시 매력도 감소와 악순환 심화	재정 악화로 공공서비스 질 저하, 삶의 질 하락이 추가 인구 유출을 유발하는 악순환 발생	지속적 인구 유출과 경제 쇠퇴가 도시 공동화 현상 가속화, 도시 회복을 위한 정책적 혁신 필요

자료: 구형수(202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3) 수정 및 보완

2) 부산의 축소사회 진단 (1) 축소사회 진단 지표

축소사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축소사회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축소사회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적 쇠퇴, 사회적 관계망 해체, 공간적 환경 악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Martinez-Fernandez et al., 2012; Wiechmann & Pallagst, 2012),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지표 체계가 필요하다.

축소사회 진단을 위한 기존 연구에서는 인구지표와 경제지표를 결합하여 축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이정은·박윤미·김민주, 2023). 본 연구에서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부산시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 차원의 축소 현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구성하였다.

① 인구 축소

축소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인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를 측정한다.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20년간의 장기 추세를 통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김상민(2023)은 인구의 최고점 대비 -0.15% 미만일 경우 축소로 진단하였고, Turok & Mykhnenko(2007)은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은 해당 지역 인구의 최고점 대비 현재 인구의 감소 비율을 측정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25% 이상 감소 시 심각한 축소 상태로 분류하였다.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23%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복지 수요 급증과 생산성 저하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통계청, 2024).

소멸위험지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지표로,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단계로 진단한다(이상호, 2018). 이 지표는 가임기 여성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율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인당 평생 출생아수를 나타내며, 1.3명 미만일 경우 초저출산으로 분류된다(이소영, 2019).

자연증가율은 출생과 사망의 차이를 통해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파악하며,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자연감소 상태로 진단한다.

② 경제적 축소

경제적 축소 진단지표는 지역 경제의 활력과 고용 기반의 변화를 측정한다. 사업체수 변화율은 지역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업체의 증감을 통해 경제적 활력을 평가한다. 이정은 등(2023)은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정점 대비 5% 이상 감소할 경우 경제적 쇠퇴로 진단하였다(이정은·박윤미·김민주, 2023).

경제활동인구 변화율과 고용률은 지역의 노동시장 활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OECD 국제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통계청, 2025).

청년고용률은 15-29세 연령층의 고용 상황을 나타내며, 미래 경제활동인구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속적 감소는 산업기반의 약화를 의미하며, 지역 경제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③ 사회적 축소

사회적 축소 진단지표는 사회 관계의 약화와 공동체 해체 현상을 측정한다. 1인가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는 전통적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고립 위험의 증가를 나타내며, 축소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변화이다(강민경, 2024).

청년 순이동률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순유출을 통해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특히 20-39세 가임기 여성의 이동은 소멸위험지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혼인건수의 지속적 감소는 가족 형성 기반의 약화를 보여주며,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소영, 2019).

④ 공간적 축소

공간적 축소 진단지표는 물리적 환경의 쇠퇴를 측정한다.

노후건축물 비율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로, 50% 이상일 경우 공간적 쇠퇴로 진단한다. 이는 도시 환경의 질적 저하와 주거 여건의 악화를 의미하며, 특히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빈집 비율의 증가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 공급 과잉과 도시 경관 악화를 나타내며, 지역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축소사회 진단을 위한 이러한 다차원적 지표 체계는 단순히 개별 지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인구, 경제, 사회, 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축소 현상의 상호작용과 복합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 지표들은 축소사회 현상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축소사회 진단 지표를 <표 2-6>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2-7〉 축소사회 진단 지표

영역	지표명	측정방법	축소 진단기준
인구 축소	연평균 인구변화율	20년간 연평균 증감률	-0.15% 미만
	정점 대비 인구감소율	인구정점 대비 현재 감소비율	25% 이상 감소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23% 이상
	소멸위험지수	20-39세 여성인구/65세이상인구	0.5 미만
	합계출산율	여성 1인당 평생 출생아수	1.3명 미만
	자연증가율	(출생-사망)/총인구×1000	음(-)의 값
경제적 축소	사업체수 변화율	10년간 사업체수 증감률	-5% 이상 감소
	경제활동인구 변화율	전년 대비 경제활동인구 증감	지속적 감소

영역	지표명	측정방법	축소 진단기준
	고용률	15-64세 취업자/15-64세인구×100	전국 평균 대비 하락
	청년고용률	15-29세 취업자/15-29세인구×100	지속적 하락
	제조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취업자/전체 취업자×100	지속적 감소
사회적 축소	1인가구 비율	1인가구/총가구×100	급속한 증가
	청년 순이동률	청년 전입-전출/청년인구×100	지속적 순유출
	혼인건수 변화율	전년 대비 혼인건수 증감률	지속적 감소
공간적 축소	노후건축물 비율	20년 이상 건축물/전체 건축물×100	50% 이상
	빈집 비율	빈집수/총주택수×100	증가 추세

자료: 이정은·박윤미·김민주(2023), 김상민(2023), 이상호(2018)의 연구를 종합하여 재구성

(2) 부산지역 축소사회 실태

① 인구학적 축소의 심화

부산시의 인구학적 축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부산시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통계청, 2024), 2024년 현재 326만 명으로 약 62만 명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6.0%에 달한다. 이는 축소사회 진단기준인 25% 감소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나,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연평균 인구변화율은 2020~2024년 기간 동안 약 -0.7%를 기록하여, 축소 진단기준인 -0.15%보다 4.7배나 빠른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KOSIS, 2024).

부산시의 고령화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에 달해 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4). 이는 국가 전체의 고령화 속도를 앞서는 것으로, 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멸위험지수가 0.490으로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이다(이상호, 2024). 이는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가 36만 8,879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76만 명으로 2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 또한 극심하다.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통계청, 2024). 이는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은 물론,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3년부터 자연증가율이 음수로 전환되어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이다(KOSIS, 2024). 이는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없다면 인구 감소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표 2-8〉 부산광역시 주요 연령대별·권역별 인구증감 현황(2019년 대비 2024년 기준)

(단위: 명)

권역	0~6세	7~12세	13~18세	19~34세	35~64세	65세+	전체
동부산	-17,720	-3,147	-2,442	-20,530	-43,716	44,788	-42767
서부산	-19,037	-2,589	-2,676	-34,058	-51,524	51,953	-57931
원도심	-3,252	-1,369	-1,916	-7,389	-24,449	14,083	-24292
중부산	-11,487	-924	-2,409	-16,355	-40,707	50,990	-20892
소계	-51,496	-8,029	-9,443	-78,332	-160,396	161,814	-145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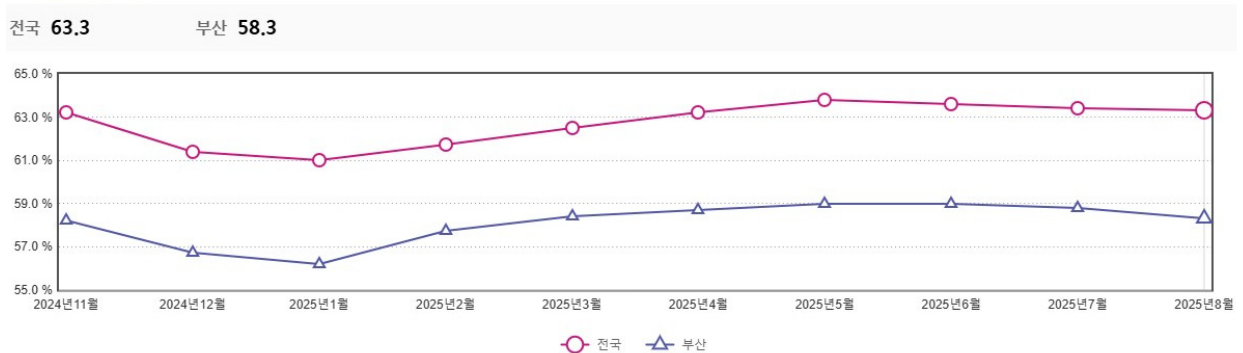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② 경제적 기반의 축소

부산시의 고용시장은 지속적인 축소 압력을 받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172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5천명(0.3%) 감소하였으며, 이는 노동력 공급 기반의 악화를 의미한다(통계청, 2025). 고용률은 56.7%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하였고, 15-64세 기준 고용률도 67.0%에 머물러 있다. 반면 실업률은 4.3%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하여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2024년 12월 165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명(0.9%) 감소하였다(통계청, 2025).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24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3만 1천명(14.4%) 증가하여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3만 9천명(2.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감소를 보였다. 특히 건설업에서 1만 6천명(11.0%) 감소,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2만 3천명(5.7%)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기반이 악화되고 있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32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 9천명(8.0%) 감소하였고, 이 중 자영업자가 2만 6천명(8.0%) 감소하여 자영업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통계청, 2025). 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1만 3천명(1.0%)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가 5만 5천명(15.6%)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가 6만 3천명(6.9%) 증가하여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일자리 수의 감소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4〉 분기별 고용률 변화(부산시-전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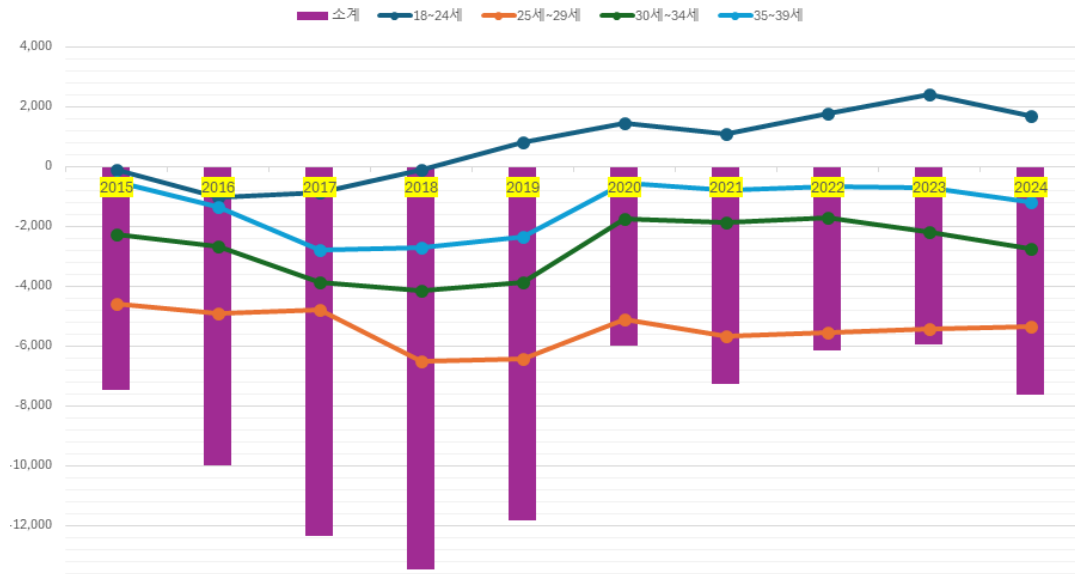
③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부산시의 사회적 축소는 가구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고립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1인가구는 2015년 9.1만 가구에서 2021년 13.3만 가구로 46.2%나 급증하였다(KOSIS, 2022). 이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와 함께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를 의미한다. 1인가구의 급증은 축소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적 변화 중 하나로,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결속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강민경, 2024).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부산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지속적인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에서 순유출 규모가 크다(KOSIS, 2024). 이러한 청년층, 특히 가임기 여성의 지속적인 유출은 앞서 언급한 소멸위험지수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혼인과 가족 형성 기반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혼인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24).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족 및 공동체 가치의 약화는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결속력의 저하와 공동체 기반의 해체를 의미한다(이소영, 201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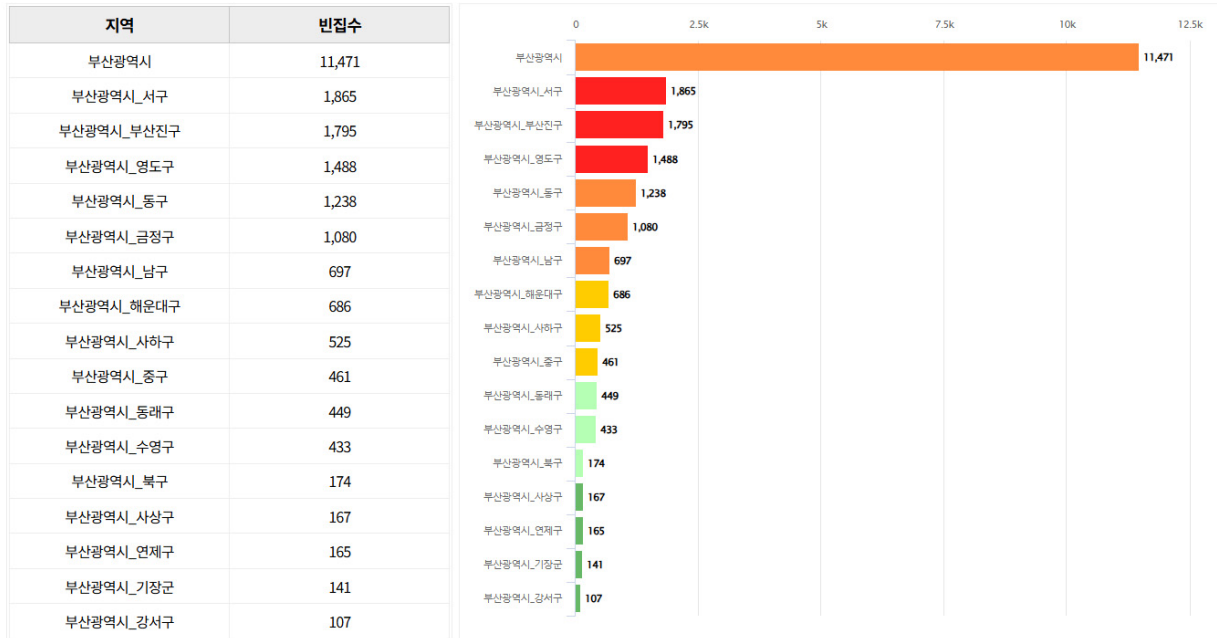
〈그림 2-25〉 부산시 청년인구의 순유출입 규모(단위, 명) (2015년~2024년)

④ 공간적 환경의 쇠퇴

부산시의 공간적 축소는 건축물의 노후화와 도시공간의 쇠퇴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 관련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의 노후건축물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도시 환경의 질적 저하와 주거 여건의 악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후한 주거 환경은 특히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도 심각하다. 중구 등 원도심 지역에서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거주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낮과 밤의 인구 편차가 극심하다. 이는 지역 상권의 활력 저하와 함께 도시 중심부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빈집과 공실의 증가는 이러한 공간적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도시 경관의 악화와 함께 지역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공간적 쇠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후하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증가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활력이 저하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빈집예(<https://binzibe.kr/binzibe/binzibplatform/statisticInfo/binzibStatus.do>)

〈그림 2-26〉 부산시 구·군별 빈집현황(2024년 기준)

3) 소결

부산시의 축소사회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모든 영역에서 축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표에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연평균 인구변화율 -0.7%는 진단기준 -0.15%의 4.7배에 달하는 급속한 축소를 보여주며, 소멸위험지수 0.490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이상호, 2024). 합계출산율 0.75명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보여준다(통계청, 2024).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률 56.7%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지역 경제 기반의 축소를 나타낸다(통계청, 2025). 사회적 측면에서는 1인가구 비율의 급증(46.2%)과 청년층의 지속적인 순유출이 사회구조의 해체와 인재 유출을 보여준다(KOSIS, 2022). 공간적 측면에서는 노후건축물의 집중과 원도심 공동화가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인 쇠퇴를 나타낸다.

부산시의 축소사회 현상은 단순히 개별 지표의 악화가 아니라, 인구, 경제, 사회, 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축소의 특성을 보인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의 활력 저하를 가져온다. 경제적 기회의 감소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촉진하며,

이는 다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Martinez-Fernandez et al., 2012).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는 1인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출산과 가족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킨다(이소영, 2019). 공간적 쇠퇴는 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려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켜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산시가 단순한 인구 감소 단계를 넘어서 구조적인 축소사회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국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과 확대'를 전제로 한 정책에서 '적응과 재생'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축소'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Wiechmann & Pallagst, 2012). 축소사회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부문의 대중적 대응보다는 인구, 경제, 사회, 공간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서, 주거, 일자리, 사회적 관계, 문화적 환경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축소사회 대응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축소사회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이를 새로운 도시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제3장. 축소사회, 부산지역 청년정책의 과제

1. 축소사회, 청년정책의 중요성

1) 축소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청년문제

(1) 경제 및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심화

①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 하락과 잠재적 경제 손실

축소사회는 단순히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불균형을 동반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중간 숙련 일자리가 해체되면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이 있는 특정 지역으로 순유입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2025년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는 797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특정 지역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통계청, 2025; 한국노동연구원, 2022).

이러한 경쟁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교육·훈련으로, 다시 구직으로 이동하는 '요요이행(Yoyo Transition)'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불안정하고 비연속적인 경력 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김기원, 2022).

실제 첫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임금이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요셉, 2017). 이처럼 청년기에 겪는 고용·소득 충격은 단순히 초기 손실로 끝나지 않고, 건강, 가족 형성, 사회 인식 등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년 빈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경로 의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이 36.8%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 '경제적 지원'이 꼽혔다(국무조정실, 2024).

수도권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경쟁이 격화되고, 비수도권지역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찾기 어려워 다시금 수도권으로 기업이 이동하면서 청년들의 전반적인 구직 경쟁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② 청년 주거비 부담 가중과 자산 형성 기회 박탈

청년 인구의 지역 집중 현상은 주거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모인 청년들은 한정된 주택 공급으로 인해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직면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청년 가구는 부모와 함께 사는 ‘부모 동거 가구’, 홀로 사는 ‘청년 단독 가구’, 배우자와 함께 사는 ‘청년 부부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의 형태도 상이하다(박미선, 2022). 2020년 기준 청년 단독 가구의 27.0%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과부담 가구’에 속하며, 이는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박미선, 2022). 반면, 청년 부부 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 비율이 2018년 48.4%에서 2020년 42.3%로 하락하고 전세 비율이 증가하는 등, 자가 마련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박미선, 2022). 이처럼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정상 가족’ 모델을 상정했던 기존의 정책 관성이 놓치고 있는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높은 주거비 지출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월세와 전세금 부담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여력을 감소시키고, 대출 부담을 가중시켜 실질적인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자산 빈곤’ 상태로 이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은 단순한 물질적 어려움을 넘어, 청년들의 정서적·정신적 건강에도 광범위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경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이는 감정적인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 충동과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최은정, 정영훈, 2018; 국무조정실, 2024). 결국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막고, 주거 상향 이동 경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불안정까지 야기하는 복합적 위기를 형성한다.

③ 청년창업 위축과 새로운 혁신동력 상실

인구구조 변화는 청년 창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기술기반 창업기업은 67.6만 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2.0%를 차지했으며, 청년 창업기업은 67.5만 개로 전체의 22.0%를 차지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하지만 청년 창업의 질적 측면은 취약하다. 국내 창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기반 창업(33.3%)’보다 ‘영세 자영업종(52.3%)’이 많은 생계형

창업 구조를 보이며, 특히 20대 청년 창업의 '5년 생존율'은 15.9%로 가장 낮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외, 2021). 이는 청년들이 실패 시 재기 불능의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 창업이 성장 초기 단계에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현상이 청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청년층 실업률은 8%로 전체 실업률의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법인 설립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생계형 창업과 기술형 창업 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서울연구원, 2025). 결국 청년 창업 생태계의 위축은 단순한 규모 감소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고,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청년들이 오히려 불안정한 생계형 일자리에 내몰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2) 사회문화적 문제

① 사회적 고립의 심화와 정신건강 악화

축소사회 전환은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2024년 국무조정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및 청년 중 고립·은둔 청소년은 5,484명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2024). 이들 중 상당수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3.1%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꼈고, 59.5%가 절망적인 기분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62.5%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무조정실, 2024).

청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고립을 시작하게 된 주요 이유로 '친구 등 대인관계 어려움(65.5%)' 외에 '학업 관련 어려움(48.1%)'과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36.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국무조정실, 2024).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청년들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뢰가 청년의 우울감과 관련이 있으며(박채림, 한창근, 2023), 친구와의 빈번한 교류가 자살 사고 위험을

낮춘다는 사실을 실증했다(임지혜, 김재우, 2020). 결국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 중 66.2%가 자녀의 상태를 모르거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년 본인 역시 자신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국무조정실, 2024). 이처럼 가족 내에서도 인지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위기는 조기에 발견되거나 공식적인 지원 체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숨겨진 위기’로 남게 되고,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교육 및 경력개발 가회의 격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기관 구조조정은 청년들의 전문 교육 기회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학교 수와 학생 등록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단기대학 등 교육 인프라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조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 부문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이혜영,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1). 이러한 교육 인프라의 축소는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재교육 접근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 기회의 양적 축소뿐만 아니라, 청년 집단 내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지만, 저학력, 저소득, 지방 거주 청년일수록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회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현재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는 도시 거주 대졸자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기술과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국 축소사회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평생학습 기회마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③ 문화적 다양성 감소

지역의 혁신과 활력은 인구, 기술, 문화 다양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인구축소, 고령화와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지역은 문화 표현과 창작 집단 기반이 약화되어

도시활성화 자원을 고갈시킨다(정한울 외, 2017). OECD(2022)는 농촌이나 중소도시권은 청년이나 이민자 유입이 제한되고, 그 결과 문화·서비스 산업 생산성 격차가 누적되며, 지역 정체성 수렴과 문화 공급 획일화로 ‘머무르고 싶고, 돌아오고 싶고, 오고 싶은’ 동기가 쇠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청년 인구 유출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2015년 33곳에 불과했던 소멸위험 시군구는 2021년 106곳으로 급증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30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은 전체 순유입량을 초과하기 시작했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중간 숙련 일자리가 해체된 결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구 유출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의 부족은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고, 결국 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아닌 ‘탈출해야 할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3) 정치적 문제

① 청년들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

인구감소·고령화의 지역 불균형은 선거구 획정·지방의회 의석 수 변화를 통해 정치적 대표성 지형을 변화시킨다(김감영, 2021). 한국은 2040년대 중반 이후 모든 광역권에서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17개 중 16개 시·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 대비 감소(부산 -45.6%, 대구 -43.4%)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공업도시권 유권자 기반 축소가 불가피하다(OECD, 2022).

축소사회 전환은 인구 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청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1년의 42.5% 수준인 164만 9천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는 195.8% 증가한 586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통계청, 2024).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치적 권력의 무게추를 고령층으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부동산 문제, 고용 불안, 학자금 대출과 같이 청년들의 삶을 크게 좌우하는 정책들이 정치적 의제에서 소외되거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② 고착된 정책 패러다임과 미래지향적 논의 부족

기성세대 정책의 패러다임이 고착화되면서 축소사회 전환에 따른 청년들의 새로운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 정책은 과거 고속 성장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의 경로, 즉 학업을 마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선형적 생애주기를 상정하고 있다(김기원, 2022). 이로 인해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삶의 경로와 ‘다차원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청년 정책들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총괄적인 전달 체계가 부재하고, 복잡한 기준과 지역 간 편차로 인해 실제 수혜자가 극히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이는 정책이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청년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수준에 그치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의 삶의 경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들의 실질적 자유와 역량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인지적(Youth-Aware)’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③ 노년부양 부담 증가와 세대 간 갈등의 전면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 간 ‘부담 불균형’을 전면화하고 있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72년 104.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통계청, 2024). 이러한 구조적 부담은 세대 간의 심리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갈등의 심각성은 국민적 인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리서치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4년 연속 80%를 넘는 수치이다(한국리서치, 2025). 특히 현재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61%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비관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리서치, 2025). 세대 갈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외에 ‘청년층의 고용 및 주거 문제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을 지목하는 비중이 41%에 달했다(한국리서치, 2025). 이는 세대 갈등이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왜 내가 더 내야 하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단절시켜 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 축소사회 전환에 따른 주요 사회문제 발생과정

구분	분야	주요 영향 발생 과정
경제	노동력 부족	생산가능인구 급감 → 성장잠재력 저하
	부동산	인구·수요 감소 → 지방 미분양·가격 불안
	지방재정	세입 감소·복지 지출 증가 → 재정 악화
사회·문화	사회적 고립	청년·고령층 고립 심화 → 정신건강 악화
	교육	학령인구 감소 → 학교·교원 구조조정 불가피
	문화 다양성	인구·이민 감소 → 지역 문화 기반 약화
정치	대표성 악화	농산·공업도시 의석 축소, 수도권 집중
	정책 우선순위	팽창정책 한계 → 축소사회 적응 필요
	지역 갈등	수도권-지방 격차 확대 → 갈등 고착화

출처: 저자 직접 작성

2) 축소사회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주요역할

(1) 축소사회, 청년정책의 중요성

축소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청년정책은 단순한 사회정책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도 전국 7개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정책은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과거 ‘청년정책 = 일자리정책’의 단순 등식에서 벗어나 교육, 주거, 참여, 복지·문화 등 포괄적 정책 체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이 직면하는 문제가 단순한 구직난을 넘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차원적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김문길, 2022).

축소사회에서 청년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축소된 정치적 영향력은 청년들의 사회적 발언권을 제약하여 정책적 소외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축소사회에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와 정책소외 해소

축소사회에서 청년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청년층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로 직결된다. 청년층은 전체 유권자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고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책결정은 인구 비중이 높고 정치참여가 활발한 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가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투표율이 높아지는 반면,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로 인해 ‘실버민주주의(silver democracy)’의 도래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 20대 국회에서 2030세대 국회의원은 300명 중 3명(1%)에 불과하여 청년세대의 심각한 정치적 과소 대표성이 확인되었다(이현출, 2018).

이러한 정치적 대표성 결핍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주변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간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 중간 투표자도 고령화하게 되어 연금·의료·복지 등 고령층 선호 정책에 대한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교육비 등 청년층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지출은 감소할 개연성이 높다(이현출, 2018).

김기현(2022)은 현재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청년의 실질적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 확대에 제한적임을 지적하며, 관 주도의 형식적 참여에서 벗어나 청년 중심의 참여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이러한 정치적 소외를 해소하고 청년의 대표성과 사회적 협상력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② 청년의 삶의 질 개선과 기본권 보장

청년기는 취업, 주거독립, 가족형성 등 인생의 주요 이행이 집중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삶의 질은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존의 소득·분배·빈곤률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는 청년층의 실질적 생활여건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 독립을 늦추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기존 분배지표가 청년층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김유빈 외, 2019).

변금선·이혜림(2023)은 청년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불안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청년 내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고 있다. 축소사회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획득이나 가족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능력 및 노력 외에 가족 배경이나 젠더 등 통제 불가능한 조건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책방향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의식을 따르고 있어 청년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소득 불안정성이 청년 생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생활 불안정성이 다시 경제 및 사회활동의 단절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지원범위를 일자리 부문에서 생활영역 전반으로 확장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김유빈 외, 2019). 따라서 청년정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적정한 주거, 건강한 생활환경 등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불평등과 미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청년에게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③ 청년의 사회참여 역량 강화와 자기결정권 확대

축소사회에서 청년은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김기현(2022)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면서, 정책 대상자인 청년을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봉·나경태(2022)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참여,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신호주·김민호(2024)의 제주지역 청년참여기구 활동 분석 연구는 청년들이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며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정책은 사회적 서비스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자발적 지역 활동 등을 통해 청년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 주체성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④ 미래 불확실성 시대의 안정성과 기회 확대

축소사회는 기존의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청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권주안(2021)은 청년 1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을 분석하면서, 좁은 주거 공간, 주거 확보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이 청년들의 일상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금선·이혜림(2023)은 2020년 한국의 19~34세 청년 중 85.7%가 우리 사회를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30~34세와 25~29세 여성 청년들의 불안 수준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청년이 인지하는 사회적 불안의 근저에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부모의 재산 수준이 낮을수록 불안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아 세대 간 불평등의 대물림이 청년의 미래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축소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제약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정책은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다양한 경로로 삶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혁신역량 개발과 포괄적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사회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축소사회에서 청년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① 지역정착을 위한 포괄적 생태계 구축 지원

축소사회에서 청년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포괄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 주거, 문화,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 전반의 인프라를 청년 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경력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며 정착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불안감 해소

청년의 85.7%가 사회적 불안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정책은 강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실업급여, 주거지원, 의료보장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함께 청년 특화형 지원제도의 도입을 포함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제적·정서적 위험을 예방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청년 니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③ 정치적 대표성 확보와 참여 거버넌스 혁신

청년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정책은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성 확보와 참여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청년 비례대표제 도입, 청년 할당제 확대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청년정책은 관 주도의 형식적 참여에서 벗어나 청년이 중심이 되는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청년 예산의 일부를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한 사업에 배당하는 참여예산제 확대,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부터 중앙정부까지 이어지는 청년 대표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

④ 기본권 보장과 기회 균등 실현

청년정책은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성별, 지역, 가족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여성, 지역 청년, 저소득층 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채용 성차별 해소 대책의 지속적 모니터링,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가족 배경에 따른 불평등 완화 정책 등을 통해 모든 청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부산시 청년정책 현황

1) 부산시 청년정책 추진기반 현황

(1) 조직

① 부산시 청년정책 전담조직

부산시 청년정책 전담조직의 변화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과 투자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과정을 보여준다. 2015년 7월 청년취업지원팀 2명으로 시작된 청년정책 전담조직은 약 10년간 조직 규모와 위상 모두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초기 단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조직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 2015년 신성장산업국 산하 청년취업지원팀으로 출발하여, 2017년 청년정책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업무 범위 확장을 시사했다. 2018년에는 7명 규모의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승격되어 시민행복추진본부 소속이 되면서 조직의 위상이 높아졌다.

2019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확대기에 접어들었다. 2019년 청년희망정책 과로 독립 과 단위 조직이 되면서 19명으로 확대되었고, 소속도 성장전략국으로 이동했다. 이는 청년정책이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도시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021년에는 32명 규모로 추가 확대되면서 디지털경제혁신실 산하 청년산학 창업구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경제와 창업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최근인 2023년과 2025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34명으로 최대 규모에 달했던 조직이 2025년에는 29명으로 조정되면서 청년정책과로 명칭이 단순화되고 청년산학구 소속이 되었다. 이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부산시 청년정책 전담조직은 2명에서 29명으로 약 14배 확대되었으며,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승격되어 조직적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소속 부서의 변화를 통해 청년정책이 취업 지원 중심에서 도시 성장 전략, 디지털 혁신, 산학협력에 이르기까지 정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변화는 부산시가 청년정책을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2〉 부산시 청년정책 전담조직 변화

시기	조직명	인원	소속
2015.7	청년취업지원팀	2명	신성장사업국-창업지원과
2017.7	청년정책팀	2명	시장-시장혁신본부-비전추진단
2018.8	청년정책담당관	7명	시민행복추진본부
2019.8	청년희망정책과	19명	성장전략국
2021.6	청년희망정책과	32명	디지털경제혁신실-청년산학창업국
2023.5	청년희망정책과	34명	디지털경제혁신실-청년산학국
2025.8	청년정책과	29명	청년산학국

출처: 저자 직접 작성

② 중간지원조직

부산광역시는 2017년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공간을 확대 조성해왔다.

청년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청년정책 전달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부산광역시 청년센터는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3월 「청년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체계가 도입되면서 부산시는 조례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광역 거점 청년센터로서의 기능을 본격화하였다.

부산청년센터는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에 위치하며 총 면적 약 800㎡ 이상의 대규모 복합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청년 교류공간, 회의실 등 다양한 기능별 공간으로 구성되어 청년들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부산시는 촘촘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마련을 위하여 구군별 청년공간을 청년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16개 구·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청년 거점공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부산시 전역에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부산시 청년공간은 본청 운영 7개소, 구·군 운영 21개소로 구분(2024년 12월 기준)되며 기능별로는 활동 거점형(창업·문화예술 특화), 공유공간형(커뮤니티·네트워킹), 서비스제공형(정책·정보·상담)으로 분류된다.

〈표 3-3〉 부산시 청년거점공간

구분	센터명칭	설치시기	소재지	운영방식 (운영기관)	설치목적
부산시	부산 청년센터	2021.04.	(중구)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출연금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의 사회참여, 정책소통, 교류·활동 지원 및 청년정책 거점 공간 구축
중 구	중구 청년센터 청년마루	2021.10.	(중구) 중구 법수길 61	직접운영 (중구청)	청년 오픈카페, 공유오피스, 네트워킹 및 소통 지원
서 구	무튼304	2022.01.	(서구) 서구 구덕로 304(3층)	공공위탁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청년 커뮤니티, 네트워킹, 진로·취업, 활동지원
동 구	이바구컴퍼니	2021.09.	(동구) 동구 초량중로 29, 603호	직접운영 (동구청)	청년 창업·입주·네트워킹 및 지역사회 연계
영도구	청년희망 플랫폼 다:이룸	2022.01.	(영도구) 영도구 변영길 8, 3층	민간위탁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청년 커뮤니티, 자기계발, 지역연계 활동 지원
부산진구	부산진구 청년플랫폼 청년flex	2020.06.	(부산진구) 부산진구 전포대로 지하 181, 도시철도 전포역	직접운영 (부산진구청)	청년 창업·입주·네트워킹 및 지역사회 연계
동래구	동래구 청년어울림센터	2024.10.	(동래구) 동래구 금강로 129	민간위탁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 창업·입주·네트워킹 및 자기계발 지원
남 구	청년 창조발전소 고고씽 JOB	2017.12	(남구) 남구 용소로46번길 7	직접운영 (남구청)	청년 창업·취업·커뮤니티 활성화 및 자립 지원
북 구	청년아트 스테이션	2020.07.	(북구) 북구 학사로 135	직접운영 (북구청)	청년 문화예술·창업·커뮤니티 활동 지원
해운대구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2020.09.	(해운대구)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	민간위탁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청년 창업·취업·교류 및 지역 청년자립 지원
사하구	사하 청년 창업지원센터	2020.12.	(사하구) 사하구 하신중앙로 324, 2층	직접운영 (사하구청)	청년 창업·입주·네트워킹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금정구	청년 창조발전소 꿈터+	2017.12.	(금정구) 금정구 금정로 63-1	민간위탁 (주스마트파머)	청년 창업·창작·교류 및 지역 청년자립 기반 조성
연제구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2021.07.	(연제구)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7, 동해선거제역 2층	민간위탁 (주스마트소셜)	청년 창업·입주·커뮤니티 및 네트워킹 지원
수영구	광안 엑스투지 (X to Z) 청년 커뮤니 티센터	2025.03.	(수영구) 수영구 수영로 607번길 17	직접운영 (수영구청)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거점 공간 구축
사상구	사상청년브릿지	2025.04.	(사상구) 사상구 광장로 19	직접운영 (사상구청)	거점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 및 상호 교류 활성화

출처: 손현일 외(2024)

(2) 청년정책 예산

① 부산시 청년정책 관련 예산 변화 추이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급격한 증가세와 함께 분야별 우선순위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준다.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은 2019년 973억원에서 2025년 4,146억원으로 6년

간 4.3배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약 3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부산시가 청년정책에 비교적 높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예산이 부산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3%에서 시작하여 2023년 2.66%까지 상승한 후, 2024-2025년에는 2.2-2.3%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는 청년정책이 부산시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부산시의 청년예산 비중은 2.3%(2025년 기준)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상위권에 해당한다. 서울시(약 1.8%), 경기도(약 1.5%) 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부산시가 청년정책에 대한 비교적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부산시 전체 예산 중 청년 정책 예산 비중

연도	부산시 전체예산 (억원)	청년정책예산 (억원)	청년예산비중 (%)	전년대비 청년예산증감률(%)	비고
2019년	94,450	973	1.03	-	기준년도
2020년	114,958	1,212	1.05	+24.6	코로나19 대응
2021년	122,774	1,819	1.48	+50.1	청년정책 확대
2022년	126,472	2,637	2.08	+45.0	대폭 확대
2023년	124,949	3,322	2.66	+26.0	지속 증가
2024년	171,431	3,843	2.24	+15.7	비중 소폭 감소
2025년	180,164	4,146	2.30	+7.9	안정화 단계

이러한 예산 확대 과정에서 분야별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일자리 분야의 비중 축소와 교육 분야의 급부상이다. 일자리 분야는 2020년 전체 예산의 63.1%를 차지하는 압도적 영역이었으나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5년에는 12.8%까지 감소했다. 절대 금액도 61,441백만원에서 53,069백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준다.

반면 교육 분야는 2020년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것에서 2021년 14.2%로 등장한 후 급속히 확장되어 2024년 57.9%, 2025년 57.6%로 청년정책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최대 분야로 성장했다. 이는 부산시가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청년 인재 양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주거 분야는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2020년 29.6%에서 시작하여 2022-2023년에는 37.4%, 34.7%로 일시적 최대 분야가 되었다가 2024년 8.0%로 급락 후 2025년 17.7%로 회복되는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급변을

반복했다. 복지·문화 분야는 2020년 6.8%에서 2023년 22.5%까지 꾸준히 확대되다가 2025년 11.2%로 조정되어 상대적 안정성을 보였다. 참여·권리 분야는 2020년 1.6%에서 2025년 0.7%로 지속 축소되며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 청년정책은 예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함께 일자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완료했다. 이는 청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서 장기적 역량 개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며, 청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표 3-5〉 부산시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의 변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비중 (%)	예산액	비중 (%)	예산액	비중 (%)	예산액	비중 (%)	예산액	비중 (%)	예산액	비중 (%)
총 계	97,383	100.0	82,533	100.0	195,936	100.0	223,350	100.0	311,927	100.0	414,606	100.0
일자리	61,441	63.1	44,958	54.5	61,774	31.5	44,116	19.8	50,768	16.3	53,069	12.8
주거	28,803	29.6	19,085	23.1	73,255	37.4	77,636	34.7	24,836	8.0	73,269	17.7
교육	-	-	11,707	14.2	28,935	14.8	47,674	21.3	180,669	57.9	238,708	57.6
복지·문화	6,624	6.8	4,200	5.1	28,475	14.5	50,193	22.5	52,508	16.8	46,484	11.2
참여·권리	1,513	1.6	2,581	3.1	3,497	1.8	3,731	1.7	3,146	1.0	3,076	0.7

출처: 부산시 청년정책시행계획

② 청년정책 예산 중 시비의 비중

부산시 청년정책의 재정 구조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분야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체 청년정책 예산이 973억원에서 4,146억원으로 4.3배 증가하였다.

〈표 3-6〉 부산시 청년 정책 중 부산시 자체 예산 비중

분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합계	총예산	97,383	82,533	195,936	223,350	311,927	414,606
	국비	38,650	32,819	107,461	129,912	185,814	275,794
	시비	49,074	44,580	86,072	89,732	113,230	121,820
	기타 ¹⁾	9,659	5,134	2,403	3,706	12,883	16,964
	시비비중	50.4%	54.0%	43.9%	40.2%	36.3%	29.4%
일자리	총예산	61,441	44,958	61,774	44,116	50,768	53,069
	국비	17,941	17,438	28,373	18,762	26,750	24,001
	시비	34,531	23,920	33,308	23,779	21,882	24,841
	기타 ¹⁾	8,969	3,600	93	1,575	2,136	4,227
	시비비중	56.2%	53.2%	53.9%	53.9%	43.1%	46.8%

분야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거	총예산	28,803	19,085	73,255	77,636	24,836	73,269
	국비	20,631	12,623	55,072	61,510	1,493	43,003
	시비	8,102	6,462	16,300	15,220	23,127	27,559
	기타'	70	0	1,883	906	216	2,707
	시비비중	28.1%	33.9%	22.3%	19.6%	93.1%	37.6%
교육	총예산	-	11,707	28,935	47,674	180,669	238,708
	국비	-	2,648	12,941	28,606	134,275	184,022
	시비	-	7,527	15,994	19,068	37,385	45,956
	기타'	-	1,532	0	0	9,009	8,731
	시비비중	-	64.3%	55.3%	40.0%	20.7%	19.3%
복지·문화	총예산	6,624	4,200	28,475	50,193	52,508	46,484
	국비	78	0	10,735	20,784	23,096	24,768
	시비	4,928	4,200	17,313	28,484	28,410	20,738
	기타'	1,618	0	427	925	1,002	979
	시비비중	74.4%	100.0%	60.8%	56.7%	54.1%	44.6%
참여·권리	총예산	1,513	2,581	3,497	3,731	3,146	3,076
	국비	0	110	340	250	200	0
	시비	1,513	2,471	3,157	3,181	2,426	2,756
	기타'	0	0	0	300	520	320
	시비비중	100.0%	95.7%	90.3%	85.3%	77.1%	89.6%

출처: 부산시 청년정책시행계획

청년정책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각 사업 분야별 재정 투입이 크게 달라졌다. 일자리 분야는 부산시 재정 부담이 가장 안정적인 영역이다.

시비 비중이 2020년 56.2%에서 2025년 46.8%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4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시 고유 정책임을 보여준다. 반면 주거 분야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2023년까지 시비 비중이 19.6%로 낮았으나 2024년 93.1%로 급등했다가 2025년 37.6%로 조정되어 정책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육 분야는 정반대 양상이다. 2021년 도입 당시 시비 비중 64.3%에서 2025년 19.3%까지 급감하여 국가 주도 정책으로 완전히 변화했다. 이는 청년 교육이 국가 전략적 투자 영역으로 인식되면서 중앙정부 역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복지·문화와 참여·권리 분야는 지방정부 고유 사무 특성을 보인다. 복지·문화는 44.6%~100%, 참여·권리는 77.1%~100%의 높은 시비 비중을 지속 유지하고 있어 지역 밀착형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전체적으로는 부산시 재정 비중이 2020년 50.4%에서 2025년 29.4%로 감소한 반면, 국비 비중은 39.6%에서 66.6%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청년정책

이 지방 사무에서 국가 정책으로 위상이 변화하면서도, 교육·주거 등 국가 주도 분야와 참여·복지 등 지방 주도 분야로 이원화된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청년정책 관련 조례

부산광역시시는 2013년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2017년 「청년 기본 조례」, 2022년 군복무 청년과 청년농업인을 위한 조례, 2023년 청년주거 지원 조례, 2024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까지 총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단계적으로 제정하며 청년정책의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일자리 중심에서 출발해 기본 틀을 완성한 뒤 특수 집단과 주거·창업 분야로 지원 영역을 세분화함으로써 청년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청년 정신건강과 고독사 예방,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교류 지원 영역에서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 특히 2023년 부산시 고독사 발생 건수가 전국 3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1위라는 심각한 상황에도 청년 특화 조례가 없으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와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면서도 청년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국제 물류 허브라는 지역 특성을 활용해 청년의 해외진출과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고독사 예방 조례」와 「청년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청년 정신건강 상담·치료 지원,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교육과 디지털 창업 역량 강화 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조례」와 「청년 문화예술 활동 특별 지원 조례」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부산의 국제 물류 허브 특성을 활용해 해외교류·진출 지원을, 후자는 부산국제영화제·부산비엔날레 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7개 조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부산이 청년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할 수 있다.

〈표 3-7〉 부산시 청년 관련 주요 조례 추진 현황

시기	조례명	주요 목적
2013.05.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문화 육성 및 새로운 문화 창조
2013.12.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2017.05.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자립기반 마련
2022.01.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군복무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안전망 확보
2022.02.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 및 미래농업인 육성
2023.04.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청년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
2024.12.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창업가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5)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

부산시 청년정책 거버넌스는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현재 부산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라는 이중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심의형 거버넌스 기구로, 총 30명(당연직 2명, 위촉직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위원 중 75%인 21명이 청년으로 구성되어 청년 당사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청년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담당한다. 2018년 제1기 청년위원회로 시작하여 현재 제3기를 운영 중이며, 2024년 위원을 30명으로 확대 개편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2에 근거한 실행형 거버넌스로, 75명의 부산 거주·활동 청년들이 참여하여 5개 분과(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복지, 정책홍보)를 통해 직접적인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1년 임기로 운영되며, 분과 속의 과정을 통한 정책제안 및 캠페인, 공론장 등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시는 총 315개 위원회 중 201개 위원회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지정(63.8%)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30% 이상, 일반 위원회는 10% 이상 청년을 의무 위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청년참여 위원회를 더욱 확대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다.

각 거버넌스의 주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7년 8개 분과 62명으로 출범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제1기 부산청년위원회가 3개 분과 67명으로 구성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적 틀을 다졌다. 2019년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인원을 116명으로 확대해 시정 전 분야의 정책을 발굴·제안·토론하는 능동적 거버넌스로 진화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주요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제2기 청년위원회 출범으로 청년 참여의 양적·질적 성장이 이어졌다. 2021년에는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고, 부산 청년센터가 자갈치시장 인근에 개소되어 청년 주도의 정책아카데미·연구 프로젝트·정책실험실·지역탐색·거버넌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중간지원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22년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박형준 시장과 서국보 시의원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전문가 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정책 심의와 대상자 의견수렴을 담당 중이며, 2024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5대 분야 59개 사업에 1조 9,0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산시는 청년정책 거버넌스를 8년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청년 참여 확대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큼 성숙한 참여형 모델을 구축했다

〈표 3-8〉 부산시 청년 관련 주요 거버넌스

구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근거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2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목적	•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 •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 • 청년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청년 주도의 정책결정을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주요 기능 및 역할	• 분과 속의 과정을 통한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캠페인, 공론장 등의 프로젝트 기획·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제안 • 청년정책 발굴 및 정책의제 제안 • 청년공간 알림 활동	• 청년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청년정책 심의 •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심의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심의 •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방안 심의 •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실행력 제고
구성	• 총 75명(부산시 거주·활동 청년) • 연령: 18~39세(2025년 1.1. 기준) • 자격: 부산시가 거주지, 대학 또는 직장 소재지 • 5개 분과: 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복지, 정책홍보	• 총 30명(당연직 2명, 위촉직 28명) • 청년 21명(위촉위원의 75%) • 여성 12명(위촉위원의 42%) • 청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
임기	• 1년(2025년 2월 ~ 12월) • 매년 새로 모집 및 구성	• 당연직: 재임기간 • 위촉직: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주요 활동	• 분과회의 및 운영위원회 참석 • 정책아카데미, 워크숍, 정책간담회 참여	• 정기회의(연 2회) 및 수시회의 • 청년 기본계획 심의

구분	부산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네트워킹 데이 및 포럼 개최 • 현장방문 및 정책 모니터링 • 정책발표회 및 정책제안회 • 성과공유회 및 프로젝트 활동	•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 • 정책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민관 협의체 운영
운영 특징	• 실행형 거버넌스: 직접 정책 제안 및 실행 • 현장 중심: 청년 당사자들의 실제 경험 반영 • 분과별 전문화: 영역별 심화 활동 • 프로젝트 기반: 구체적 결과물 산출	• 심의형 거버넌스: 정책 심의 및 조정 • 전문성 기반: 전문가와 청년의 협력 • 정책 총괄: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 판단 • 제도적 안정성: 법적 근거가 명확한 공식기구
발전 과정	• 2019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2025년: 5개 분과 체계로 운영	• 2018년 4월: 제1기 청년위원회 구성 • 2020년 4월: 제2기 출범 • 2021년 7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 • 2022년 8월: 제3기 출범 • 2024년 3월: 위원 확대 개편(30명)

출처: 부산시 내부자료

2) 부산시 주요 청년정책 현황

(1) 부산시 청년정책기본계획

①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정

부산시 청년정책은 2017년 5월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2020년 8월,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부산시의 청년정책 방향성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초기의 제1기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의 기준과 통일되도록 수정되었다.

원래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에 포함되었던 세부 과제들은 2021년부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분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고, 청년정책의 보편적 기준을 수용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시는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청년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참여형 정책 수립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1차 계획의 성과분석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청년들의 삶과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표 3-9〉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 연혁

구분	계획기간	주요 배경	수립과정
제1차 기본계획	2019-2023	-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비 - 지역 청년인구 감소 대응 필요성 부각	2018년 수립 착수 - 청년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2019년 계획 확정
제2차 기본계획	2024-2028	1차 계획 성과평가 반영 - 포스트 코로나 청년정책 패러다임 변화 - 청년 생활인구 개념 도입	2023년 수립 착수 - 청년패널조사 결과 반영 2024년 3월 발표

②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19-2023)

제1기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를 근거로 2019년 수립되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비전으로 청년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탐색, 참여, 자립, 안정이라는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2019년 7월 제시된 ‘민선 7기 청년정책 로드맵’과 2020년 2월 4일 제정, 동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법률 제16956호)」의 영향으로 초기의 계획에서 다소 변화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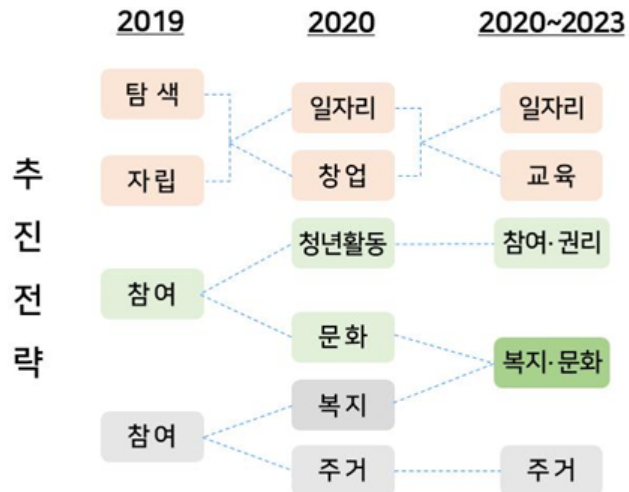


자료: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2023)

〈그림 3-1〉 부산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시작된 2019년 시행계획은 ‘탐색’, ‘참여’, ‘자립’, ‘안정’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시행계획은 제1기 기본계획의 원형에 청년정책 로드맵이 반영된 것으로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청년활동’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이에 2021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부산광역시, 2024).



자료: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2023)

〈그림 3-2〉 부산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추진전략의 변화 과정

특히 2022년에는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하는 도시 부산’을 목표로 ‘일자리 (Good job)’, ‘주거·생활(Good life)’, ‘문화·활동(Good play)’, ‘참여·권리 (Good voice)’의 4개 분야 25개 중점 과제로 구성된 ‘청년G대’라는 브랜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정책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제1기 기본계획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도하는 ‘도약기’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 제1기 기본계획 기간 동안 부산 청년정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2020년 87개 사업(921억 원)에서 2023년에는 121개 사업(2,234억 원)으로 사업 수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 손현일(2023)

〈그림 3-3〉 부산시 2023년 청년정책 중점과제

이는 제1기 청년정책기본계획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도하는 '도약기'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청년패널조사 및 FGI에서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보인 점은 양적 확장과 정책 체감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청년정책이 고도화 되는 과정을 통해 핵심정책과 청년들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설계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험적 정책을 벗어나 정책 효과가 입증된 사업 중심의 핵심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안정기'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③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4-2028)

제2기 기본계획(2024-2028)은 제1기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책의 질적 전환인 '안정기'를 목표로 한다. 비전은 '즐겁게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G대 부산'이며,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핵심 추진 키워드는 '기회', '안정', '활력'이다.

제2기 계획은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의 5대 분야로 재편하고, 5년간 59개 사업에 총 1조 9,0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1기 계획의 121개 사업보다 사업 수를 대폭 줄여 핵심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년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통학, 통근, 교류 등으로 부산에 체류하는 청년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정량 목표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수립하였다. 2028년까지 청년 고용률 50% 달성과 청년 생활인구 1억 명 확충을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현재 1만 3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적 방향 전환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청년인구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도되었다. 부산시는 단순한 청년인구에 국한하지 않고 기본계획에서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눈여겨볼 지점이다. 기존의 부산시 청년정책이 부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면, 제2차 계획부터는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부산에 체류하는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 유입이 아닌 청년들이 부산을 '경험하고 체류하는' 도시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젊고 희망이 있는 **알기찬** 도시

정책목표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청년**G**대

3대 추진방향

- (기회)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할 여건 조성
(안정) 심리부터 주거환경까지 청년 삶의 안정 지원
(활력) 청년이 맘껏 끼를 발산하는 활력 공동체

5대 분야

일자리 창업

청년 취업지원체계 구축 및 창업 환경 조성

- 1 청년 일자리 확대를 정주 유도
- 2 청년과 지역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3 청년이 창업에 성공하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강화

- 1 청년 맞춤 공공주택 확대
-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3 청년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교육

교육과 취업의 탄탄한 연결 강화

- 1 지역 수요가 반영된 대학교육 혁신
- 2 교육-일자리 연계로 진로탐색 지원 강화
- 3 디지털 전환 및 문제해결형 교육기회 제공

문화 복지

청년 문화 콘텐츠 활성화 및 자산형성 지원

- 1 청년 문화향유 및 창작활동 기반 내실화
- 2 청년의 든든한 출발 지원

활력 참여 성장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활력 기반 마련

- 1 마음부터 건강한 일상까지 청년 활력 제고
- 2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3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위한 역량강화

청년 생활인구 확대 체계 구축

생활인구 중심으로 인구 대응 패러다임 전환, 체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자료: 부산광역시(2023),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그림 3-4〉 부산시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부산시는 2025년 청년G대 추진계획에서 ‘미스매치 ZERO’, ‘정책 체감도 UP’, ‘청년 참여 PLUS’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서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5년 청년정책 예산 4,146억원은 청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고 있으며, 특히 RISE사업을 청년예산(교육)으로 분류하여 지역인재의 부산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는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하던 생활인구에 대한 목표가 삭제되었다. 이는 생활인구 측정의 어려움,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효과성의 의문, 그리고 청년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생활인구라는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청년의 실질적 정착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25 청년G대 추진계획

“청년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도시 조성”

미스매치 ZERO

01

청년 일자리,
시작부터 성공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책 체감도 UP

02

청년의생활,
청년이 만족할 때까지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참여 PLUS

03

청년의 권리,
청년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청년G대 홈페이지(<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20>)

〈그림 3-5〉 2025년 청년G대 추진계획

(2) 부산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변화

① 정책 철학과 접근 방식의 전환

부산시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과 함께 성장’(2019-2023)에서 제2차 기본계획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2024-2028)로 넘어오면서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에서 도시 활력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예산 배분, 추진 방식의 혁신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 정주인구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는 부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관광·업무·학습·문화활동 등으로 부산을 생활 무대로 하는 모든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혁신적 접근이었다.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청년 생활인구 1억 명 확산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예산 배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1차 계획의 3년간 4,921억원에서 2차 계획은 5년간 1조 9,092억원으로 연평균 약 2.3배 증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러한 예산 확대는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질적 전환을 의미했다. 특히 1조 2천억원 규모의 창업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립 기반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② 통합형 정책 설계와 글로벌 확장 전략

1차 계획 시기의 개별 사업 위주 정책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차 계획에서는 통합형 패키지 모델을 도입했다. ‘청년 취업-주거 통합지원 서비스’나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등은 일자리·주거·교육·복지를 연계한 종합적 지원 체계로, 청년들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을 보여준다. 이는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되었다.

2차 계획에서는 K-POP·게임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청년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2024년 1만 3천명에서 2028년 3만 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는 부산을 아시아 청년 허브도시로 키우려는 비전의 구체적 실현이었다. 이는 청년정책의 범위를 국내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1차 계획에서 시작된 청년패널조사는 2차 계획에서 정책 설계와 성과관리의 핵심 도구로 발전했다. 청년 생활패턴 분석, 정책 체감도 조사, 정주 요인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1차 계획 시기 성과측정 체계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적 대응이었다.

③ 1차 계획의 성과 계승과 2차 계획의 발전적 과제 해결

1차 계획에서 시작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참여 거버넌스는 2차 계획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거쳤다. 청년위원회 참여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운영과 평가체계 도입 등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 정착이라는 1차 계획의 성과의 계승이었다.

1차 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전담조직 확대·청년센터 개소·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 정착, 청년 지원사업 확대·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 청년플랫폼 구축·홍보 강화로 정책 인지도 제고 등이 있었다.

그러나 청년인구 감소 추세 해소 미흡, 여전히 개별 사업 위주 정책 운영, 성과측정 체계 부족, 지역 특성 반영의 한계 등 과제도 명확히 드러났다. 2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청년 생활인구' 개념 도입, 예산 대폭 확대, 통합형 정책 패키지 구성,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 글로벌 청년정책 확장, 참여 거버넌스 실질화 등의 개선방안을 통해 1차 계획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극복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결국 부산시 청년정책의 1차에서 2차 계획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서 청년을 바라보는 관점, 정책 설계 방식, 예산 배분 철학, 성과 관리 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의미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표 3-10〉 제1차 vs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비교분석

구분	제1차 기본계획(2019-2023)	제2차 기본계획(2024-2028)	주요 변화
비전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	젊고 희망이 있는 활기찬 도시	청년 자체에 초점을 맞춘 비전
목표	청년 고용률 43.9%	청년 고용률 50%	정량적 목표 상향 조정
핵심 정책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생활인구 확산	생활인구 개념 도입
예산	약 4,921억원 (3년)	1조 9,092억원 (5년)	청년정책 예산 증액
사업방식	개별 사업 중심	패키지형 통합 지원	연계성 강화
정책 대상	18세~34세	18세~39세	조례개정에 따른 연령 상향

(3) 부산시 주요 청년정책의 변화 실태

① 부산시 청년정책 영역별 변화 추이

부산시 청년정책의 전체 사업 수는 2020년 87개에서 출발하여 2025년

95개로 소폭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121개로 최고점에 달했으나, 이후 사업 효율화와 통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일자리 분야는 부산시 청년정책의 핵심 축이었으나 그 비중이 크게 변화했다. 2020년 42개 사업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던 일자리 분야는 사업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2025년 26개로 조정되어 전체 사업 중 27.4%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수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는 정책 방향 전환을 반영한다.

주거 분야의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인 변화 패턴을 보였다. 7개에서 13개 사이의 범위에서 유지되며 전체 사업 중 10~15%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청년 주거 정책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준다.

교육 분야는 가장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분야로서 2021년 13개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4년 31개까지 급증했다가 2025년 26개로 조정되었다. 이는 부산시가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한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복지·문화 분야의 경우에는 정책의 수가 가장 큰 변동성을 나타냈다. 2020년 22개에서 2021년 16개로 감소했다가,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금 37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6개로 대폭 축소되어 사업 통합과 재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25년에는 19개로 소폭 증가하여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영역이지만 꾸준한 변화를 보였다. 2020년 13개에서 시작하여 2023년 22개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12개 수준으로 조정되어 전체 청년정책에서 10~1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체계 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20년의 6대 분야 체계(일자리, 창업, 문화, 청년활동, 주거, 복지)에서 2021년부터 5대 분야 체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업 분야는 일자리 분야로 통합되고, 청년활동 분야는 참여·권리 분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분야에서 사업 수가 대폭 확대되어 총 73개에서 121개로 증가했다. 이는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전체 사업 수를 98개로 조정하고, 2025년에는 95개로 더욱 체계화했다.

정책 집중도 측면에서 보면, 2020년에는 일자리 분야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는 분야별로 균형잡힌 투자가 이루어졌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교육과 일자리 분야가 각각 27%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발전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주거 안정, 복지 지원, 사회 참여 등 청년의 전 생애에 걸친 종합적 지원 체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1〉 부산시 청년정책 기본현황

분야	2020년 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일자리	42 ²⁾	21	27	26	27	26
주거	10	7	13	13	11	12
교육	-	13	24	23	31	26
복지·문화	22 ³⁾	16	37	37	16	19
참여·권리	13 ⁴⁾	16	20	22	13	12
총 계	87	73	121	121	98	95

출처: 부산시 청년정책시행계획

주1) 2020년은 6대 분야 체계(일자리, 창업, 문화, 청년활동, 주거, 복지)

주2) 일자리: 기존 일자리(28개) + 창업(14개) 통합

주3) 복지·문화: 문화(16개) + 복지(6개) 통합

주4) 참여·권리: 청년활동(13개)에서 명칭 변경

②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은 부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서 2021년 시행계획부터 2025년 시행계획까지 매년 빠짐없이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심층 상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2022년에는 2,447명에게 일자리 상담을 제공하고 602명의 취업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사업 ‘최우수’를 달성했다. 예산은 2021년 400백만원, 2022년 550백만원, 2023년 500백만원, 2024년 500백만원, 2025년 580백만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청년취업 정장 대여 서비스 지원’ 사업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청년들의 면접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1년 280백만원이었던 예산은 2024년 350백만원으로 증가하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 필수적인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시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은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9년 10백만원의 예산으로 82명 규모의 네트워크를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97백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사무국이 신설되는 등 조직적 기반을 강화했다. 2024년에는 250명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부산청년주간 운영’ 또한 청년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례 행사로, 2019년 200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2025년까지 꾸준히 200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부산시에서 중앙정부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③ 강화되는 정책: 확장성과 질적 발전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장 뚜렷하게 강화된 분야 중 하나이다. 2019년에는 ‘부산청년우리집 조성’을 통해 셰어하우스 12실을 공급하는 등 소규모 사업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부산형 행복주택’ 674호와 ‘청년 매입임대 주택’ 19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청년 대상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

이러한 정책적 강화는 2023년 시행계획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주거비 마련이 청년 채무 발생의 가장 큰 원인(42.9%)이라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정책은 단순한 주거비 경감을 넘어 2023년에는 ‘청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까지 정책 범위를 넓히며, 2025년에는 ‘1+평생 무한주택 공급 지원’과 ‘청년 이사비 지원’과 같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주거지원 패키지’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도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19년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청년부비론)’이 325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일하는 기쁨카드’와 같은 복지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2023년

에는 ‘부산청년희망신용센터’를 개소하고 ‘청년기쁨두배통장’ 출시하는 등 자산 형성 및 신용 회복을 위한 정책이 다각화되었다.

특히 ‘청년기쁨두배통장’ 2024년 11,762명이 지원하여 1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방증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청년들이 단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축소 및 재구조화되는 정책: 효율화·선택과 집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9년 287억원(63개 사업), 2022년 443억원(104개 사업) 규모로 추진된 핵심 일자리 정책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167억원(105개 사업)으로 예산이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52억원(85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축소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내부적인 반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2024년 시행계획은 이 사업의 한계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청년잡(JOB) 성장 프로젝트’를 신설하여, ‘실업 초기 청년 발굴’, ‘역량 강화’,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일자리 제공’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을 목표로 하는 ‘질적 지원’으로의 중대한 정책적 재구조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년 리빙랩 운영(2021년 190백만원, 2022년 150백만원, 2023년 100백만원, 2024년 100백만원, 2025년 200백만원), 청년 프로그램 지원(2021년 300백만원, 2022년 300백만원, 2023년 150백만원, 2024년 100백만원, 2025년 100백만원) 등은 여러 해에 걸쳐 예산이 축소되거나 변동이 심한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산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은 2021년 613백만원에서 2025년 800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개별 사업에 분산된 투자를 부산청년센터라는 광역 거점에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센터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정책 지원, 참여, 실험, 활동,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흡수하며 청년 거버넌스의 허브로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산 전역에 걸친 청년공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촘촘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들은 하나의 통합된 창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표 3-12〉 부산시 청년정책의 연도별 주요 변화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수	96개	87개	73개	121개	121개	98개	95개
총예산	920억원	973억원	825억원	1,959억원	2,233억원	3,119억원	4,146억원
전년대비 증감	-	+53억원 (+5.8%)	-148억원 (-15.2%)	+1,134억원 (+137.5%)	+274억원 (+14.0%)	+886억원 (+39.7%)	+1,027억원 (+32.9%)
청년연령	18~34세	18~34세	18~34세	18~34세	18~34세	18~39세	18~39세
청년인구	-	-	68.3만 명 (20.1%)	66.7만 명 (19.9%)	65만 명 (19.6%)	82만 명 (24.9%)	79만 명 (24.4%)
정책 추진 방향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청년주도 정책 추진 체계 확립	종합지원정책, 체감형 정책	촘촘한 청년정책, 실질적 체감 청년 희망 복원	청년이 자긍심을 갖고 꿈을 이루는 도시	청년 중심·체감·성장 3대 추진전략
핵심 키워드	- 청년 주체 - 맞춤형 정책 - 사회진출 단계별 지원	- 청년 주도 - 다양성 반영 - 시정참여 확대	- 청년 수요 기반 - 종합지원 - 자립·안정	- 체감도 - 실효성 - 참여 확대 - 코로나19 대응	- 체감형 - 청년 희망 - 실질적 - 촘촘한 지원	- 잠재력 - 가능성 - 실효성 - 선택과 집중	- 수요자 중심 - 체감형 - 성장 기회 - 동기 부여
주요 변화 사유	청년정책 체계 구축 원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단일화	청년사업 정비 (대상 50% 이상 기준)	대폭 확대 코로나19 대응 강화	예산 지속 증가 분야별 강화	효과성 중심 통합·정비 연령 확대	최대 규모 투자 전면적 강화
정책 성과	-	-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 우수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 우수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평가 우수기관	청년고용률 전국 평균 수준 달성 (목표 46%)

3) 부산 청년들의 정책 수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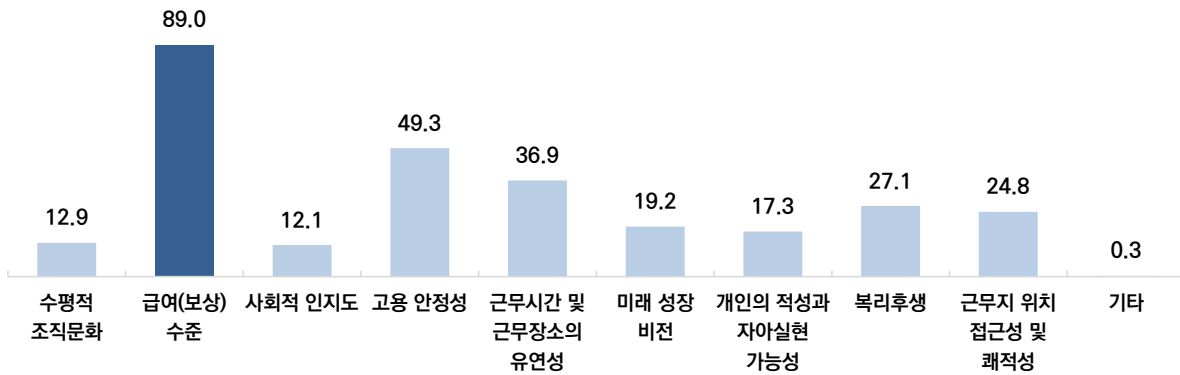
(1) 축소사회 부산 청년들이 직면한 과제

① 일자리 미스매치와 불안정성 심화

2024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급여(보상) 수준(89.0%)과 고용 안정성(49.3%)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높은 급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태도는 선호하는 기업 유형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부산

1) 2024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청년들은 공공기관(40.2%)과 대기업(28.6%)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7.6%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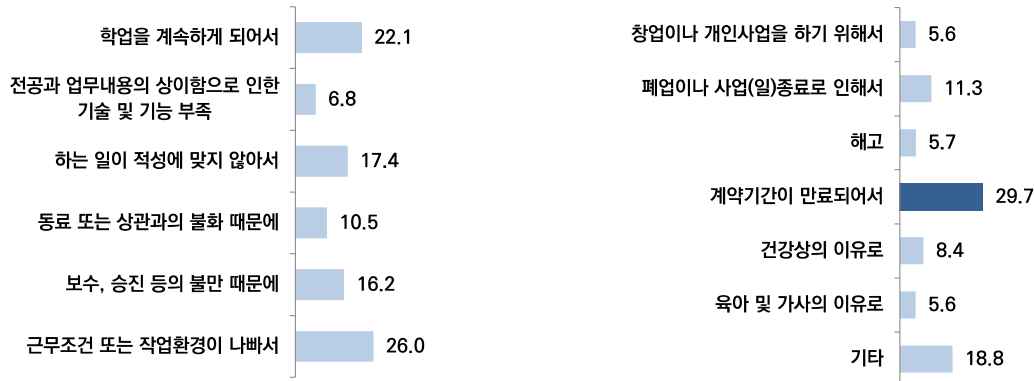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6〉 일자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이러한 현실 인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낮은 급여 수준(78.3%)과 복지, 노동환경 열악(7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급여와 고용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은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비용 지원(19.9%)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청년들은 경제적 여유 없이 구직 기간을 버티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개인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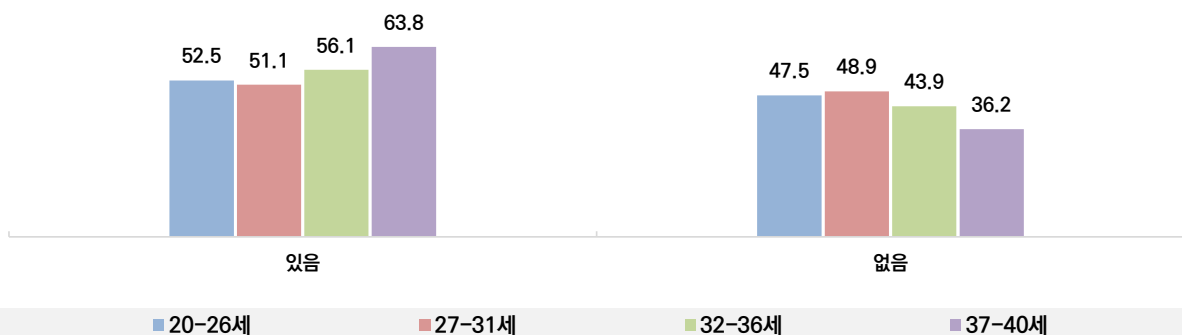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높은 이직률로도 연결된다.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년은 전체의 25.0%에 달하며, 특히 20-26세 청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 역시 계약기간 만료(29.7%)와 근무조건 또는 작업환경 악화(26.0%) 등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 중 41.8%가 향후 1년 내 이직 의사를 갖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압도적으로 더 나은 보수/복지(80.8%)를 위해서였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감수하면서라도 더 나은 경제적 조건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7〉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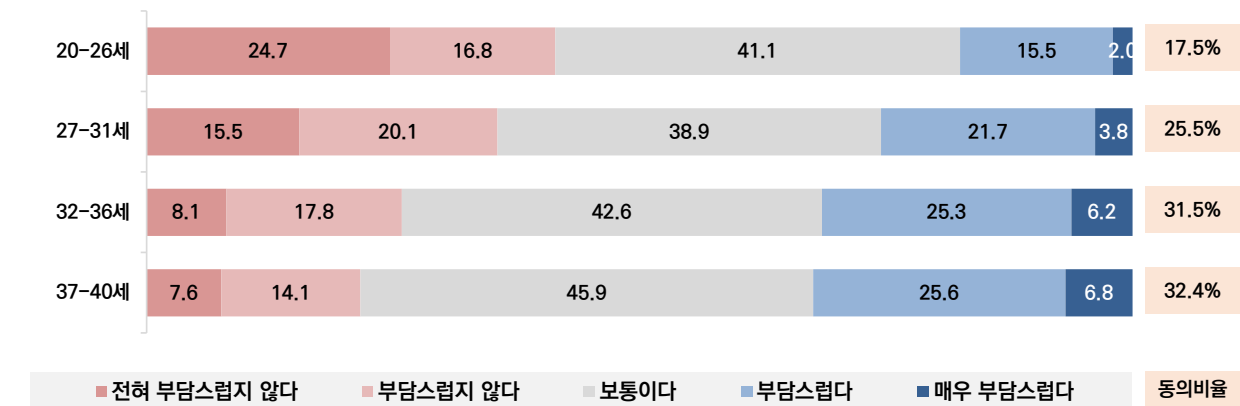
부산 청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청년의 55.6%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으며, 특히 37-40세 청년의 63.8%가 생활비 부족을 겪는다고 답했다. 청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20대에 국한되지 않고, 결혼, 출산, 주거 마련 등 생애주기적 지출이 가중되는 30대 후반에 더 심화되는 ‘성장의 덫’에 갇혀있음을 보여준다.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청년들은 주로 비상금 사용(49.0%) 또는 부모님에게 지원(32.6%)을 받아 해결하고 있었다. 특히 20-26세 청년 중 65.6%가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재테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하고 싶지만 여유자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4.4%에 달했다. 이는 단순히 청년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자산 형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최소한의 자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8〉 연령대 별 생활비 부족경험 비율

주거 문제 또한 청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체 청년의 26.8%가 현재 거주 중인 주거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 비율은 37-40세에서 32.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77.6%는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 형성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으나, 현실적인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청년 세대의 모순적인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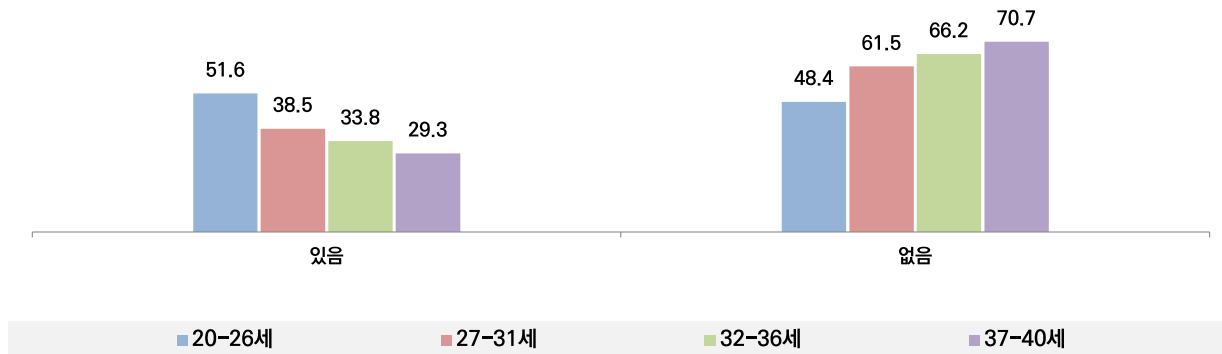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9〉 연령대 별 주거비 부담에 관한 동의비율

② 일자리로 인한 청년들의 탈부산과 수도권 집중

2024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의 지역 이탈 의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응답자의 38.2%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20-26세 청년층의 이탈 의향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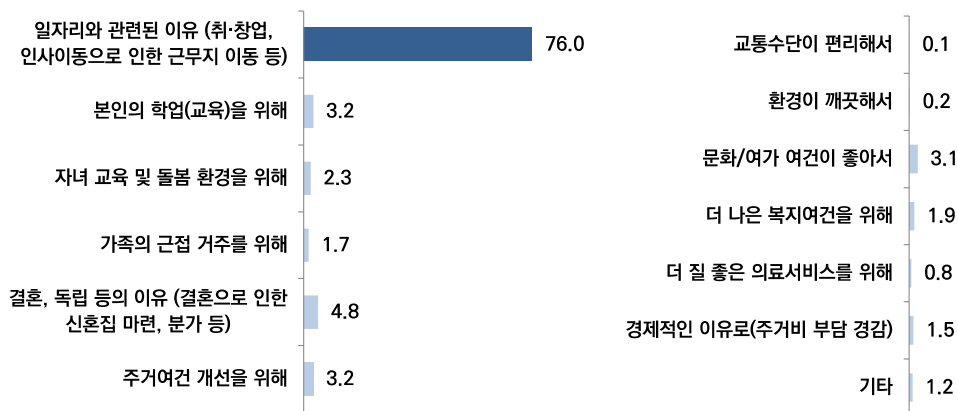
[Unit: %]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10〉 연령대별 부산을 떠날 의사

부산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76.0%)가 압도적이었다. 이는 청년들이 부산의 일자리 환경이 자신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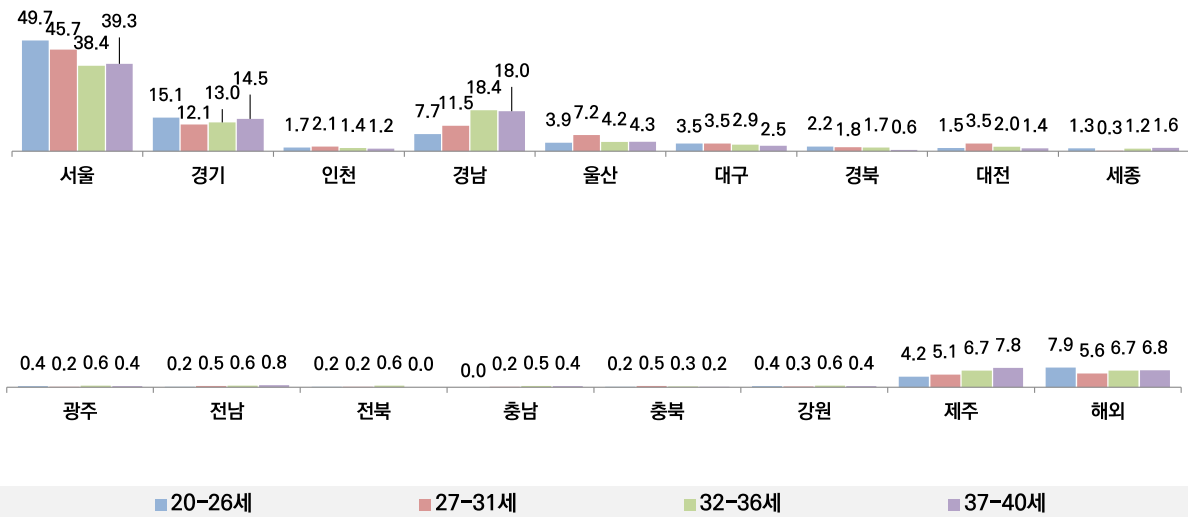
〈그림 3-11〉 부산을 떠나려는 주된 이유

부산을 떠날 시기에 대한 계획을 물었을 때, 1년~3년 이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응답자가 33.4%에 달했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음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한 채 잠재적 이탈 의향을 품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는 지역은 서울(43.3%)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13.9%)과 경기(13.6%)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산 청년들

이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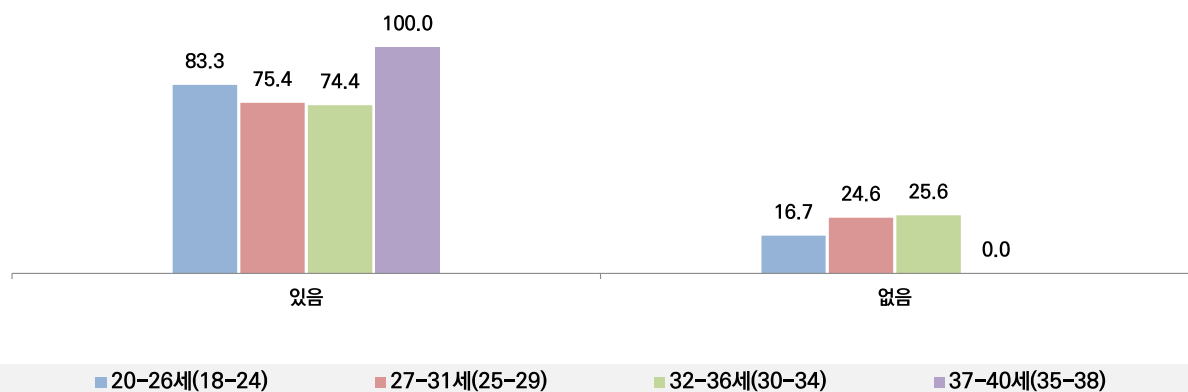
[Unit: %]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12〉 연령대별 이주 선호 지역

그러나 이 같은 이탈 의향이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만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청년들 중 78.6%가 부산으로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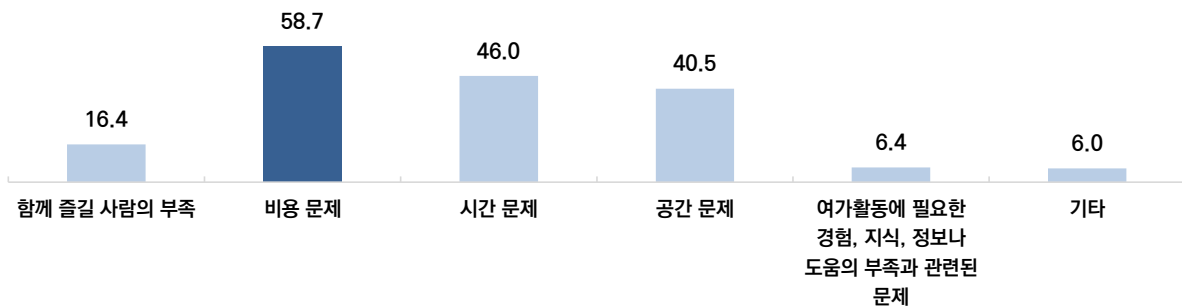
〈그림 3-13〉 연령대별 부산으로 돌아올 의사(부산을 떠난 청년들 대상)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정서적 연결고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 주며, 만약 부산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청년 인구 유출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 역시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38.1%)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일자리가 인구 이동의 가장 핵심적인 동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③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질

청년 세대의 가치관은 개인의 삶의 만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 이외에 자신만의 여가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응답에 69.1%가 동의했으며, 경제적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능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51.4%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단순히 개인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문화/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은 주된 이유로 비용 문제(58.7%)와 시간 문제(46.0%)가 꼽혔다. 이는 청년들이 여가와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그들의 가치관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n=487, Unit: %, 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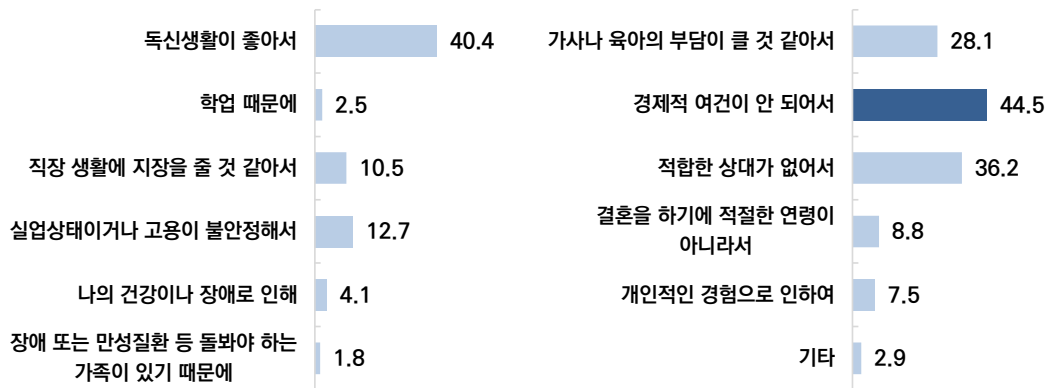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14〉 문화여가활동이 어려운 주된 이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태도 또한 복합적이다. 결혼 의향이 있는 청년은 60.5%였으나, 결혼할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서(44.5%)와 독신생활이 좋아서(40.4%)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개인적 선호와 더불어 경제적 현실이 결혼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임을 보여준다.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 역시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61.5%)는 응답이 높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6.8%)와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2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와 양육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절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15〉 결혼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

사회적 신뢰도 측면에서는 흥미로운 이중적 현상이 관찰된다. 청년들의 가족 신뢰도는 84.4%, 친구 신뢰도는 64.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웃 신뢰도(7.4%)나 처음 만난 낯선 사람 신뢰도(2.2%)는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공동체 전반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은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져, 축소사회에서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2) 부산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정책은?

① 정책 인지도와 접근성 격차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요 정책들의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청년 마음이음사업(70.9%), 직무 경험 프로그램(75.7%),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61.9%)에서 과반을 넘어섰다. 그나마 인지도가 높은 청년 디딤돌카드+(45.4%)와 청년 월세 지원(47.2%)도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실제 정책 참여율로 직결된다. 대부분의 정책에서 신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심지어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각각 10.3%와 20.6%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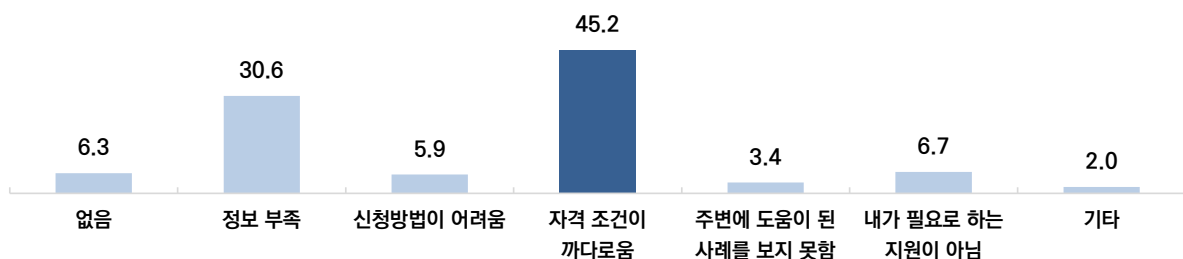
〈표 3-13〉 부산시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인지도

(단위: %)

구분	전혀 모름	신청한 적 없음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음
청년 디딤돌카드+	45.4	76.1	11.5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61.9	77.8	16.5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 '드림옷장'	51.7	82.3	4.1
청년 머물자리론 및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51.9	87.3	6.8
청년 월세 지원	47.2	82.3	10.3
직무(일) 경험 프로그램	75.7	86.8	8.5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48.2	71.4	20.6
청년 마음이음 사업	70.9	80.5	7.4
청년 공간 운영	61	63.4	-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청년들이 정책 지원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이러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준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움(45.2%)과 정보 부족(30.6%)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정보 자체의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정보를 접하더라도 복잡한 자격 조건 때문에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탐색을 포기하는 인지적 포기 현상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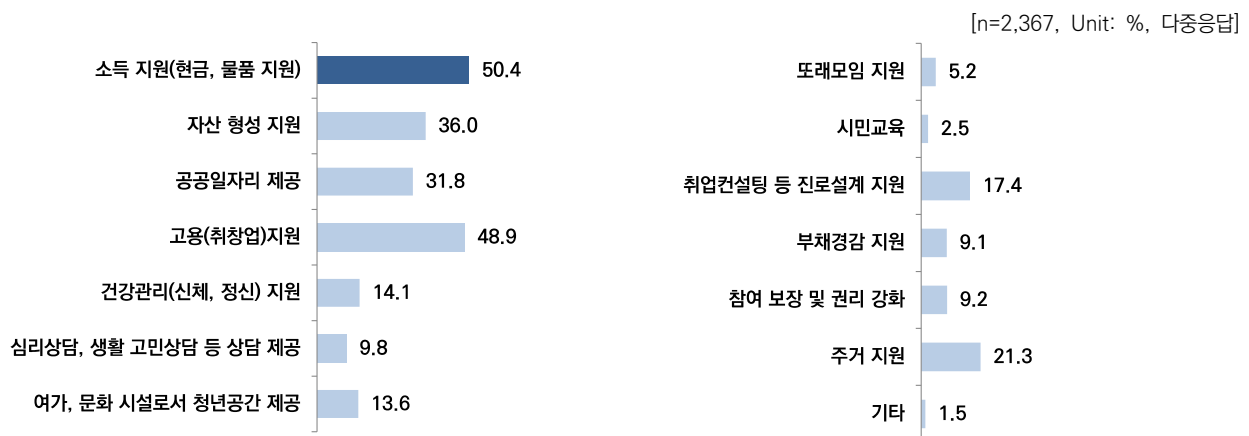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16〉 청년정책 지원 시 어려움 점

정책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청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와 자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정보 인지 경로를 조사한 결과, SNS 활동(53.7%)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 홍보 채널을 공공기관 웹사이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청년 친화적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② 청년 정책 수요 우선순위

청년들이 가장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는 소득 지원(50.4%), 고용(취창업)지원(48.9%), 자산 형성 지원(3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편적인 복지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자료: 2024 부산청년패널조사 보고서

〈그림 3-17〉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가 필요한 사업 분야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요구는 명확히 드러난다. 고용 및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44.7%)이 압도적인 1순위로 꼽혔다. 이는 청년들이 단기적인 구직 비용 지원이나 공공 일자리 확대보다는 민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 관련 정책에서는 청년의 재산형성 지원하는 저축상품 개발(52.9%)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여유자금이 없어서(54.4%) 포기했던 청년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의 정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 등)(26.8%)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현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 수요는 청년 세대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다. 청년 세대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연령대별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3. 축소사회, 부산시 청년정책의 과제

1) 부산시 청년정책의 주요성과

(1) 청년정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다. 2015년 신성장산업국 산하 2명의 청년취업지원팀으로 시작된 전담 조직은 2025년 기준 29명 규모의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로 약 14배 확대되었으며, 단순 팀 단위에서 독립 과 단위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이러한 조직 확장은 청년정책이 도시 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청년정책 예산 역시 정책 추진의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은 2019년 973억 원에서 2025년 4,146억 원으로 6년간 4.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부산시가 청년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과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5년 기준 부산시 전체 예산 중 청년정책 예산 비중은 2.3%로, 서울(1.8%)이나 경기(1.5%)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적 확장을 넘어선 질적 변화이다. 부산시 청년

정책 관련 예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전체 예산의 63.1%를 차지하던 일자리 분야의 비중이 2025년에는 12.8%로 급감했다. 반면 2020년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교육 분야는 2025년 전체 청년예산의 57.6%로 압도적인 최대 분야로 성장했다. 이러한 예산 배분 구조의 극적인 변화는 부산시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인재 양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로 정책 접근 방식을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표 3-14〉 부산시 청년정책 예산의 주요 변화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계	97,383	82,533	195,936	223,350	311,927
일자리	61,441(63.1%)	44,958(54.5%)	61,774(31.5%)	44,116(19.8%)	50,768(16.3%)
주거	28,803(29.6%)	19,085(23.1%)	73,255(37.4%)	77,636(34.7%)	24,836(8.0%)
교육	-	11,707(14.2%)	28,935(14.8%)	47,674(21.3%)	180,669(57.9%)
복지·문화	6,624(6.8%)	4,200(5.1%)	28,475(14.5%)	50,193(22.5%)	52,508(16.8%)
참여·권리	1,513(1.6%)	2,581(3.1%)	3,497(1.8%)	3,731(1.7%)	3,146(1.0%)

(2) 법적·제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산시는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2013년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2017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며 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군복무 청년, 청년농업인, 주거, 창업 분야로 지원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총 7개의 조례를 단계적으로 제정하여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또한, 부산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형)와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실행형)라는 이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특히 위촉위원의 75%를 청년으로 구성하여 정책의 당사자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실행형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한 것은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3) 통합형·글로벌 정책으로의 확장 시도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4-2028)은 제1차 기본계획(2019-2023)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질적 전환을 시도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 대상에서 도시 활력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를 연계하는 ‘패키지형 통합 지원’ 모델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 위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더욱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관광, 업무, 학습 등으로 부산에 체류하는 모든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혁신적 관점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닌, 청년들이 부산을 ‘경험하고 체류하는’ 도시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2) 부산시 청년정책의 과제

(1) 정책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4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청년 마음이음 사업(70.9%), 직무 경험 프로그램(75.7%) 등에서 과반을 넘어선다.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단순히 홍보 부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청년들은 정책 정보를 주로 SNS(53.7%)를 통해 얻지만, 정책 지원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움(45.2%)’과 ‘정보 부족(30.6%)’을 꼽았다. 이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기 보다는, 청년들이 정보를 접하더라도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탐색을 포기하는 ‘인지적 포기’ 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전달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미스매치는 정책의 질적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청년들은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좋은 일자리 창출(44.7%)’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꼽았으나, 부산시의 기존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한계를 가졌었다. 또한 청년들은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저축상품 개발(52.9%)을 가장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할 여유 자금이 없다는 응답이 54.4%에 달한다. 이는 정책이 청년들의 현실적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역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지속되는 ‘탈부산’ 흐름과 정주 유인책의 한계

부산시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탈부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2024년 부산청년패널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2%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20~26세 청년층의 이탈 의향은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주된 이탈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76.0%)가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의 일자리 환경이 청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급여(89.0%)와 고용 안정성(49.3%)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역시 낮은 급여(78.3%)와 복지·노동환경 열악(7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의 산업 구조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청년들 중 78.6%가 부산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들이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에 대한 정서적 연결고리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의미하며, 만약 부산 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청년 인구 유출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부산의 문제는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을 아직 충분히 심어주지 못했다는 데 있다.

주거 정책은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과 ‘청년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주거정책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주거 지원은 ‘텅 빈 도시’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3) 축소사회 내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책적 공백

부산시는 청년 정신건강, 고독사 예방, 디지털 역량 강화, 국제교류 지원 영역 등 청년정책의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2023년 부산시 고독사 발생률이 전국 1위라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년 특화 조례가 부재하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공백을 보여준다.

청년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이들이 고립을 시작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36.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청년들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만, 이웃(7.4%)이나 처음 만난 낯선 사람(2.2%)에 대한 신뢰도는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동체 전반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 중 66.2%가 자녀의 상태를 모르거나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청년의 위기가 조기에 발견되거나 공식적인 지원 체계로 연결되기 어려운 ‘숨겨진 위기’로 남는 경향이 강하다. 부산시의 기존 정책은 가시적인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심리적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축소사회의 사회적 자본 고갈과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4) 참여 거버넌스의 외형적 확대와 내실화 과제

부산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라는 이중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위촉위원 비중을 75%까지 확대하는 등 청년 참여의 외형적 확대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청년들이 정책 인지도가 낮고 복잡한 진입 장벽을 느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거버넌스 체계가 ‘관 주도의 형식적 참여’에서 벗어나 ‘청년 중심의 실질적인 자기결정권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김기현, 2022).

진정한 참여 거버넌스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동 창조자(Co-creator)’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의 거버넌스 모델은 이러한 주체성 강화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며, 부산시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청년들이 실질적인 파트너로 결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참여·권리 분야가 청년정책 예산에서 가장 작은 비중(2025년 0.7%)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한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제4장.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배경 및 구성

1) 조사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 전반의 활력 감소, 이른바 ‘축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장에서는 부산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관과 미래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축소사회에 대비한 미래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가치관, 가족에 대한 인식, 노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지역 정주 의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축소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부산광역시 청년정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기대, 그리고 정책적 수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조사개요

본 조사는 2025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5세부터 29세 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 청년들의 대표적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은 할당추출법(Quota Sampling)을 통해 성별, 연령대(15-19세, 20-24세, 25-29세), 그리고 부산의 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설계되다.

〈표 4-1〉 조사 설계

항목	내용
조사 대상	부산시 거주 만15~29세 청년 ²⁾
총 표본 수	600명
조사 기간	2025년 7월 17일 ~ 7월 23일
표집방법	할당추출법(Quota Sampling)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600명 중 남성은 51.2%(307명), 여성은 48.8%(293명)로 비슷하며, 연령별로는 25~29세(40.2%)가 가장 많고 20~24세(32.8%), 15~19세(27.0%) 순이다. 거주 지역은 부산진구(14.8%)가 가장 많고 해운대구(11.2%), 동래구(8.2%)가 뒤를 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중(44.8%), 졸업(27.5%), 중·고교 재학·졸업(24.7%) 순이며, 직업은 학생이 66.8%로 다수를 차지하고 회사원(12.8%), 취업·창업 준비자(13.0%)가 뒤를 잇는다. 현재 소득활동 인원은 38.0%, 생애 첫 일 경험자는 72.8%이다.

부산 거주 유형에서는 ‘부산 출생 후 계속 거주’가 69.0%로 압도적이며, ‘성인기 이주 후 정착’ 11.3%, ‘유년기 이주 후 정착’ 10.8% 순이다. 가구 경제수준은 ‘중’이 56.7%로 절반 이상이며, ‘중상’(23.2%), ‘중하’(13.7%)가 뒤를 따른다.

미래 희망 거주지는 부산시 내(47.8%), 서울(23.8%), 수도권 외곽(8.2%), 부산 인근(7.5%), 해외(9.2%) 순이며, 걱정 첫 월급 수준은 250만~300만원 미만이 45.3%로 가장 많았다.

〈표 4-2〉 조사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600	100.0
성별	남성	307	51.2
	여성	293	48.8
연령	만15~19세	162	27.0
	만20~24세	197	32.8
	만25~29세	241	40.2
직업	학생	401	66.8
	회사원	77	12.8
	프리랜서	8	1.3
	취업 및 창업 준비	78	13.0
	주부	3	0.5
	사업체 운영	6	1.0
	무직	26	4.3
	기타	1	0.2
최종 학력	중/고등학교 재학 중(중퇴, 졸업 포함)	148	24.7
	대학교 재학 중	269	44.8
	대학교 졸업	165	27.5

2) 부산의 미래 인구 유출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령층(15-29세)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연구대상을 결정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600	100.0
거주 지역	대학원 졸업	18	3.0
	강서구	41	6.8
	기장군	30	5.0
	금정구	38	6.3
	남구	47	7.8
	동구	6	1.0
	동래구	49	8.2
	부산진구	89	14.8
	북구	37	6.2
	사상구	41	6.8
	사하구	38	6.3
	서구	21	3.5
	수영구	32	5.3
	연제구	37	6.2
	영도구	21	3.5
	중구	6	1.0
	해운대구	67	11.2
현재 소득활동 유무	있음	228	38.0
	없음	372	62.0
생애 일 경험 유무	있음	437	72.8
	없음	163	27.2
부산 거주유형	부산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음	414	69.0
	유년기에 이사와 계속 살고 있음	65	10.8
	청소년기에 이사와 계속 살고 있음	23	3.8
	성인기에 이사와 계속 살고 있음	68	11.3
	부산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돌아왔음	30	5.0
가구 경제수준	상	23	3.8
	중상	139	23.2
	중	340	56.7
	중하	82	13.7
	하	16	2.7
장래 살고 싶은 지역	부산시 내	287	47.8
	부산 인근 지역	45	7.5
	서울	143	23.8
	서울 외 수도권 지역	49	8.2
	그 외 지역	21	3.5
	해외	55	9.2

자료: 자료 내용 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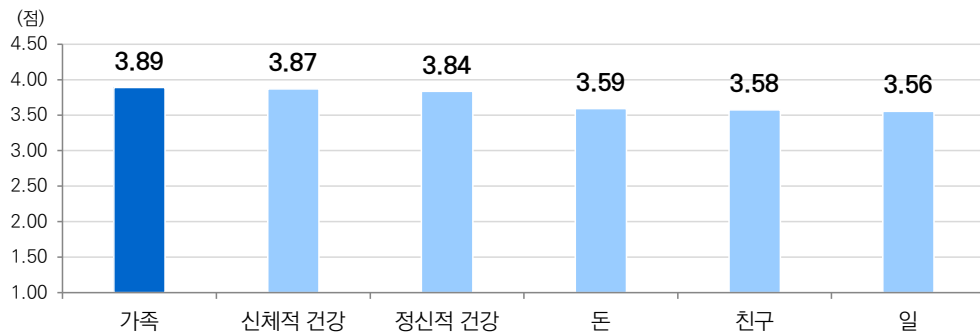
2. 주요 조사 결과

1) 사회적 웰빙에 관한 가치

(1)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부산 청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안정’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 주요 요소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4점 만점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족(3.89점), 신체적 건강(3.87점), 정신적 건강(3.84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반면, 돈(3.59점), 친구(3.58점), 일(3.56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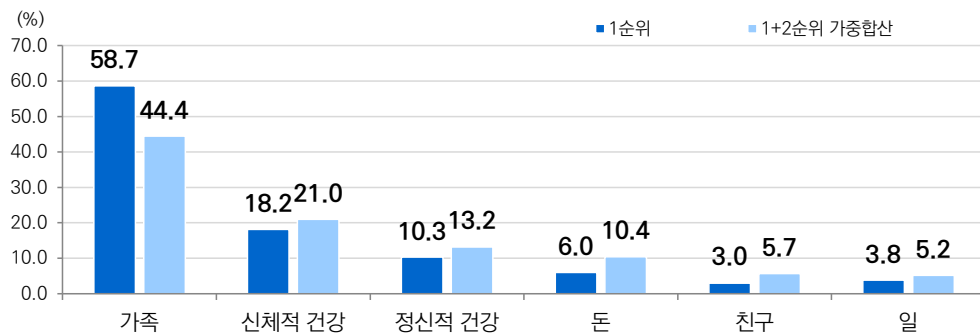
(응답자 수: 600명, 4점 척도 평가)



〈그림 4-1〉 인생 주요 요소별 중요도(4점 척도 평균)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를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한 결과를 가중 합산한 결과에서도 가족이 44.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여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한다.

(응답자 수: 600명, 단위: %)



〈그림 4-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1,2순위 선택 비율)

연령, 최종학력, 직업별로 ‘신체적 건강’과 ‘돈’의 중요도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건강 비중이 상승하고(15~19세 9.9%→25~29세 25.7%), 대학원 이상·회사원 집단에서 건강과 경제적 요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성별, 거주지역, 경제활동 경험, 부산 거주 유형, 가구 경제수준에서는 1순위 요소 선택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3〉 응답자별 특성: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

(1순위 응답 제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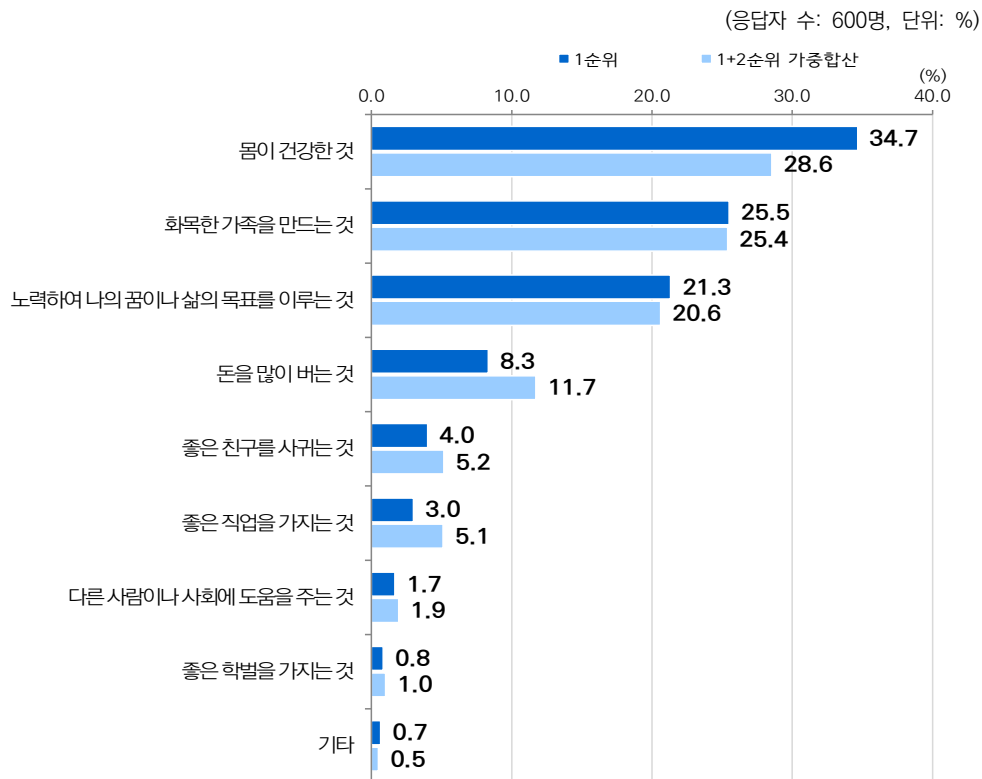
구분		응답자수	가족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돈	일	친구	X ²	유의확률
전체		600	58.7	18.2	10.3	6.0	3.8	3.0		
성별	남성	307	58.6	16.9	9.8	6.2	4.9	3.6	3.281	0.657
	여성	293	58.7	19.5	10.9	5.8	2.7	2.4		
연령	15~19세	162	61.1	9.9	16.0	5.6	3.7	3.7	30.270	0.001 ***
	20~24세	197	66.0	15.7	9.1	4.6	2.5	2.0		
	25~29세	241	51.0	25.7	7.5	7.5	5.0	3.3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60.2	7.2	16.9	4.8	6.0	4.8	37.906	0.047
	20~24세 남성	101	66.3	15.8	7.9	5.9	2.0	2.0		
	25~29세 남성	123	51.2	24.4	6.5	7.3	6.5	4.1		
	15~19세 여성	79	62.0	12.7	15.2	6.3	1.3	2.5		
	20~24세 여성	96	65.6	15.6	10.4	3.1	3.1	2.1		
	25~29세 여성	118	50.8	27.1	8.5	7.6	3.4	2.5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57.4	19.4	8.5	4.7	6.2	3.9	23.354	0.077
	서부산권	157	63.7	11.5	11.5	9.6	3.2	0.6		
	중부산권	260	55.0	21.2	11.5	4.6	3.1	4.6		
	원도심	54	64.8	20.4	5.6	5.6	3.7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58.1	11.5	16.9	5.4	5.4	2.7	27.327	0.002 **
	대학 재학	269	65.4	16.7	7.4	4.8	3.0	2.6		
	대졸 이상	183	49.2	25.7	9.3	8.2	3.8	3.8		
직업	학생	401	63.1	14.2	11.2	5.2	3.5	2.7	30.486	0.010
	회사원	77	45.5	27.3	11.7	10.4	3.9	1.3		
	취/창업 준비	78	53.8	29.5	3.8	5.1	5.1	2.6		
	기타	44	50.0	18.2	11.4	6.8	4.5	9.1		
경제활동 경험	있음	437	56.3	20.8	9.4	6.6	3.7	3.2	10.637	0.059
	없음	163	65.0	11.0	12.9	4.3	4.3	2.5		
부산거주 유형	계속 거주자	414	61.1	16.7	9.9	5.8	3.6	2.9	13.789	0.183
	전입자	156	56.4	19.9	11.5	5.1	3.2	3.8		
	재전입자	30	36.7	30.0	10.0	13.3	10.0	0.0		
가구 경제수준	상	162	62.3	16.0	9.3	5.6	4.3	2.5	9.054	0.527
	중	340	59.7	19.1	9.1	5.3	3.5	3.2		
	하	98	49.0	18.4	16.3	9.2	4.1	3.1		

* p<0.05, ** p<0.01, *** p<0.001

(2)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를 1+2순위 가중합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몸이 건강한 것이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 25.4%, 노력하여 나의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20.6%, 돈을 많이 버는 것 11.7%,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5.2%,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5.1%,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 1.9%,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 역시 물질적 성공보다는 개인의 안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경제적 요소(돈을 많이 버는 것)는 1순위 8.3%, 1+2순위 11.7%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머물렀으며, 좋은 직업(3.0%)이나 좋은 학벌(0.8%)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다. 이는 전통적인 성공 척도로 통용되던 경제·학력·직업적 성취보다 ‘건강·가족·자기실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세대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3〉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

응답자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별 특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

(1순위 5% 이상 응답 제시,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몸이 건강 한 것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	노력하여 나의 꿈이나 삶의 목 표를 이루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χ^2	유의확률
전체		600	34.7	25.5	21.3	8.3		
성별	남성	307	34.2	29.0	19.2	8.5	6.609	0.579
	여성	293	35.2	21.8	23.5	8.2		
연령	15~19세	162	29.6	22.2	23.5	12.3	31.695	0.011
	20~24세	197	36.5	26.9	21.8	8.1		
	25~29세	241	36.5	26.6	19.5	5.8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27.7	25.3	18.1	16.9	50.288	0.128
	20~24세 남성	101	35.6	32.7	19.8	6.9		
	25~29세 남성	123	37.4	28.5	19.5	4.1		
	15~19세 여성	79	31.6	19.0	29.1	7.6		
	20~24세 여성	96	37.5	20.8	24.0	9.4		
	25~29세 여성	118	35.6	24.6	19.5	7.6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42.6	18.6	18.6	7.0	29.890	0.188
	서부산권	157	28.7	30.6	22.9	11.5		
	중부산권	260	35.0	24.2	21.5	7.7		
	원도심	54	31.5	33.3	22.2	5.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29.1	23.0	25.0	10.8	17.694	0.342
	대학 재학	269	36.4	27.9	19.3	8.2		
	대졸 이상	183	36.6	24.0	21.3	6.6		
직업	학생	401	33.2	26.4	21.9	9.0	25.461	0.381
	회사원	77	36.4	23.4	23.4	7.8		
	취/창업 준비	78	44.9	24.4	16.7	5.1		
	기타	44	27.3	22.7	20.5	9.1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36.6	25.9	19.9	7.8	4.479	0.812
	없음	163	29.4	24.5	25.2	9.8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2.1	25.6	23.7	8.2	25.551	0.061
	전입자	156	35.9	28.2	18.6	7.7		
	재전입자	30	63.3	10.0	3.3	13.3		
가구 경제수준	상	162	34.6	27.8	18.5	9.9	11.822	0.756
	중	340	35.3	23.8	22.4	8.2		
	하	98	32.7	27.6	22.4	6.1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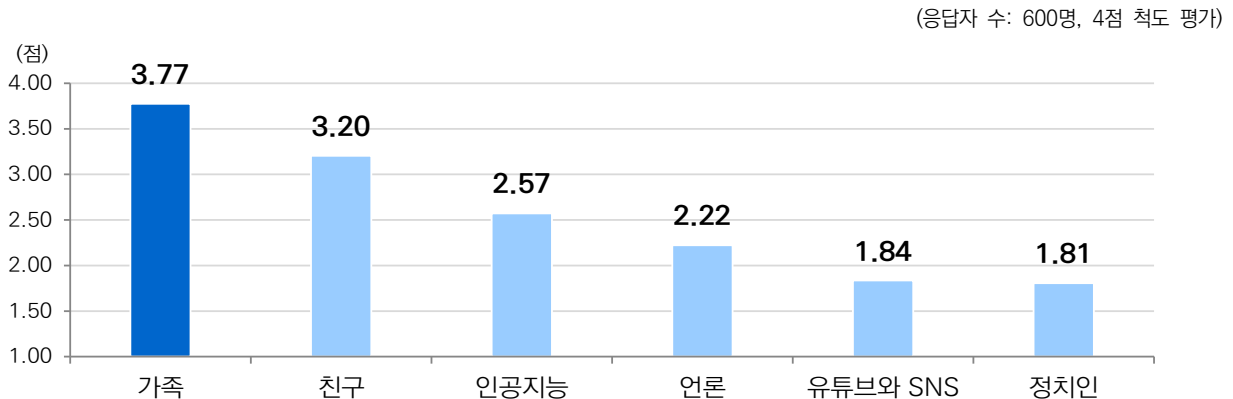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현재의 불안정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예측 가능하고 내재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3) 사회적 신뢰와 집단갈등

현대 사회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예: 정치인 1.81점, 언론 2.22점)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영역인 ‘가족’과 ‘건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가 언론과 유튜브/SNS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청년정책을 추진할 경우 청년들은 권위에서 오는 정보에 대한 신뢰보다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의 근거와 효과에 대한 공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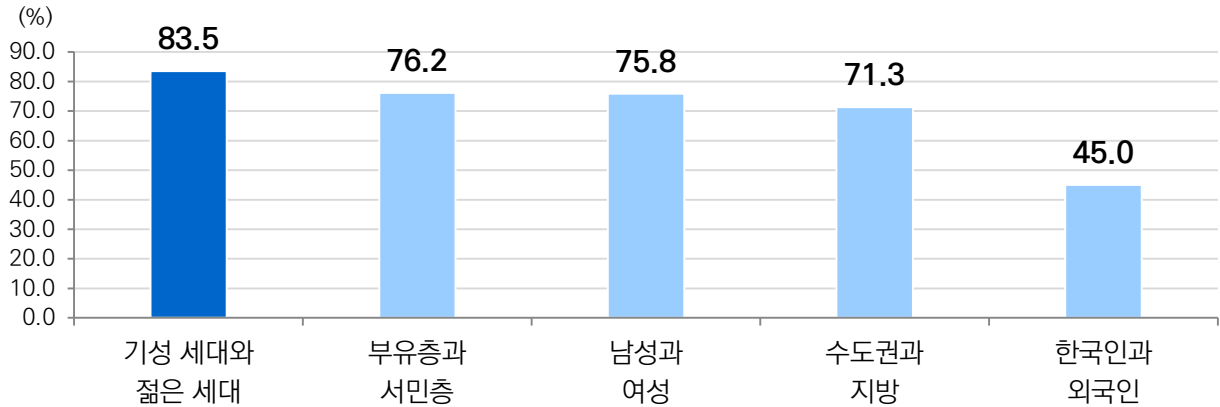
〈그림 4-4〉 현대 사회 구성 요소에 대한 신뢰도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성공의 척도인 ‘돈’이나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 생존’과 ‘정서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는 생존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래 청년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목표로 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를 ‘심각한 편(약간 갈등 있음 + 매우 갈등 심함)’ 응답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가 8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부유층과 서민층 76.2%, 남성과 여성 75.8%, 수도권과 지방 71.3%, 한국인과 외국인 4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 편(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제시, 응답자 수: 600명, 4점 척도 평가)



〈그림 4-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

우선 세대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세대와 젊은세대 간 갈등이 최고 순위를 차지한 것은 인구고령화와 축소사회 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원배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세대갈등이 최고 순위를 차지한 것은 축소사회 진입 과정에서 일자리, 연금, 의료비 등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부유층과 서민층 갈등 역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박탈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 갈등이 가장 낮은 심각도를 보인 것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수용성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축소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경우 갈등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축소사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갈등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축소사회에서는 세대통합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계층갈등 완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전략, 예방중심 갈등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 갈등을 단순 관리가 아닌 사회통합 기회로 전환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표 4-5〉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

(단위: %, 점)

구분	전혀 갈등 없음	별로 갈등 없음	약간 갈등 있음	매우 갈등 심함	2분류		4점 평균 (점)
					심각하지 않은 편 (1+2점)	심각한 편 (3+4점)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2.7	13.8	62.7	20.8	16.5	83.5	3.02
부유층과 서민층	2.5	21.3	54.5	21.7	23.8	76.2	2.95
남성과 여성	4.2	20.0	43.8	32.0	24.2	75.8	3.04
수도권과 지방	2.8	25.8	49.3	22.0	28.7	71.3	2.91
한국인과 외국인	10.0	45.0	38.8	6.2	55.0	45.0	2.41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은 성별과 성별*연령별, 거주지역, 최종학력, ‘남성과 여성’은 연령과 성별*연령별, 거주지역, ‘한국인과 외국인’은 성별과 성별*연령별, 거주지역 변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평균 차이 검정 요약: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

구분	성별	연령	성별*연령별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경제활동 경험	부산 거주 유형	가구 경제 수준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부유층과 서민층									
수도권과 지방	◎		◎	◎	◎				
남성과 여성		◎	◎	◎					
한국인과 외국인	◎		◎	◎					

참고: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 표시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인식은 성별과 성별·연령별, 거주지역, 최종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서부산권(평균 3.10점), 동부산권(2.96점), 원도심(2.85점), 중부산권(2.77점)의 순으로 갈등 심각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응답자가 평균 3.01점으로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였다.

〈표 4-7〉 평균 차이 검정: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수도권과 지방)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2.81	-3.005	0.003**
	여성	293	3.00		
연령	15~19세	162	2.93	0.140	0.869
	20~24세	197	2.89		
	25~29세	241	2.90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2.82	2.921	0.013*
	20~24세 남성	101	2.72		
	25~29세 남성	123	2.89		
	15~19세 여성	79	3.05		
	20~24세 여성	96	3.07		
	25~29세 여성	118	2.91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2.96	6.324	0.000***
	서부산권	157	3.10		
	중부산권	260	2.77		
	원도심	54	2.8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2.95	3.732	0.025*
	대학 재학	269	2.81		
	대졸 이상	183	3.01		
직업	학생	401	2.87	1.550	0.200
	회사원	77	2.94		
	취/창업 준비	78	3.06		
	기타	44	2.93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2.90	-0.418	0.676
	없음	163	2.93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2.86	2.338	0.097
	전입자	156	3.01		
	재전입자	30	3.00		
가구 경제수준	상	162	2.88	1.219	0.296
	중	340	2.94		
	하	98	2.82		

* p<0.05, ** p<0.01, *** p<0.001

‘남성과 여성’ 간 갈등 인식은 연령대, 성별×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15~19세 응답자는 20~29세 응답자보다 남녀 갈등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였으며, 거주지역별로는 서부산권 거주자가 평균 3.17점으로 가장 높은 심각도를 나타냈다. 이어 동부산권이 3.12점, 중부산권이 2.96점, 원도심이 2.83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평균 차이 검정: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남성과 여성)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2.99	-1.506	0.133
	여성	293	3.09		
연령	15~19세	162	3.19	3.636	0.027*
	20~24세	197	2.97		
	25~29세	241	2.99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3.22	2.372	0.038*
	20~24세 남성	101	2.89		
	25~29세 남성	123	2.91		
	15~19세 여성	79	3.15		
	20~24세 여성	96	3.05		
	25~29세 여성	118	3.08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3.12	3.665	0.012*
	서부산권	157	3.17		
	중부산권	260	2.96		
	원도심	54	2.8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01	0.309	0.734
	대학 재학	269	3.02		
	대졸 이상	183	3.08		
직업	학생	401	3.06	0.758	0.518
	회사원	77	2.91		
	취/창업 준비	78	3.03		
	기타	44	3.09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3.02	-0.778	0.437
	없음	163	3.08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03	0.405	0.667
	전입자	156	3.02		
	재전입자	30	3.17		
가구 경제수준	상	162	3.02	2.194	0.112
	중	340	3.09		
	하	98	2.89		

* p<0.05, ** p<0.01, *** p<0.001

한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 인식은 성별과 연령별,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외국인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부산권(평균 2.57점)이 가장 높은 갈등 심각도를 나타냈으며, 이어 원도심(2.43점), 중부산권(2.38점), 동부산권(2.26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평균 차이 검정: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한국인과 외국인)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2.28	0.772	-4.336	0.000***
	여성	293	2.55	0.709		
연령	15~19세	162	2.40	0.814	0.068	0.935
	20~24세	197	2.41	0.762		
	25~29세	241	2.42	0.704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2.19	0.833	4.246	0.001***
	20~24세 남성	101	2.31	0.797		
	25~29세 남성	123	2.33	0.707		
	15~19세 여성	79	2.61	0.741		
	20~24세 여성	96	2.52	0.711		
	25~29세 여성	118	2.53	0.688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2.26	0.815	4.264	0.005**
	서부산권	157	2.57	0.709		
	중부산권	260	2.38	0.760		
	원도심	54	2.43	0.60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2.36	0.783	1.564	0.210
	대학 재학	269	2.39	0.748		
	대졸 이상	183	2.49	0.733		
직업	학생	401	2.39	0.758	0.814	0.486
	회사원	77	2.52	0.736		
	취/창업 준비	78	2.45	0.750		
	기타	44	2.34	0.745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2.42	0.734	0.622	0.534
	없음	163	2.38	0.803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2.39	0.730	2.277	0.103
	전입자	156	2.51	0.807		
	재전입자	30	2.23	0.728		
가구 경제수준	상	162	2.37	0.833	0.341	0.711
	중	340	2.43	0.703		
	하	98	2.42	0.785		

* p<0.05, ** p<0.01, *** p<0.001

(3) 소결

부산 청년들은 삶의 최우선 가치를 ‘가족’과 ‘건강’에서 찾고 있으며, 물질적 성공보다 정서적 안정과 신체·정신적 웰빙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연령·학력·직업별로 ‘신체적 건강’과 ‘돈’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만, 전반적으로 가족(58.7%)과 신체적 건강(18.2%), 정신적 건강(10.3%)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도 ‘건강 유지’(28.6%)와 ‘화목한

가족 구성'(25.4%), '꿈·목표 달성'(20.6%)이 경제적·학력적 성취보다 우선시되었다.

사회적 신뢰는 정치인(1.81점)과 언론(2.22점) 등 공적 권위에 낮게 머무른 반면, '가족'(3.77점)과 '인공지능'(2.57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들이 예측 가능하고 개인적 연결이 강화된 영역에 의존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한편, 축소사회 진입 과정에서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갈등(83.5%), 계층갈등(76.2%), 성 갈등(75.8%), 지역갈등(71.3%)이 심각하게 인식되어, 청년 세대가 불확실성과 불균형 상황을 예민하게 체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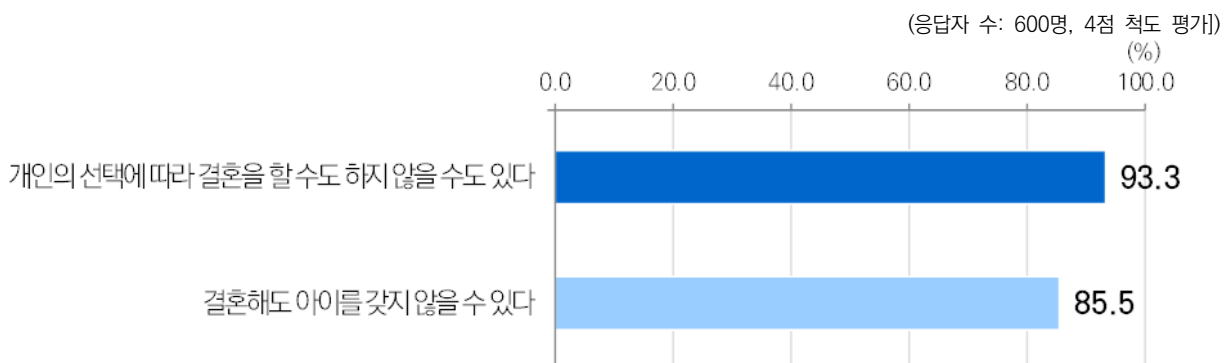
이처럼 부산 청년들은 '안정과 관계'라는 내재적 가치를 보호·강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가족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공적·민간 영역의 신뢰 회복, 세대·계층·지역 간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야 청년들이 부산에서 지속가능한 삶과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 및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부산 청년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중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3.3%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 동의했으며, 85.5%는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4-6〉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이러한 결과는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지 않는 비혼주의와 딩크(DINK)족 경향의 확산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저출생 대책이 단순히 결혼과 출산 장려에만 집중할 경우,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과 괴리되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0〉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선택권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분류		4점 평균 (점)
					그렇지 않은 편(1+2점)	그런 편 (3+4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	4.8	38.3	55.0	6.7	93.3	3.47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2.8	11.7	40.2	45.3	14.5	85.5	3.28

응답자 특성별 주요 문항에 관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을 ◎로 표시한 요약이다. 각 열은 성별, 연령, 성별×연령 교차,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경제활동 경험, 부산 거주 유형, 가구 경제수준을 의미하며, 행은 여섯 개의 인식 문항을 나열하고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두 문항은 성별과 성별×연령 교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녀와 나이 집단 간에 “결혼 여부”나 “출산 선택권”을 개인의 자유로 보는 인식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4-11〉 평균 차이 검정 요약: 가구구성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연령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경제활동 경험	부산 거주 유형	가구 경제 수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		◎						

참고: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 표시

우선 ‘결혼은 개인적인 선택이 가능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결혼 선택권 인식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t = -5.317, p < 0.001$). 남성의 평균 점수는 3.02점(표준편차 1.240)인 반면,

여성의 평균 점수는 3.61점(표준편차 0.566)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을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선택적 접근을 더 강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의 표준편차(1.240)가 여성의 표준편차(0.566)보다 현저히 크다는 것이다. 남성 집단 내에서 결혼 선택권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여성 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남성들 사이에서도 전통적 결혼관과 현대적 결혼관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성별에 따른 결혼관의 현저한 차이는 청년 정책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성들이 결혼을 보다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반면 교육수준, 경제적 지위, 직업 등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져 온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계층을 초월한 사회 전반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표 4-12〉 평균 차이 검정: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3.33	-5.317	0.000***
	여성	293	3.61		
연령	15~19세	162	3.53	1.329	0.265
	20~24세	197	3.47		
	25~29세	241	3.42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3.43	6.885	0.000***
	20~24세 남성	101	3.26		
	25~29세 남성	123	3.31		
	15~19세 여성	79	3.63		
	20~24세 여성	96	3.69		
	25~29세 여성	118	3.53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3.42	2.145	0.093
	서부산권	157	3.41		
	중부산권	260	3.48		
	원도심	54	3.67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54	1.667	0.190
	대학 재학	269	3.46		
	대졸 이상	183	3.40		
직업	학생	401	3.47	1.050	0.370
	회사원	77	3.43		
	취/창업 준비	78	3.40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경제활동경험	기타	44	3.61	0.538	-0.707 0.480
	있음	437	3.45	0.691	
	없음	163	3.50	0.632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50	0.618	1.814 0.164
	전입자	156	3.39	0.792	
	재전입자	30	3.37	0.765	
가구 경제수준	상	162	3.46	0.641	0.395 0.674
	중	340	3.45	0.704	
	하	98	3.52	0.630	

* p<0.05, ** p<0.01, *** p<0.001

이어서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녀관을 분석 결과를,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t = -5.701, p < 0.001$). 남성의 평균 점수는 3.11점(표준편차 0.819)인 반면, 여성의 평균 점수는 3.46점(표준편차 0.689)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 후 무자녀 선택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F값이 2.760, $p = 0.064$ 로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 근접한 경계선상의 유의미성을 보였다. 15-19세(3.38점), 20-24세(3.29점), 25-29세(3.20점)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무자녀 선택에 대한 수용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성별과 연령의 교차분석에서도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었다($F = 9.005, p < 0.001$). 젊은 여성층에서 무자녀 선택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13〉 평균 차이 검정 :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3.11	0.819	-5.701 0.000***
	여성	293	3.46	0.689	
연령	15~19세	162	3.38	0.723	2.760 0.064
	20~24세	197	3.29	0.817	
	25~29세	241	3.20	0.776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3.23	0.754	9.005 0.000***
	20~24세 남성	101	3.02	0.916	
	25~29세 남성	123	3.10	0.773	
	15~19세 여성	79	3.54	0.656	
	20~24세 여성	96	3.58	0.574	
	25~29세 여성	118	3.31	0.768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3.29	0.785	0.613 0.607
	서부산권	157	3.25	0.798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중부산권	260	3.27	0.778		
	원도심	54	3.41	0.714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34	0.796	1.126	0.325
	대학 재학	269	3.29	0.762		
	대졸 이상	183	3.21	0.787		
직업	학생	401	3.31	0.769	0.907	0.437
	회사원	77	3.17	0.818		
	취/창업 준비	78	3.23	0.805		
	기타	44	3.25	0.751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3.26	0.783	-1.222	0.222
	없음	163	3.34	0.765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30	0.754	0.563	0.570
	전입자	156	3.25	0.824		
	재전입자	30	3.17	0.874		
가구 경제수준	상	162	3.31	0.776	0.512	0.600
	중	340	3.28	0.777		
	하	98	3.21	0.790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성별 차이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력 중심의 삶과 출산·육아 부담 사이의 갈등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젊은 여성층의 높은 수용도는 이들이 경력 개발과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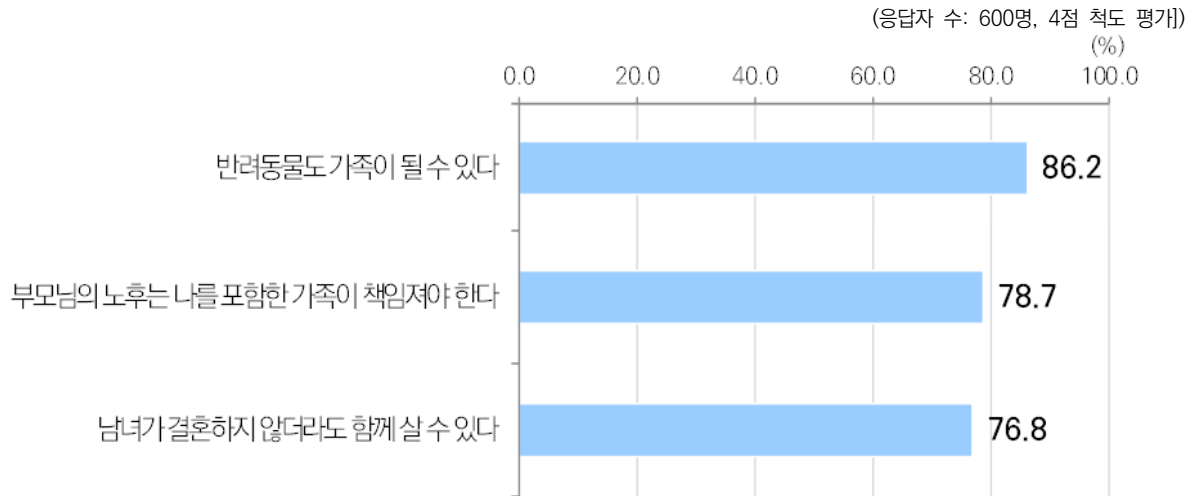
우선 성별 차이의 심화는 저출산 정책 수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높은 무자녀 수용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육아 부담 완화가 출산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이어서 젊은 세대의 높은 수용도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 덩크족 등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제고와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2) 전통적 가족 구조 해체와 새로운 가족 개념

부산 청년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 중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혼 동거에 대한 동의율이 76.8%에 달했고,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응답은 86.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는 78.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즉, 청년들에게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인적 선택의 영역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가족’의 범위를 혈연과 법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전히 부양 의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일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가족의 의미는 재정의하되, 세대 간 책임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 구조에 얽매어 있음을 나타낸다.

〈표 4-14〉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 형태 및 부양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분류		4점 평균 (점)
					그렇지 않은 편(1+2점)	그런 편 (3+4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1.8	4.8	38.3	55.0	6.7	93.3	3.47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3.3	10.5	41.7	44.5	13.8	86.2	3.27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2.8	11.7	40.2	45.3	14.5	85.5	3.28
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2.8	18.5	50.3	28.3	21.3	78.7	3.04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5.0	18.2	48.5	28.3	23.2	76.8	3.00

응답자 특성별 주요 문항에 관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을 ◎로 표시하였다.

〈표 4-15〉 평균 차이 검정 요약: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연령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경제활동 경험	부산 거주 유형	가구 경제 수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	◎	◎					◎	◎
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	◎	◎	◎	◎	◎		◎

참고: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 표시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인식은 연령과 성별×연령 교차에서 유의미하게 달랐다. 즉, 나이가 낮을수록 동거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젊은 여성 집단에서 더 강하게 지지한다는 의미이다.

〈표 4-16〉 평균 차이 검정: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2.95	-1.655	0.099
	여성	293	3.06		
연령	15~19세	162	3.05	0.435	0.648
	20~24세	197	2.97		
	25~29세	241	3.00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3.04	1.235	0.291
	20~24세 남성	101	2.84		
	25~29세 남성	123	2.98		
	15~19세 여성	79	3.06		
	20~24세 여성	96	3.10		
	25~29세 여성	118	3.02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2.98	0.304	0.822
	서부산권	157	3.00		
	중부산권	260	3.03		
	원도심	54	2.9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04	1.581	0.207
	대학 재학	269	2.94		
	대졸 이상	183	3.07		
직업	학생	401	3.00	0.294	0.830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회사원	77	2.99	0.819		
	취/창업 준비	78	2.95	0.804		
	기타	44	3.09	0.884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3.01	0.838	0.368	0.713
	없음	163	2.98	0.757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02	0.804	0.726	0.484
	전입자	156	2.94	0.848		
	재전입자	30	3.07	0.828		
가구 경제수준	상	162	2.93	0.893	4.687	0.010**
	중	340	3.09	0.765		
	하	98	2.83	0.825		

* p<0.05, ** p<0.01, *** p<0.001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문항은 성별, 연령, 성별×연령 교차,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부산 거주 유형 등 대부분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반려동물 가족화 인식이 매우 다양한 요인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7〉 평균 차이 검정: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3.19	0.817	-2.832	0.005**
	여성	293	3.37	0.731		
연령	15~19세	162	3.31	0.806	4.539	0.011*
	20~24세	197	3.38	0.751		
	25~29세	241	3.16	0.776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3.19	0.876	3.663	0.003**
	20~24세 남성	101	3.34	0.778		
	25~29세 남성	123	3.06	0.792		
	15~19세 여성	79	3.43	0.710		
	20~24세 여성	96	3.43	0.722		
	25~29세 여성	118	3.27	0.747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3.32	0.760	1.733	0.159
	서부산권	157	3.36	0.809		
	중부산권	260	3.23	0.783		
	원도심	54	3.11	0.718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30	0.779	0.353	0.703
	대학 재학	269	3.28	0.779		
	대졸 이상	183	3.23	0.788		
직업	학생	401	3.31	0.787	1.555	0.199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회사원	77	3.19	0.744	
	취/창업 준비	78	3.13	0.812	
	기타	44	3.34	0.713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3.26	0.776	-0.640
	없음	163	3.31	0.796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34	0.738	4.703
	전입자	156	3.12	0.860	
	재전입자	30	3.17	0.834	
가구 경제수준	상	162	3.28	0.872	4.201
	중	340	3.33	0.735	
	하	98	3.07	0.750	

* p<0.05, ** p<0.01, *** p<0.001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돌봄 의무 인식은 가구 경제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 의무를 가족 구성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표 4-18〉 평균 차이 검정: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3.04	0.764	-0.192
	여성	293	3.05	0.762	
연령	15~19세	162	3.24	0.658	19.123
	20~24세	197	3.15	0.800	
	25~29세	241	2.82	0.742	
성별*연령별	15~19세 남성	83	3.20	0.658	7.817
	20~24세 남성	101	3.13	0.796	
	25~29세 남성	123	2.85	0.769	
	15~19세 여성	79	3.28	0.659	
	20~24세 여성	96	3.18	0.808	
	25~29세 여성	118	2.79	0.714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3.10	0.759	5.536
	서부산권	157	3.18	0.729	
	중부산권	260	3.00	0.774	
	원도심	54	2.72	0.712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15	0.703	6.694
	대학 재학	269	3.10	0.800	
	대졸 이상	183	2.87	0.727	
직업	학생	401	3.12	0.764	5.396
	회사원	77	2.79	0.713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경제활동경험	취/창업 준비	78	2.94	-2.811	0.005**
	기타	44	2.91		
	있음	437	2.99		
	없음	163	3.18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07	1.696	0.184
	전입자	156	3.00		
	재전입자	30	2.83		
가구 경제수준	상	162	3.16	13.249	0.000***
	중	340	3.09		
	하	98	2.69		

* p<0.05, ** p<0.01, *** p<0.001

부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가족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세 가지 문항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동거에 대한 수용성은 연령과 성별·연령 교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나이가 낮은 청년일수록 동거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15~24세 여성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동거를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구 경제수준별로는 중간계층의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문항에서는 성별·연령·거주유형·가구 경제수준 등 대부분의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여성 응답자는 남성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식이 더 강했고, 연령별로는 20~24세가 최고점을 기록했다. 거주유형별로는 부산에 계속 거주해 온 청년이, 경제수준별로는 중간계층이 반려동물 가족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족화 인식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돌봄 의무 인식은 오직 가구 경제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부양 의무를 가족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으며, 특히 상위 계층이 중·하위 계층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했다. 연령·거주지역·학력·직업·경제활동 경험 등 다른 특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부산 청년층의 가족 인식이 세대별·성별·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거와 반려동물 가족화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와 여성, 중간계층이 보다 개방적인 반면, 전통적 부모 부양 의무는 경제적 여건이 풍부할수록 더 강하게 지지된다는 점이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두된다.

(3) 소결

부산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사회적·법적 의무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롭게 판단하고자 한다. 93.3%가 “결혼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답했고, 85.5%가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해, 비혼과 딩크족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여성과 젊은 세대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 남성 집단 내 전통적 가족관과 혼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동거 가능성’(76.8%)과 ‘반려동물 가족화’(86.2%)에 대한 폭넓은 수용은 가족의 정의가 혈연이나 제도적 관계를 넘어 정서적 유대 기반의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부모 부양 책임’(78.7%)에 대한 전통적 돌봄 의무를 중시하는 태도는 여전히 유지되어, 가족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복합적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 즉, 저출생 대책이나 가족정책이 단순한 결혼·출산 장려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선택을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비혼·딩크·동거·반려동물 가족화 등 새로운 공동체 모델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여성과 젊은 세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출산 의향이 낮은 집단을 위해 육아 부담 완화·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출산 결정을 돕는 맞춤형 보육·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청년의 가족관 확장에 부응해,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공유형 가족지원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가족관계와 새로운 생활방식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

결국, 변화하는 가족 인식을 반영한 포괄적·맞춤형 정책 마련만이 축소사회 속에서 청년의 삶과 공동체 모두를 지속가능하게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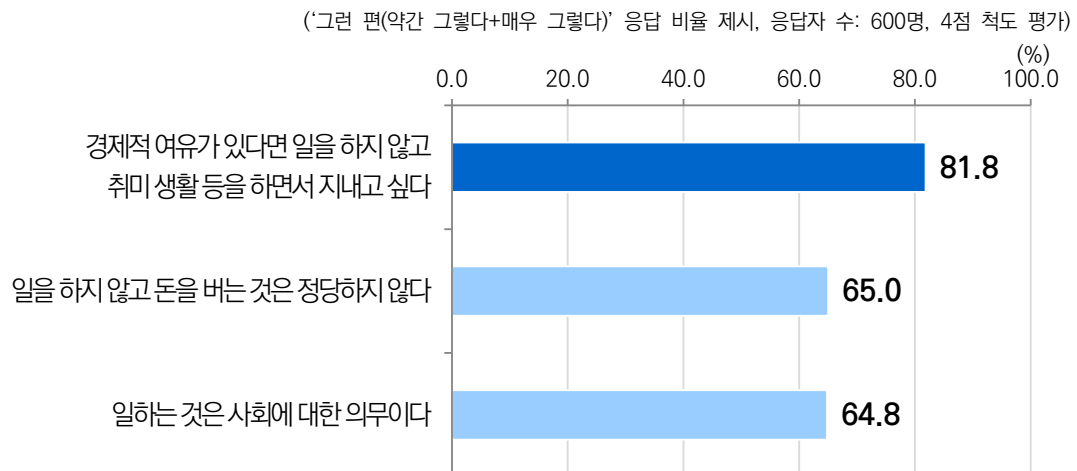
3) 노동과 투자에 관한 인식

(1) 노동 의미와 개인의 삶의 질

부산 청년들은 노동에 대해 다소 양가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을 하지 않고 취미 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을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선 ‘삶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산지역 청년들이 개인의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65%)와 “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64.8%)에 대한 응답률은 전통적 노동윤리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이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선택권과 다양한 소득 창출 방식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4-8〉 노동에 대한 인식

종합하면 일상에서의 노동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지만, 노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사회적 의무감도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청년들이 일의 사회적 가치와 의무는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과도한 희생을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9〉 노동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분류		4점 평균 (점)
					그렇지 않은 편(1+2점)	그런 편 (3+4점)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을 하지 않고 취미 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2.8	15.3	38.3	43.5	18.2	81.8	3.23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7.8	27.2	43.0	22.0	35.0	65.0	2.79
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5.3	29.8	48.3	16.5	35.2	64.8	2.76
비트코인/주식 등의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매력적이다	13.7	40.7	35.8	9.8	54.3	45.7	2.42

청년들은 노동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현실의 노동이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지나친 희생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인생 주요 요소에 대한 중요도 문항에서 '일'이 '돈'보다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미래 청년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자율적 휴가 사용 등 청년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전통적 노동가치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노동의 기본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일자리 제공과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노동의 정당성과 사회적 의무에 대한 중간 수준의 인식은 정책 설계 시 청년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획일적인 정규직 중심의 정책보다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소득 창출 방식을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 유연한 근무 환경,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무 설계 등이 청년 고용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논의도 청년층의 변화하는 노동관을 반영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응답자 특성별 주요 문항에 관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문항을 ◎로 표시하였다.

〈표 4-20〉 평균 차이 검정 요약: 노동에 대한 인식

구분	성별	연령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최종학력	직업	경제활동 경험	부산 거주 유형	가구 경제 수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		◎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을 하지 않고 취미 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참고: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항목에 “◎” 표시

부산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는 인식 차이를 검정한 결과,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성별(남성 2.80점, 여성 2.72점; $p=0.226$), 연령(15~19세 2.73점, 20~24세 2.78점, 25~29세 2.76점; $p=0.853$), 거주지역·경제활동 경험·부산 거주 유형·가구 경제수준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성별×연령 교차 분석에서는 유의확률이 0.048($p<0.05$)로, 20~24세 남성(2.92점)이 동일 연령대 여성(2.64점)보다 더 강한 사회적 의무감을 보였으며, 15~19세 남성(2.63점)이 15~19세 여성(2.85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041$)가 관찰되었는데, 대학 재학생(2.85점)이 대졸 이상(2.67점) 및 고졸 이하(2.72점)보다 ‘노동의 사회적 의무’ 인식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일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라는 인식이 부산 청년 전반에 걸쳐 비교적 균질하게 확산되어 있어, 성별·연령·지역·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노동 참여’ 자체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20~24세 남성과 대학 재학생에서 좀 더 강한 사회적 의무감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일·학습 병행 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인 15~19세 남성과 대졸 이상 집단에는 노동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맞춤형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부산 청년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의무 인식은 대체로 고르게 형성되어 있으나, 특정 연령·학력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정책 설계가 노동 참여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 할 것이다.

〈표 4-21〉 평균 차이 검정: 노동에 대한 인식 - 2) 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2.80	0.819	1.212	0.226
	여성	293	2.72	0.752		
연령	15~19세	162	2.73	0.847	0.159	0.853
	20~24세	197	2.78	0.788		
	25~29세	241	2.76	0.747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2.63	0.907	2.254	0.048*
	20~24세 남성	101	2.92	0.783		
	25~29세 남성	123	2.81	0.772		
	15~19세 여성	79	2.85	0.769		
	20~24세 여성	96	2.64	0.769		
	25~29세 여성	118	2.70	0.720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2.72	0.800	0.321	0.810
	서부산권	157	2.78	0.803		
	중부산권	260	2.75	0.783		
	원도심	54	2.83	0.746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2.72	0.817	3.201	0.041*
	대학 재학	269	2.85	0.789		
	대졸 이상	183	2.67	0.751		
직업	학생	401	2.81	0.806	2.558	0.054
	회사원	77	2.55	0.753		
	취/창업 준비	78	2.74	0.729		
	기타	44	2.70	0.734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2.78	0.792	1.269	0.205
	없음	163	2.69	0.772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2.75	0.784	0.212	0.809
	전입자	156	2.79	0.809		
	재전입자	30	2.73	0.740		
가구경제수준	상	162	2.78	0.854	0.106	0.899
	중	340	2.75	0.778		
	하	98	2.74	0.708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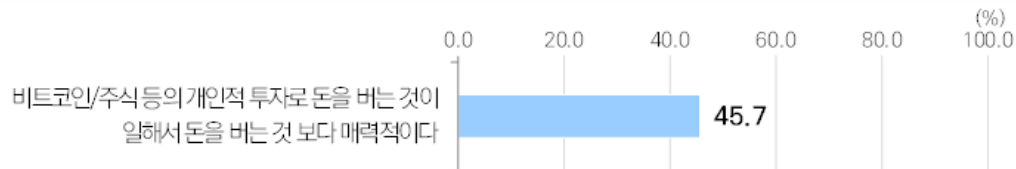
(2) 불확실성 시대, 투자에 관한 인식

전통적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는 동시에, 청년들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주식 등의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매력적이다'라는 문항에 45.7%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이는 청년 2명 중 1명꼴로 전통적인 노동 외의 자산운용 및 투자 활동을

매력적인 소득 창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편(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제시, 응답자 수: 600명, 4점 척도 평가)



〈그림 4-9〉 투자에 대한 인식

그러나 여전히 50% 이상의 청년층이 투자 소득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활발한 주식투자와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투자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이를 주된 소득원으로 보기보다는 부수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 소득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청년층이 투기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 교육과 함께 안정적인 근로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표 4-22〉 투자에 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분류		4점 평균 (점)
					그렇지 않은 편(1+2점)	그런 편 (3+4점)	
비트코인/주식 등의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매력적이다	13.7	40.7	35.8	9.8	54.3	45.7	2.42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느껴 투기적 성향의 투자에 기대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년정책은 단순히 이들의 투기적 성향을 비판하는 대신, 건전한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소액 투자 지원 및 저축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주식 등의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매력적이다’ 는 성별과 성별*연령별, 가구 경제수준에 따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매력이라고 인식하는 편이며, 가구 경제수준별로는 하(2.63점), 상(2.47점), 중(2.3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평균 차이 검정: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매력적이다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2.51	2.776	0.006**
	여성	293	2.32		
연령	15~19세	162	2.36	0.573	0.564
	20~24세	197	2.45		
	25~29세	241	2.44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2.54	2.369	0.038*
	20~24세 남성	101	2.49		
	25~29세 남성	123	2.51		
	15~19세 여성	79	2.16		
	20~24세 여성	96	2.41		
	25~29세 여성	118	2.36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2.40	1.280	0.280
	서부산권	157	2.41		
	중부산권	260	2.38		
	원도심	54	2.6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2.38	0.383	0.682
	대학 재학	269	2.41		
	대졸 이상	183	2.46		
직업	학생	401	2.38	1.445	0.229
	회사원	77	2.44		
	취/창업 준비	78	2.59		
	기타	44	2.45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2.44	0.998	0.319
	없음	163	2.36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2.43	0.765	0.466
	전입자	156	2.44		
	재전입자	30	2.23		
가구경제수준	상	162	2.47	5.276	0.005**
	중	340	2.33		
	하	98	2.63		

* p<0.05, ** p<0.01, *** p<0.001

부산 청년층을 대상으로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매력적이다”라는 인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 남성(평균 2.51점)과 여성(평균 2.32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0.006$). 이는 남성 청년이 여성 청년에 비해 개인투자에 더 높은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령별로는 15~19세(2.36점), 20~24세(2.45점), 25~29세(2.44점)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p=0.564$), 거주지역·최종학력·직업·경제활동 경험·부산 거주유형에서도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한 교차분석에서는 유의확률이 0.038로, 특히 15~19세 여성의 인식(2.16점)이 가장 낮고, 25~29세 남성(2.51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기 성·연령별로 투자 매력도가 다르게 형성됨을 시사했다. 또한 가구 경제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p=0.005$), 상위층(2.47점)보다 중하위층, 특히 하위층(2.63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일수록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처럼 부산 청년의 투자 매력도는 성별, 성별·연령 교차, 그리고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여성 청년과 고연령·고학력 집단, 그리고 상위 경제층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3) 소결

부산 청년들은 노동을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삶의 만족과 여가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면서도, 노동 없는 수입 창출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과 사회적 의무를 여전히 수용하고 있다. 81.8%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취미생활을 하며 살고 싶다”고 답했지만, 65.0%는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동의했으며, 64.8%는 “일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는 청년이 자아실현과 사회 기여 가치를 인정하지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전통적 노동 방식을 거부하고 ‘유연·적정 노동’으로의 전환을 희망함을 보여 준다.

투자에 대해서는 45.7%가 “개인적 투자로 버는 돈이 노동 소득보다 매력적”이라고 응답해, 절반에 가까운 청년이 노동 외 부수적 소득원을 모색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남성, 25~29세 남성, 취업준비생, 경제 취약계층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은 여전히 안정적 근로 소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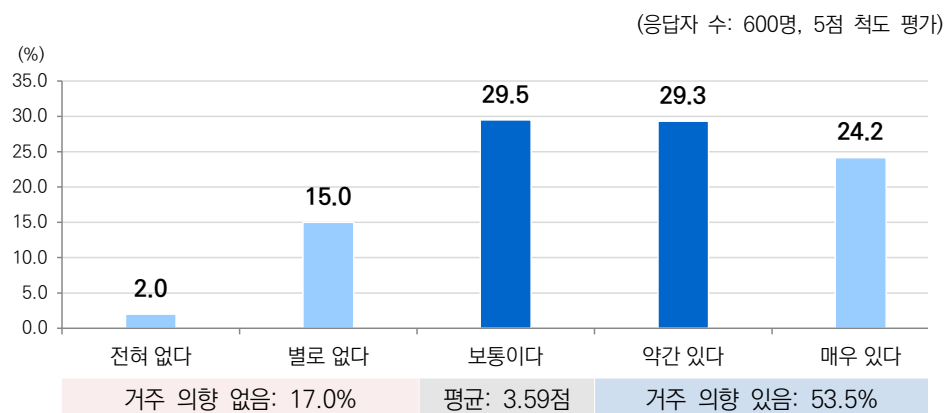
주요 수입원으로 신뢰하는 동시에, 투기적 투자를 경계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교육과 소액투자 지원, 안정적 노동 기반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부산 청년의 노동·투자 인식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구가 공존하는 ‘이중적 노동관’과 ‘부수적 투자관’을 반영한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안정적 노동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전한 금융 역량을 강화해 노동소득과 투자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통합형 청년경제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4) 청년 이동성과 도시 격차 인식

(1) 부산의 정주 여건과 청년들의 거주 의향

부산 청년들의 지역 정주 의향은 일자리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부산의 인구 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이다. 부산 계속 거주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5%만이 ‘거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17.0%는 ‘거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29.5%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년들이 부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없지만,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부산을 떠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0〉 부산 계속 거주 의향

부산 청년의 계속 거주 의향을 분석한 결과, 먼저 여성(3.73점)이 남성(3.45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거주 의향을 보였다($p=0.002$). 연령별로는 20~24세(3.64점)와 25~29세(3.71점)가 15~19세(3.35점)보다 더 강한 정주 의지를 나타냈으며($p=0.003$), 특히 20~24세와 25~29세의 여성은

각각 3.73점, 3.94점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p<0.001$).

거주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최종학력에 따라 대졸 이상(3.87점)과 대학 재학(3.48점) 집단이 고졸 이하(3.42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거주 의향을 보였다($p<0.001$). 또한 직업별로는 회사원(3.95점)과 취·창업 준비생(3.85점)의 거주 의향이 학생(3.45점)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 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거주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p<0.001$).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3.64점)은 경험이 없는 청년(3.44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거주 의향을 보여($p=0.035$), 첫 일자리 경험이 지역 정착 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전입자(3.47점)와 재전입자(3.67점)는 계속 거주자(3.63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미 부산에 뿌리를 둔 청년의 거주 안정성이 비교적 견고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축소사회 대응 청년정책은 먼저 15~19세 남성과 학생, 고졸 이하 청년, 경제활동 미경험자 등 이탈 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기 거주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로·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멘토링, 산학 협력 인턴십 연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 재학생, 대졸 이상, 취·창업 준비생, 여성 및 노동시장 경험 청년 등 거주 의향이 높은 집단을 ‘거주 앰배서더’로 활용해 멘토링과 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이들의 성공 사례를 신규 청년 유입 홍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장기 거주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기업·지자체가 협력하는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년이 부산에서 교육받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4〉 평균 차이 검정: 부산 계속 거주 의향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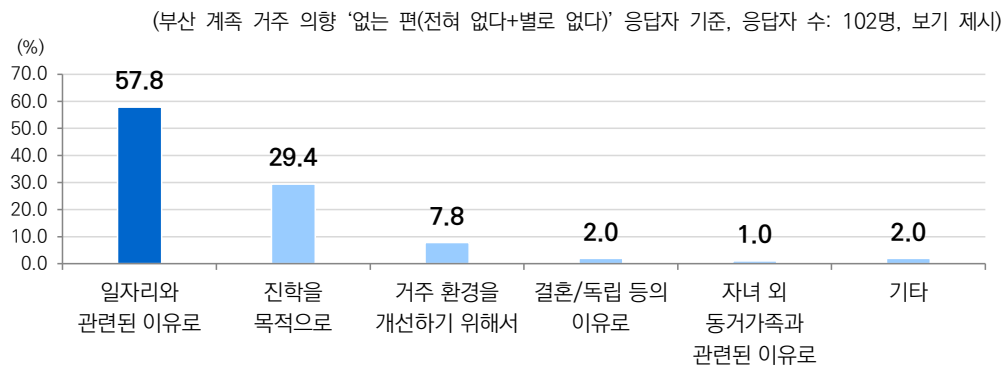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3.45	1.120	-3.165	0.002**
	여성	293	3.73	1.000		
연령	15~19세	162	3.35	1.105	5.914	0.003**
	20~24세	197	3.64	1.072		
	25~29세	241	3.71	1.025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83	3.29	1.185	5.082	0.000***
	20~24세 남성	101	3.55	1.162		
	25~29세 남성	123	3.48	1.035		
	15~19세 여성	79	3.41	1.019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20~24세 여성	96	3.73	0.968		
	25~29세 여성	118	3.94	0.963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3.57	1.074	0.820	0.483
	서부산권	157	3.59	1.103		
	중부산권	260	3.55	1.095		
	원도심	54	3.80	0.833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42	1.131	9.952	0.000***
	대학 재학	269	3.48	1.053		
	대졸 이상	183	3.87	0.995		
직업	학생	401	3.45	1.099	7.216	0.000***
	회사원	77	3.95	0.841		
	취/창업 준비	78	3.85	1.070		
	기타	44	3.75	0.943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3.64	1.052	2.116	0.035*
	없음	163	3.44	1.111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63	1.061	1.316	0.269
	전입자	156	3.47	1.080		
	재전입자	30	3.67	1.155		
가구경제수준	상	162	3.65	1.155	0.365	0.694
	중	340	3.56	1.047		
	하	98	3.56	1.016		

* p<0.05, ** p<0.01, *** p<0.001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가 57.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진학을 목적으로(29.4%)’,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7.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청년 이동성의 근본 원인이 경제적 기회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림 4-11〉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드러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별 일자리 관련 이유의 격차가 극명하다. 20~24세(81.5%)와 25~29세(73.5%) 응답자 대다수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부산을 떠나고자 했으나, 15~19세에서는 단 29.3%만이 동일한 이유를 들었다. 이는 청년 초기 진입기(고교 졸업 전후)보다 취업 준비·경력 형성 시기에 접어드는 20~29세에서 일자리 불안이 지방 정주 의지에 가장 큰 제약 요인임을 보여준다.

둘째, 진학 목적으로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비율도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5~19세 청년 중 56.1%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계획한 반면, 20~24세(7.4%)와 25~29세(14.7%)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는 고교 생 시기에 대학 입시 및 전공 선택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타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셋째, 거주 환경 개선을 이유로 꼽은 비율도 연령·거주지역·가구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동부산권 거주(52.2%)와 원도심 거주(50.0%) 청년에서 높은 응답률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권역의 주거·생활 인프라 열악이 젊은 층의 정주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유의미한 결과를 통해 향후 축소사회 대응 청년정책은 20~29세 청년의 일자리 안정 및 경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5~19세 고교생을 위한 지역 내 대학·전문 교육 기회 확충할 필요가 있다.

〈표 4-25〉 응답자별 특성: 부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수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진학을 목적으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혼/독립 등의 이유로	자녀 외 동거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전체	102	57.8	29.4	7.8	2.0	1.0
성별	남성	67	55.2	31.3	7.5	1.5
	여성	35	62.9	25.7	8.6	0.0
연령	15~19세	41	29.3	56.1	9.8	0.0
	20~24세	27	81.5	7.4	11.1	0.0
	25~29세	34	73.5	14.7	2.9	2.9
성별*연령별	15~19세 남성	25	28.0	56.0	8.0	0.0
	20~24세 남성	19	73.7	10.5	15.8	0.0
	25~29세 남성	23	69.6	21.7	0.0	4.3
	15~19세 여성	16	31.3	56.3	12.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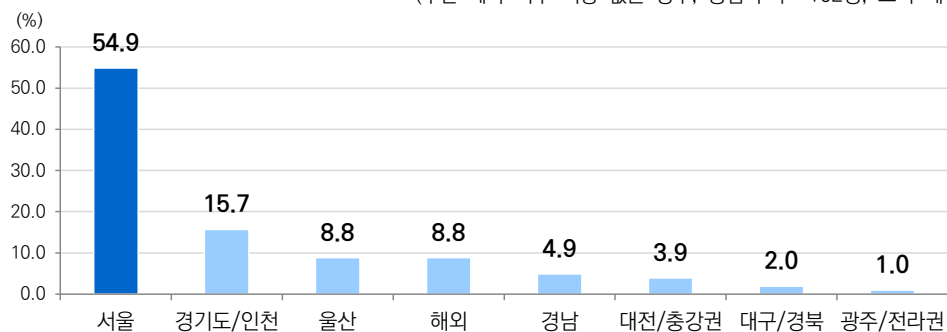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수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진학을 목적으로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혼/독립 등의 이유로	자녀 외 동거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20~24세 여성	8	100.0	0.0	0.0	0.0	0.0
	25~29세 여성	11	81.8	0.0	9.1	9.1	0.0
거주지역	동부산권	23	39.1	52.2	0.0	8.7	0.0
	서부산권	32	71.9	18.8	3.1	0.0	3.1
	중부산권	45	57.8	26.7	13.3	0.0	0.0
	원도심	2	50.0	0.0	50.0	0.0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37	32.4	54.1	8.1	2.7	0.0
	대학 재학	46	69.6	17.4	8.7	0.0	2.2
	대졸 이상	19	78.9	10.5	5.3	5.3	0.0
직업	학생	83	54.2	32.5	8.4	1.2	1.2
	회사원	4	75.0	0.0	25.0	0.0	0.0
	취/창업 준비	11	90.9	9.1	0.0	0.0	0.0
	기타	4	25.0	50.0	0.0	25.0	0.0
경제활동경험	있음	67	71.6	14.9	9.0	1.5	1.5
	없음	35	31.4	57.1	5.7	2.9	0.0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69	56.5	31.9	5.8	1.4	1.4
	전입자	28	67.9	17.9	10.7	3.6	0.0
	재전입자	5	20.0	60.0	20.0	0.0	0.0
가구경제수준	상	28	50.0	39.3	7.1	3.6	0.0
	중	59	61.0	27.1	5.1	1.7	1.7
	하	15	60.0	20.0	20.0	0.0	0.0

* p<0.05, ** p<0.01, *** p<0.001

부산을 떠날 경우 선호하는 지역은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산 외 거주지로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서울(54.9%)과 경기/인천(15.7%) 등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청년들이 부산에 대한 감정적 애착은 있지만, 그 애착이 현실적인 경쟁력의 부족을 상쇄할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산 계속 거주 의향 없는 경우, 응답자 수: 102명, 보기 제시)



〈그림 4-12〉 부산 외 거주지로서 선호하는 지역

부산 청년들이 '부산 외 거주지'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54.9%)이 압도적이었으며, 이어 경기·인천(15.7%), 울산(8.8%)과 해외(8.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다음 세 가지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연령별 선호 지역 차이가 뚜렷했다. 15~19세 청소년은 서울 선호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으나, 20~24세는 서울 선호가 44.4%로 크게 하락하고 울산(18.5%)과 대전·충청권(7.4%), 광주·전라권(3.7%) 선호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25~29세는 서울(44.1%)과 경기·인천(23.5%) 선호가 모두 높아, 대학 진학기 이후에는 직업 기회가 많은 수도권과 인접 광역권으로의 이동 욕구가 커짐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연령 교차 분석에서는 20~24세 남성의 52.6%가 서울을, 21.1%가 울산을 선호한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은 서울(25.0%)과 대전·충청권(25.0%)을 동등하게 선호했다. 이는 여성 청년이 직장·가족·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점을 균형 있게 검토하는 반면, 남성 청년은 상대적으로 산업·고용 밀집 지역을 선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최종학력별 선호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이 서울(36.8%)과 해외(15.8%) 선호 비율이 높아, 고학력 청년일수록 국외 경험과 수도권 고급 일자리 기회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고졸 이하에서는 서울(64.9%)과 울산(8.1%), 광주·전라권(2.7%) 선호가 나타나, 직업훈련과 산업체 접근성을 중시하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표 4-26〉 응답자별 특성: 부산 외 거주지로서 선호하는 지역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수	서울	경기도/ 인천	울산	해외	경남	대전/ 충강권	대구/ 경북	광주/ 전라권
전체		102	54.9	15.7	8.8	8.8	4.9	3.9	2.0	1.0
성별	남성	67	56.7	14.9	10.4	10.4	3.0	1.5	1.5	1.5
	여성	35	51.4	17.1	5.7	5.7	8.6	8.6	2.9	0.0
연령	15~19세	41	70.7	9.8	7.3	12.2	0.0	0.0	0.0	0.0
	20~24세	27	44.4	14.8	18.5	3.7	7.4	7.4	0.0	3.7
	25~29세	34	44.1	23.5	2.9	8.8	8.8	5.9	5.9	0.0
성별* 연령별	15~19세 남성	25	68.0	8.0	12.0	12.0	0.0	0.0	0.0	0.0
	20~24세 남성	19	52.6	10.5	21.1	5.3	5.3	0.0	0.0	5.3
	25~29세 남성	23	47.8	26.1	0.0	13.0	4.3	4.3	4.3	0.0
	15~19세 여성	16	75.0	12.5	0.0	12.5	0.0	0.0	0.0	0.0
	20~24세 여성	8	25.0	25.0	12.5	0.0	12.5	25.0	0.0	0.0
	25~29세 여성	11	36.4	18.2	9.1	0.0	18.2	9.1	9.1	0.0

(단위: 명, 점)

구분		응답자수	서울	경기도/ 인천	울산	해외	경남	대전/ 충강권	대구/ 경북	광주/ 전라권
거주지역	동부산권	23	69.6	4.3	8.7	8.7	4.3	0.0	4.3	0.0
	서부산권	32	59.4	21.9	3.1	6.3	3.1	3.1	0.0	3.1
	중부산권	45	44.4	15.6	13.3	11.1	6.7	6.7	2.2	0.0
	원도심	2	50.0	50.0	0.0	0.0	0.0	0.0	0.0	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37	64.9	10.8	8.1	13.5	2.7	0.0	0.0	0.0
	대학 재학	46	54.3	19.6	8.7	2.2	4.3	6.5	2.2	2.2
	대졸 이상	19	36.8	15.8	10.5	15.8	10.5	5.3	5.3	0.0
직업	학생	83	60.2	13.3	8.4	8.4	2.4	3.6	2.4	1.2
	회사원	4	0.0	0.0	25.0	0.0	50.0	25.0	0.0	0.0
	취/창업 준비	11	36.4	45.5	0.0	9.1	9.1	0.0	0.0	0.0
	기타	4	50.0	0.0	25.0	25.0	0.0	0.0	0.0	0.0
경제활동경험	있음	67	49.3	17.9	7.5	7.5	7.5	6.0	3.0	1.5
	없음	35	65.7	11.4	11.4	11.4	0.0	0.0	0.0	0.0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69	59.4	17.4	4.3	8.7	4.3	4.3	0.0	1.4
	전입자	28	46.4	10.7	21.4	7.1	7.1	3.6	3.6	0.0
	재전입자	5	40.0	20.0	0.0	20.0	0.0	0.0	20.0	0.0
가구경제수준	상	28	57.1	14.3	7.1	14.3	0.0	3.6	3.6	0.0
	중	59	57.6	16.9	6.8	6.8	5.1	3.4	1.7	1.7
	하	15	40.0	13.3	20.0	6.7	13.3	6.7	0.0	0.0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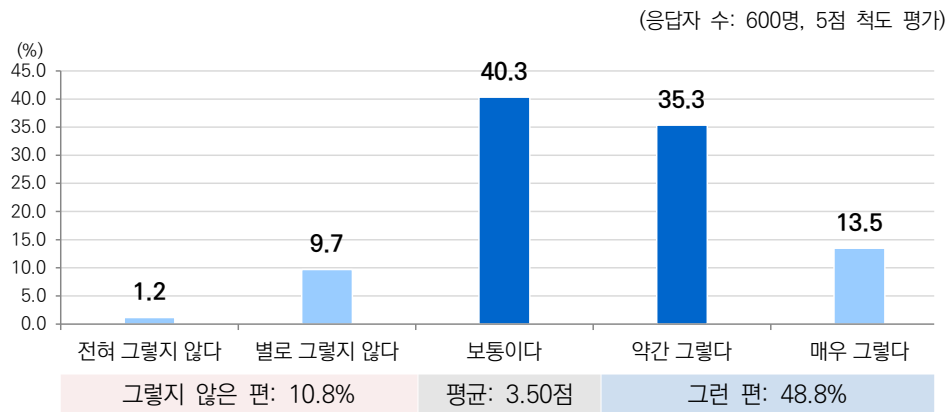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부산에 남아 있더라도 서울·수도권 수준의 교육·문화·일자리 인프라를 지역 내에 분산 구축해야 한다. 대학·연구기관·기업 R&D 센터 유치,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연령·학력별로 선호하는 기회를 부산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성 청년의 다양한 정주 욕구(생활환경·안전·돌봄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거·돌봄·커뮤니티 공간을 권역별로 조성해야 한다. 셋째, 해외 경험 수요가 높은 고학력 청년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교환학생 프로그램과 귀국 후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부산이 국제적 인재를 기르고 유인하는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인프라·프로그램 확충이 이뤄질 때, 부산 청년의 지역 이탈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 48.8%만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고 40.3%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부산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산의 매력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

이 부산에 남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림 4-13〉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는 부산 거주유형에 따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계속 거주자의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는 5점 평균 3.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재전입자(3.57점), 전입자(3.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7〉 평균 차이 검정: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07	3.52	0.933	0.506	0.613
	여성	293	3.48	0.834		
연령	15~19세	162	3.56	0.939	1.144	0.319
	20~24세	197	3.43	0.870		
	25~29세	241	3.53	0.861		
성별*연령별	15~19세 남성	83	3.69	0.974	2.116	0.062
	20~24세 남성	101	3.50	0.890		
	25~29세 남성	123	3.43	0.933		
	15~19세 여성	79	3.42	0.886		
	20~24세 여성	96	3.35	0.846		
	25~29세 여성	118	3.64	0.770		
거주지역	동부산권	129	3.50	0.830	1.058	0.366
	서부산권	157	3.46	0.902		
	중부산권	260	3.48	0.902		
	원도심	54	3.70	0.882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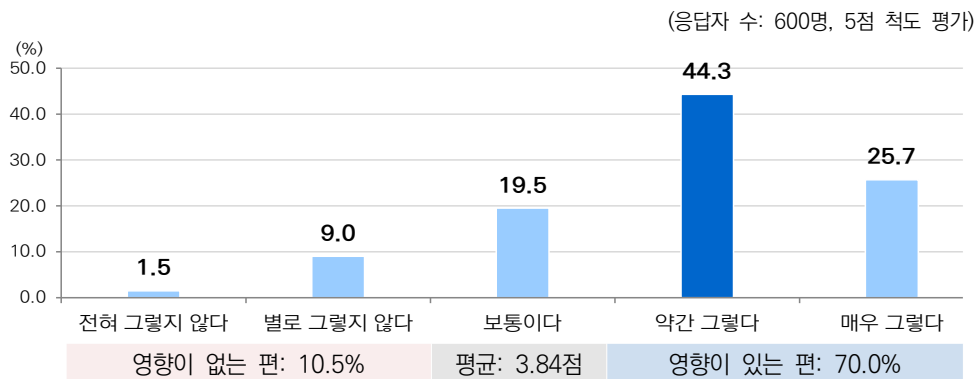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t	유의확률
최종학력	고졸 이하	148	3.49	0.929	0.030	0.971
	대학 재학	269	3.51	0.879		
	대졸 이상	183	3.50	0.864		
직업	학생	401	3.51	0.914	0.962	0.410
	회사원	77	3.36	0.742		
	취/창업 준비	78	3.58	0.919		
	기타	44	3.59	0.787		
경제활동경험	있음	437	3.52	0.871	0.729	0.466
	없음	163	3.46	0.925		
부산거주유형	계속 거주자	414	3.58	0.876	6.316	0.002**
	전입자	156	3.29	0.894		
	재전입자	30	3.57	0.817		
가구경제수준	상	162	3.50	0.914	0.916	0.401
	중	340	3.54	0.890		
	하	98	3.40	0.822		

* p<0.05, ** p<0.01, *** p<0.001

(2) 수도권 집중 현상과 청년 경쟁력 인식

부산 청년들은 지역 간 격차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의 미래 경쟁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있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심각도」 조사 결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은 71.3%에 달했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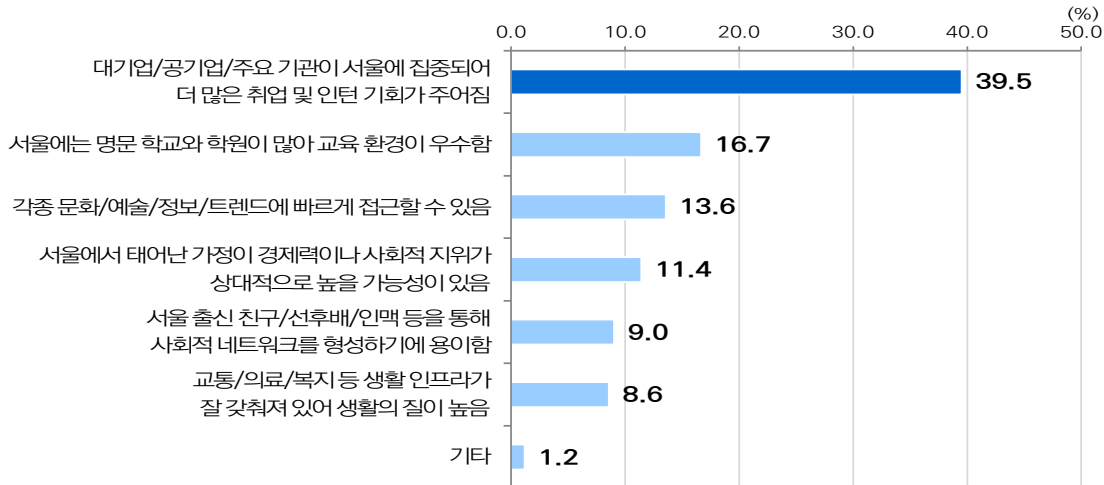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이 제공하는 ‘기회’의 차이에 있다고 분석된다. 서울 출생 및 거주가 개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0.0%가 ‘영향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4-14〉 서울 출생 및 거주가 개인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이들이 꼽은 이유로는 ‘대기업/공기업/주요 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더 많은 취업 및 인턴 기회가 주어짐’(39.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명문 학교와 학원이 많아 교육 환경이 우수함’(16.7%), ‘각종 문화/예술/정보/트렌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음’(13.6%)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서울 출생 및 거주자 개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편(약간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자 기준, 응답자 수: 420명, 보기 제시)



〈그림 4-15〉 서울 출생 및 거주자 개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이 분석은 청년들이 느끼는 지역 격차의 본질이 단순히 지리적 차이가 아닌, ‘기회’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압도적인 기회 프리미엄을 제공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 부족’을 반증하며,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지역 청년정책은 수도권에 기회 집중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충분한 성장과 발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부산만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 청년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3) 소결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강하게 고려하면서도, 현실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불안정한 정주 의향’을 보였다. 특히 20대 중후반의 취업 준비기와 고교 졸업 직후 고교생, 고졸 이하 청년, 경제활동 미경험자는 이탈 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부산에 남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일자리 부족’(57.8%)과 ‘진학 기회 부족’(29.4%)이며, 수도권·해외로의 선호 이동지 비율이 70%를 넘어, 기회 불균형이 이탈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임이 드러났다.

한편, 부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은 평균 3.5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최근 전입자는 특히 낮은 자부심을 나타내 지역 소속감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상의 통합 결과는 축소사회 국면에서 부산이 청년을 붙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주 지원을 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만한 ‘기회형 인프라’를 지역 내에 분산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경력 형성 경로, 고등교육·전문훈련 기회, 균질한 주거·생활 인프라, 그리고 전입 청년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청년 정주 패키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종합적 정책 전환으로만 축소사회 속에서도 청년의 경제적 자율성과 사회적 연대감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부산 청년들은 삶의 핵심 가치를 가족·건강·정서적 안정에 두고 있으며, 물질적 성공보다 예측 가능하고 내재적 안전망을 중시한다. ‘가족’(3.89점)과 ‘신체적 건강’(3.87점), ‘정신적 건강’(3.84점)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도 ‘건강 유지’(28.6%)와 ‘화목한 가족 구성’(25.4%)이 경제적 성취나 학력·직업적 성공보다 우선되었다.

사회적 신뢰는 전통 권위 기관들(정치인·언론)에 대해 낮게 형성된 반면, ‘가족’(3.77점)과 ‘인공지능’(2.57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들은 데이터 기반·투명한 정보 제공과 개인적 연결망을 선호한다.

세대·계층·지역 간 갈등 인식이 매우 높아, 특히 기성세대와 청년(83.5%), 부유층과 서민층(76.2%), 성별(75.8%), 수도권·지방(71.3%) 간 갈등을 심각하게 느낀다. 이는 축소사회 진입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가족 구성 인식에서는 ‘결혼과 출산은 개인 선택’(93.3%, 85.5%)이라는 비혼·딩크 경향이 확산되었고, ‘동거 가능성’(76.8%)과 ‘반려동물 가족화’(86.2%)에 대한 수용성도 높았다. 동시에 ‘부모 부양 책임’(78.7%) 같은 전통적 돌봄 의무 인식도 유지되어, 새로운 가족 형태와 전통적 책임이 공존하

는 복합적 가족관이 형성되었다.

노동관에서는 여가·삶의 질 중시(81.8%)와 동시에 ‘일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64.8%)를 인정하는 이중적 태도가 관찰된다. ‘개인적 투자 매력’(45.7%)은 절반에 육박하나, 대다수는 여전히 근로 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한다. 부산 정주 의향은 ‘긍정적’(53.5%)이 다수이나 ‘부정적’(17.0%)도 적지 않으며, 특히 20~29세 취업 준비기 청년·고졸 이하·경제 활동 미경험자가 이탈 위험군으로 확인되었다. 이탈 이유의 57.8%가 ‘일자리 부족’이며, 선호 이동지는 서울·수도권(70% 이상)으로 집중된다.

2) 시사점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향과 관련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들이 내재적 가치로 인식하는 가족과 건강을 정책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생애주기별 돌봄·건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포용적 거버넌스와 갈등 전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을 단순 관리가 아닌 사회통합 기회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모든 청년이 참여하는 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및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혼·딩크·동거·반려 동물 가족화 등 새로운 가족 모델을 법·제도적으로 인정·지원하고,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유연한 노동 환경과 청년들의 금융 문맹 해소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유연근무·재택근무·자율 휴가 등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건전한 금융교육·소액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율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경쟁력 기반 ‘기회형 인프라’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일자리·교육·문화·R&D 등 수도권 수준의 기회 인프라를 권역별로 분산 구축하고, 산학관 협업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의 교육·취업·정주를 일괄 지원하는 ‘청년 정주 패키지’를 실행해야 한다.

이 같은 통합형·맞춤형 정책 전환만이 축소사회 속에서도 청년의 삶의 질과 공동체 연대감을 동시에 보장하고, 부산의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제5장.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향과 실천전략

1. 부산시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향

1) 축소사회와 부산시 청년정책의 과제

(1) 축소사회의 연쇄 수축과 청년 문제의 중층화

부산은 현재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경제·공간이 동시에 수축하는 ‘연쇄수축(Cascading Shrinkage)’의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였다. 1995년 388만 명이었던 인구는 2024년 326만 명으로 16.0%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감소율 -0.7%는 소멸위험 기준선(-0.15%)의 4.7배에 달한다(통계청, 2024).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3.0%로 전국 최초로 초고령 광역시에 진입하였으며, 합계출산율 0.75명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통계청, 2024). 한국고용정보원이 산출한 소멸위험지수는 0.490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이상호, 2024).

이러한 인구 수축은 경제 수축으로 직결된다. 경제활동인구 172만 9천 명(-0.3% YoY), 고용률 56.7%(전국 평균 하회), 건설업 -11.0%·소매·숙박음식업 -5.7%의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4). 창업 환경 역시 열악하여 20대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15.9%에 불과하며 자영업 비중도 52.3%로 고위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공간적 차원에서는 도심 공동화, 준공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중 증가, 빈집·공실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독일 라이프치히의 ‘스마트 축소’ 사례(김세훈, 2022; 강인호, 2019)가 제시하듯, 성장 패러다임 하에 구축된 도시 인프라와 현재 인구 규모 간의 구조적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구 수축은 재정 수입 감소 → 공공서비스 축소 → 청년 정주 기반 약화 → 추가 인구 유출이라는 ‘수축의 악순환(Shrinking Spiral)’을 심화시키며, 청년세대는 이 악순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핵심 주체이다.

이러한 구조적 흐름은 청년 문제를 개별 서비스의 공급 부족으로 보는 기존 관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인구감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고 그 조건 위에서 청년의 삶을 재설계하는, 제2장에서 제시한 ‘스마트 전환(Smart Transition)’의 원리를 청년정책에 본격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청년의 다차원적 이탈 압력의 구조화

2024 부산 청년 패널조사 결과, 부산 청년의 38.2%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으며 특히 20~26세에서는 이 비율이 51.6%에 달한다.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로 일자리(76%)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숫자 이면에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라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기회 구조·관계·세대 갈등이 중첩된 다차원적 현상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첫째, 경제적 이탈 압력이다. 부산 청년의 38.2%가 탈부산 의사를 갖고 있으며, 20~26세에서는 51.6%에 달한다. 이탈 이유의 76.0%는 일자리 부족과 질적 불일치이다(부산연구원, 2024). 한요셉(2017)의 분석에 따르면 첫 취업이 1년 지연될 경우 이후 10년간 누적 임금이 4~8% 감소하며, '요요 이행³⁾(Yoyo Transition)'이 보편화되고 있다(김영·황정미, 2013). 이러한 불안정 노동 경험은 자산 형성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둘째, 기회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이탈 압력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0%가 서울 출생 및 거주가 개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71.3%에 달한다. 부산이 아무리 좋은 청년 지원 사업을 제공해도, 청년들이 서울 거주 자체를 하나의 '스펙'으로 인식하는 한 정주 의향은 구조적으로 제약된다. 이는 개별 정책의 보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기회 구조 불균형의 문제이다.

셋째, 관계적·심리적 이탈 압력이다. 국무조정실(2024)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 5,484명 중 63.1%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62.5%가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밝혔다. 부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고독사 발생 지역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기로 이어지는 복합적 위기 구조를 보여준다. 지역 사회와 단절된 청년의 증가는 인구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이탈'로서, 향후 실질적 인구 유출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넷째, 세대적 이탈 압력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3.5%가 세대 갈등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72년 노년부양비는 청년 1명당 노인 104.2명에 달하고,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2050년에 2021년의 42.5%인 164만 9천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미래에

3) 교육과 취업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불안정한 경력 경로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담의 무게를 보여준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0년 청년층 취업자 수는 현재의 42.5% 수준으로 급감하는 반면 정치적 권력은 고령층으로 쏠리는 ‘역인구구조 덩(Demographic Trap)’이 심화되면, 청년의 정책 의제는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 세대적 불균형의 누적이 청년들의 지역 사회에 대한 귀속감을 약화시키는 근본 배경이 되고 있다.

(3) 부산시 정책 정책의 과제

부산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담당 조직은 2015년 2명 규모의 팀에서 2025년 29명의 청년정책과로 성장하였고, 예산은 2019년 973억 원에서 2025년 4,146억 원으로 6년간 4.3배 증가하였다. 부산청년센터를 포함한 29개소의 청년공간도 운영 중이다. 이러한 규모의 투자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는 부산시의 정책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청년 사업의 인지도 역시 50% 미만에 머무는 수준이다.

정책 접근의 주요 장벽은 까다로운 신청 자격(45.2%)과 정보 부족(30.6%)이다. 예산 구조 역시 2020년 일자리 중심(63.1%)에서 2025년 교육 중심(57.6%)으로 이동하였으나, 청년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창출·소득 지원과의 괴리가 지속된다. 청년 참여 관련 예산 비중은 전체의 0.7%에 불과하며, 거버넌스 구조 역시 형식화된 참여에 머물러 있다. 사업이 부서별로 분절되어 일자리·주거·복지의 유기적 연계가 부재하고,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전달 방식은 ‘인지적 포기(Cognitive Dropout)’를 초래하고 있다.

(4) 청년 가치관의 변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요구

부산 청년의 가치관과 삶의 지향은 기존 정책이 전제한 틀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정책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하는 구조적 신호이다.

앞선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이 가장 중시하는 삶의 영역은 가족(3.89점), 신체 건강(3.87점), 정신 건강(3.84점)이며, 일(3.56점)은 상대적으로 낮다. 81.8%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하지 않고 쉬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64.8%는 동시에 일이 사회적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복합적

인식이 나타난다. 공적 신뢰 체계에서 정치인 신뢰도는 1.81점으로 최저이며, AI에 대한 신뢰도(2.57점)가 언론(2.22점)과 정치인을 상회한다. 이는 AI·디지털 기반의 정책 소통과 서비스 전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주거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졌다. 결혼을 개인 선택으로 보는 비율 93.3%, 자녀 없는 부부도 완전한 가족이라는 인식 85.5%, 혼전동거 수용 76.8%,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비율 86.2%에 달하며, 이러한 다양한 가족·생활 형태에 대응하는 정책 유연성이 요구된다. 또한 45.7%가 가상화폐·주식 투자가 노동보다 매력적이라고 응답하는 등, 전통적 노동-소득 경로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산형성 경로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 전환은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삶의 설계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포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핵심은 청년들의 변화하는 가치관에 대한 정책적 포착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가진 노동관, 경제관, 가족관, 사회관 등 다양한 가치의 변화를 포착하여 그들의 가치관을 고려한 정책의 설계를 통한 새로운 방향을 조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청년정책 재구조화의 기본원칙과 핵심방향

(1)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

① 원칙 1. 축소의 현실 수용과 스마트 전환

부산의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는 단기간에 역전되기 어려운 구조적 추세다. 청년 유입을 통해 인구를 회복하겠다는 '역전의 꿈'에 정책을 기대면, 실현되지 않을 목표를 향해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 증가와 외부 유입을 전제한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축소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성은영 외, 2018; 김태영 외, 2023). 독일 라이프치히, 일본 도야마의 사례가 보여주듯(강인호, 2019), 인구 감소 자체를 막으려는 정책보다 축소에 최적화된 도시 구조와 생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이는 빈집·유휴공간의 청년 친화적 재활용, 과잉 인프라의 합리적 재배치, 생활권 중심 소규모 서비스 거점 구축 등을 포함한다.

청년정책에 이 원칙을 적용하면, '더 많이 제공'하는 양적 확대에서 '더 잘 설계'하는 질적 전환으로 방향이 바뀐다. 줄어드는 재정 안에서 청년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자원의 재배치, 기존 인프라의 창의적 재활용이 핵심 전략이 된다. 도시 축소로 증가하는 빈집과 공실을 청년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다.

② 원칙 2. 청년 삶의 질 중심 패러다임 전환

청년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인구 유입·정착에서 청년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 일하고, 배우고, 쉬고, 관계 맺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인구(Living Population)’ 및 ‘관계인구(Relational Population)’ 개념을 정책 지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 구조 속에서도 부산을 매력적인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전략으로, 파리의 ‘15분 도시(15-Minute City)’ 개념(Moreno, 2021)이 참조 모델이 될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뿐 아니라 부산을 일터·학습터·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관계인구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관점이 새로운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 삶의 질 지표(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문화 접근성, 자율성)를 청년정책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도 이 원칙의 실천적 함의다.

③ 원칙 3. 생애 통합성과 연속성의 원칙

제3장의 진단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행 청년정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가 분절된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청년이 직면하는 문제는 결코 단일하지 않다. 취업 문제는 주거 불안과 연결되고, 주거 불안은 정신건강 악화로, 정신건강 문제는 다시 구직 포기로 이어진다. 이 복합적 문제에 분절된 서비스가 각각 대응할 때 청년은 여러 창구를 전전하다 ‘인지적 포기’에 이르게 된다. 청년의 삶은 일자리·주거·건강·관계가 긴밀히 연결된 총체적 생애 과정이다. 현재의 부서별 분절 방식으로는 이 복잡성에 대응할 수 없다. 핀란드 오희야모 센터 모델이 제시하듯 고용·주거·복지·정신건강·문화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이 생애 전환기마다 복합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 부족과 자격 조건의 장벽에서 비롯된 ‘인지적 포기’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표 5-1〉 헬싱키 ‘오호야모 센터(Ohjaamo Centre)’ 운영 사례

- 개요
 - 2015년 유럽사회기금 지원으로 시작된 오호야모 센터는 15~29세 청년들에게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종실(Ohjaamo)’ 콘셉트로 설립
 - 청년들이 예약 없이 쉽게 방문해 고용, 교육, 복지·주거, 건강·정신건강, 문화·여가 등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직 및 운영 모델
 - 지방정부(시청)·중앙정부(사회보험청·TE오피스)·시민단체 전문가가 한 공간에 상주
 - 센터장 주재의 일일 사례관리 회의 및 주간 워크숍으로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
 - 개인 성과 대신 센터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핀란드 공공기관 성과 평가 방식 적용
- 주요 서비스
 - 고용·창업 상담: 개인 맞춤형 직업·창업 지원 및 채용 박람회·워크숍 개최
 - 교육·훈련 안내: 무상직업훈련, 대학 입학 정보 제공
 - 복지·주거 지원: 소득보장·주거수당, 사회주택 프로그램 연계
 - 정신건강·복지 상담: 심리상담 및 위기 개입 서비스
 - 문화·여가 정보: 청년 동아리, 체육·문화 활동 프로그램 안내
- 성과 및 효과
 - 설립 18개월간 6,000명 방문, 92%가 사회 통합감 경험
 - 2019년 전국 60여 개 지방정부에 확산, 15만6천여 회 방문
 - 방문자 중 63%가 실업 상태였으나, 센터 이용 후 취업·교육·주거 등 통합적 지원 점점 확보
 - 다양한 주체 협업 모델이 핀란드 전역 청년 서비스 허브로 표준화

자료: 신영규(2021),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년 가을호, 통권 18호, pp.79-90

④ 원칙 4. 청년 주도와 사회적 공동 창조

제3장에서 확인한 거버넌스의 형식화와 제4장에서 드러난 공적 기관에 대한 극단적 불신(정치인 신뢰 1.81점)은 같은 문제의 두 얼굴이다. 행정이 기획하고 청년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청년을 수혜 대상이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공동 실행자로 전환하는 것만이 이 신뢰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 방법이다. 청년정책의 설계·실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 창조(Co-Creation)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김기원, 2022). 이는 형식적 자문위원회 참여를 넘어, 예산 편성권·사업 우선순위 결정권을 포함하는 실질적 거버넌스 권한의 이전을 의미한다. 청년에 대한 신뢰 부여와 자율성 보장은 이탈을 막고 정주 의사를 높이는 중요한 비경제적 정착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2〉 유럽연합(EU) 청년 회의(Youth Dialogue) 개요

1. 기본 개념 및 목적
 - EU 청년 회의는 EU 청년전략 2019-2027 프레임워크 내에서 진행되는 청년과 정책결정자 간의 공식적인 대화 메커니즘
 - 청년들의 의견, 관점, 필요가 EU 청년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보장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구조화된 시민참여 과정
2. 운영 구조 및 체계
 - 18개월 주기제: 각 주기마다 EU 청년장관이사회가 설정한 특정 주제에 집중
 - 3국 순환의장제: EU 순환의장국 3개국이 공동으로 주도
 - 국가별 실행체계: 각 회원국별 국가실무진이 청년단체, 정책결정자와의 협의 담당
 - 조정기구: 유럽위원회, 국가기관, 유럽청년포럼 등이 참여하는 조정그룹 운영
3. 참여 방식 및 과정
 - ① 국가단위 참여: 주로 국가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단체 및 개인 참여
 - ② EU단위 참여: 국제 비정부 청년단체를 통한 직접 참여 가능
 - ③ 단계별 과정: 국가별 청년 협의 및 활동 → EU 청년회의(연 2회) → 공동 메시지 도출 → EU 이사회 정책문서 채택
4. 주요 성과 및 영향
 - 11개 청년목표 수립(2018년): 청년 회의를 통해 개발된 핵심 정책 어젠다
 - ① EU와 청년의 연결 ② 성평등 ③ 포용사회 ④ 정보와 건설적 대화 ⑤ 정신건강과 웰빙 ⑥ 농촌청년 발전 ⑦ 양질의 일자리 ⑧ 양질의 교육 ⑨ 참여공간 확대 ⑩ 지속가능한 녹색유럽 ⑪ 청년단체와 유럽프로그램
5. 최근 현황 (제11주기, 2025.1-2026.6)
 - 주제: “EU와 청년의 연결”(청년목표 1번)
 - 주도국: 폴란드-덴마크-키프로스 3국 순환의장제
 - 참여규모: 약 30,000명의 유럽 청년들이 18개월간 참여
6. 특징 및 혁신성
 - ① 다층적 거버넌스: 지역-국가-EU 차원의 체계적 연계
 - ② 정책 직결성: 청년 의견이 EU 이사회 결의문으로 직접 반영
 - ③ 포용적 접근: 소외계층 청년과 비활동 청년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 ④ 지속적 모니터링: 정책 이행 과정 추적 및 성과 평가 체계
7. 과제 및 발전 방향
 - 주요 과제: 이사회 결의문의 실질적 이행 보장 및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선 방향: 청년-정책결정자 간 신뢰 강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및 환류 시스템 강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4). EU Youth Dialogue. https://youth.europa.eu/strategy/euyouthdialogue_en

(2) 청년정책 재구조화의 핵심 방향

① 방향 1. 미래 노동 전환 대응

현재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지금 있는 일자리에 청년을 연결’하는 매칭 모델에 기반한다. 그러나 AI·자동화에 의한 직업 구조 재편, 플랫폼·긱 경제의 확산, 교육-훈련-구직을 반복하는 요요이행(Yoyo Transition)의 일상화, 그리고 2030년 이후 본격화될 취업자 수 감소라는 복합적 구조 전환은 노동 생태계 자체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이 방향은 단순 취업 연계를 넘어, AI

전환 시대 청년의 노동 역량 강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 일자리 이행 체계 구축을 포괄한다.

② 방향 2. 청년 경제 자립과 생활 기반 보장

설문 조사에서 청년들의 가장 강한 정책 수요는 소득 지원(50.4%), 고용 지원(48.9%), 자산형성 지원(36.0%)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산형성 저축 상품 선호도는 52.9%에 달했다. 이는 청년이 원하는 것이 단기 현금이 아니라 생애 자립 기반의 구조적 조성임을 보여준다. 이 방향은 생애 자산 형성 경로 설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득 안전망 강화, 그리고 축소사회의 빈집·유휴 자원을 활용한 청년 정주 생활 기반 조성을 아우른다.

③ 방향 3.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생태계 혁신

부산의 합계출산율 0.75명은 단순한 저출생 수치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신호다. 제4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년의 93.3%가 결혼을 선택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보편화되는 현실에서, 결혼·출산 장려 중심의 기존 접근은 효과를 낼 수 없다. 이 방향은 청년 가족 형성의 장벽(경제적 비용, 돌봄 인프라 부족, 성별 불균형 돌봄 부담)을 구조적으로 제거하고, 동시에 고령화 사회의 돌봄 수요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는 돌봄 경제의 재설계를 핵심으로 한다.

④ 방향 4. 청년 사회통합과 공동체 회복

고립·은둔 청년의 증가, 청년 고독사 전국 1위, 공적 신뢰의 붕괴, 세대 갈등의 전면화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고갈에서 비롯된다.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상태는 청년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청년들에게 단순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립 청년의 조기 발굴과 통합,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상생 체계 구축, 지역 내 청년 공동체 인프라 재건을 통해 부산을 '함께 살 수 있는 도시'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적 신뢰 회복은 이 방향의 핵심 성과 지표다.

⑤ 방향 5. 미래세대 권리와 포용적 거버넌스

‘청년 참여·거버넌스’가 청년들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참여 기회 제공을 넘어,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청년 쿼터제, 청년의회 법제화, 미래세대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인구 구조 고령화에 따른 ‘노년 민주주의(Gerontocracy)’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청년이 부산의 미래를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표 5-3〉 우리나라 주요 지자체의 청년 참여 예산제 운영 사례

지자체	운영 명칭	주요 특징	예산 규모	참여 방식
서울특별시	청년자율예산제·시민참여 예산제 통합	2024년 온라인 시민투표로 10개 사업 선정 ↔ 2025년 ‘청년분과’ 신설·심의 권한 확대	51억 3,300만원	온라인 시민투표·정책제안 → 심의·의회 의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참여예산 온라인 소통 플랫폼	2024년 9월 개설, 정책 제안·공감 투표·소관부서 검토 절차 운영	-	플랫폼 제안·공감투표 → 15개 공감 이상 제안 검토
의정부시	청년자율형 주민 참여예산	행안부 평가 ‘청년참여 분야’ 최우수상 수상, 청년위원회 신설, 6개 사업 운영	2억원 (2025년 예산)	청년위원회 제안 심의 → 예산 반영

2. 청년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실천전략

축소사회의 현재를 살고 있는 부산 청년이 직면한 과제는 단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복합적·구조적 문제이다. 인구·경제·공간의 연쇄수축, 경제·기회·관계·세대 갈등이 중첩된 다차원 이탈, 예산 확대에도 체감되지 않는 정책 투자의 역설, 삶의 질과 관계 중심으로 이동한 청년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4대 구조적 과제는 기존의 일자리 지원·참여 거버넌스 중심의 정책 틀로는 더 이상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의 생애 경로와 부산의 구조적 취약성에 조응하는 5대 거시 전략 영역을 도출하였다. ① 미래 노동 전환 대응은 AI·디지털화와 플랫폼 노동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영역이며, ② 경제 자립·생활 기반 보장은 소득 안전망·자산형성·주거 기반을 통합하는 영역이다. ③ 사회 재생산·돌봄 생태계 혁신은 저출생 위기와 돌봄 공백에 대한 구조적 처방을, ④ 청년 사회통합·공동체 재건은 고립·세대 갈등·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응답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⑤ 미래세대 권리·포용 거버넌스는 청년이 부산의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영역이다.



〈그림 5-1〉 축소사회 부산 청년정책 재구조화 5대 전략 영역

1) 미래 노동 전환에 대응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AI·자동화·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정순기 외(2024)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8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AI·자동화에 취약한 중간 숙련 직종이 대규모로 소멸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경제의 확산으로 전통적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김영·황정미(2013)가 명명한 ‘요요 이행(Yoyo Transition)’이 청년층의 보편적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 한요셉(2017)의 분석이 보여주듯 첫 취업이 1년 지연될 경우 이후 10년간 누적 임금이 4~8% 감소하며, 이는 자산형성·주거·가족 형성 전반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생애 연쇄 지연’ 효과를 초래한다. 탈부산 의사를 밝힌 청년의 76.0%가 일자리 부족과 질적 불일치를 이유로 꼽고 있는 만큼(손현일, 2024), 노동시장 정책의 근본적 재설계 없이는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렵다.

(2) 주요 실천 과제

① 지역 전략 산업 연계 미래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부산의 해양·물류, 바이오헬스, 디지털·AI, 문화콘텐츠의 4대 전략 산업과

연계된 청년 인재 양성 경로를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 교육 중심으로 이동한 청년정책 예산(2025년 57.6%)이 단순 훈련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취업 연결 학습(Work-Connected Learning)’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포르투갈 포르투(Porto)시의 TERA 전략은 지방도시가 수도 집중을 극복하고 청년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킨 대표적 성공 사례로 주목된다(Eurocities, 2024). 포르투는 ‘디지털 인재 관측소(Digital Talent Observatory)’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의 인재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훈련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부산에서도 4대 전략 산업별 인재 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대학·직업훈련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산학협력 이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훈련 기간 중 생계 부담을 줄이는 ‘리스킬링 생활지원금’ 제도를 병행하여 참여 기피를 막고, 훈련 이수 후 취업 연계 및 고용 유지를 정기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표 5-4〉 포르투시의 TERA 전략(Talento·Evoluir·Reter·Atrair)

□ 추진배경⁴⁾

- 포르투시는 2016년까지 주요 기술·청년 인재의 1/3 이상을 타 지역으로 유출하며 “뇌유출(brain drain)” 현상을 경험
- 이를 해결하고자 2022년부터 40만 유로 규모의 통합 계획인 TERA 전략을 시행

□ 핵심 이니셔티브

- ① 인재 관측소(Talent Observatory): 노동시장 데이터와 트렌드를 실시간 분석·공유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43만 회 방문·12만 건 지원서 접수
- ② 포르투 스킬 아카데미(Porto Skills Academy): 코딩·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42 Porto, Ensico@Porto)으로 2,550명 이상 수료
- ③ 포르투 썸머 아카데미(Porto Summer Academy): 94명 학생과 44개 기업 매칭, 96%가 기업체험 만족도 보고
- ④ 취약계층·이민자 지원: Porto_4_All 프로젝트로 56명 이민자 교육, 73% 취업 성과 달성

□ 주요 성과

- ① 837개 기업·1,450명 구직자 참여 네트워킹 이벤트 운영
- ② 기술 인재 수 크게 증가, 글로벌 컨퍼런스(Web Summit 등) 참가자 3만5천명 접촉
- ③ 유로시티스 어워드 후보 및 EU 혁신 이니셔티브로 선정되어 국제적 인정 획득

□ 핵심 시사점

TERA 전략은 데이터 기반 플랫폼과 맞춤형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결합해 “유치→육성→유지”를 순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도시 단위 인재 생태계 구축의 모범 사례를 제시

자료: Eurocities. “How Porto Is Reversing Brain Drain to Become a Talent Magnet.” 2024.

4) 인재 유치(Talent), 육성(Evolve), 유지(Retain), 유입(Attract)의 순환 생태계)

② AI·자동화 취약 직종 조기경보 및 직무 전환 지원 체계화

AI·자동화로 인한 직종 소멸 위험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청년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자동화 위험 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 취업 청년의 직종 분포를 정기 분석하고, 위험도가 높은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리스킬링 경로를 3단계(기초 디지털 역량, 직무 전환 심화, 신산업 취업 연계)로 체계화한다. 이는 직업 이행 안내 시스템의 성격을 가지며, 산업 전환 1~2년 전부터 조기에 교육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③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IT 프리랜서·디지털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종사 청년은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은 사용자로부터의 종속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지위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산재보험,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 차원의 ‘플랫폼 종사자 권리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 조정 절차, 소득 기반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소득 안정화 기금 조성, 공제조합 형태의 상호부조 네트워크 설립 지원을 병행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보험 특례 적용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④ 청년 일자리 보장제 파일럿 추진 및 직업교육 역량 강화

민간 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공공이 ‘최후의 고용주(Employer of Last Resort)’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파일럿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보조, 생태환경 관리, 지역 돌봄 지원,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취업 취약 청년에게 공공 일자리를 보장하되, 단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직무역량 향상과 정규직 전환 연계를 의무화하여 디딤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심화-전문의 3단계로 구성된 ‘부산 청년 직업역량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미래 산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데이터 분석,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문가 1:1 멘토링 매칭과 청년 주도 프로젝트 연구비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김문길, 2022).

2)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생활 기반 보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부산 청년의 정책 수요 조사에서 소득 지원(50.4%), 취업 지원(48.9%), 자산형성 지원(36.0%)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손헌일, 2024).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불안이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 자체를 구축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 준다. 첫 취업 지연이 누적 임금 감소로 이어지고(한요셉, 2017), 그 결과 자산 형성이 불가능해지며, 주거 불안과 가족 형성 포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청년 세대의 현실이다. 청년 1인 가구의 27.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손헌일, 2024) 자산 축적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잉여 소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한편 부산 도심의 높은 빈집·공실 비율은 청년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기회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소득·자산·주거를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의 생애 사다리'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접근을 취한다.

(2) 주요 실천과제

① 단계별 청년 자산형성 로드맵 및 매칭형 금융 지원 체계 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생애 단계별로 지원하는 3단계 자산형성 로드맵을 설계하고, 단계별로 연동되는 공공 매칭형 금융 상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이하 취업 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취업 이전 단계의 청년이나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는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1단계(사회 진입기, 19~24세)에는 소액 저축 습관 형성을 위한 '부산 청년 첫걸음 통장'(월 10만 원 저축 시 시가 10만 원을 매칭하여 3년 만기 시 720만 원 수령)을 운영하고, 2단계(정착기, 25~29세)에는 주거 전환 자금·창업 초기 자금과 연계된 적금 상품, 3단계(정주시, 30~34세)에는 부산 정착을 조건으로 한 주택 구입·임차 지원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 공간(28개소)과 연계한 무료 공공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채 관리, 공공금융 상품 활용, 투자 기초 역량을 지원해야 한다. 대학·직장·청년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청년정책 서비스'를 운영하면, 정보 부족과 접근 장벽으로 인한 '인지적 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부산광역시, 2023).

② 청년 소득 안전망 강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소득 안전망의 핵심은 현행 사회보험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1년 미만 단기 취업 경험자, 프리랜서 경력자, 비정형 노동 종사자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 촉진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 하위 30%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역화폐(동백전)로 지급하는 ‘부산 청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연계는 청년 개인의 소득 지원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진작을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부산시 자체 보완 급여를 신설하여 중앙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청년의 사각지대를 흡수하고,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이소영, 2019).

③ 직주근접 청년 정주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 인센티브 설계

청년의 지역 이탈의 주요 요인이 일자리와 주거의 불일치임을 감안하여, 일터와 주거가 근접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착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의 생활 편의성과 정주 매력도를 동시에 높이는 모델로 참조할 만하다. 부산에서는 센텀시티, 에코델타시티, 북항 재개발지구 등 4대 전략 산업 집적지 인근에 청년 우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해당 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 교통비·주거비 보조금을 패키지로 연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부산 거주 5년 이상 청년에게 지방세 감면, 지역화폐 추가 지급, 청년 금융 상품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부산 정착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축적형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3) 사회 재생산·돌봄 생태계 혁신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부산의 합계출산율 0.75명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통계청, 2024),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사회 재생산 기반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송유미·이제상(2011)이 지적하듯 저출산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구조적 산물로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돌봄의 성별 불균형이 중첩된 결과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93.3%가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고, 85.5%가 자녀 없는 부부도 완전한 가족이라고 응답한 것은 가족 구성에

대한 가치관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출산 장려 중심의 기존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청년이 가장 중시하는 삶의 가치가 가족(3.89점)과 건강(3.87점)임에도 일과 돌봄을 병행할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이 전략은 출산 장려보다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2) 주요 실천과제

① ‘부산형 생애 가족 통합 지원 체계’ 구축

결혼 준비→임신·출산→영아 돌봄→유아 양육→초등 돌봄의 전 생애 가족 형성 단계를 포괄하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부산의 가족 형성 지원 서비스는 산모건강관리원·육아종합지원센터·가족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청년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서비스 미로’ 현상이 발생한다. 핀란드의 ‘네우볼라(Neuvoila)’ 시스템은 임신부터 아이가 취학할 때까지 지역 보건소 기반의 전담 간호사가 가정별로 배치되어 산전·산후 건강관리, 육아 정보 제공, 가족 위기 조기 발견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이다. 네우볼라의 이용률은 거의 100%에 달하며 핀란드의 낮은 아동 빈곤율과 영아 사망률의 기반이 된다(신영규, 2021). 부산에서도 통합 창구를 구축하고 전담 케어매니저를 배치하여 임신부터 초등 입학까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생애 가족 사례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부산광역시, 2023). 이 과정에서 한부모·비혼·동거·재혼·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이 없도록 제도적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돌봄 노동의 사회화 및 성별 균형 분담 체계 강화

돌봄 노동이 여성 청년의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저출생 대응과 성 평등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다. 스웨덴과 아이슬란드의 사례처럼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적 활성화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적 접근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 인증 기업에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실적을 평가 지표로 포함하고,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야간·주말 긴급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을 구·군별로 지정·운영하고, 청년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공동 육아 협동조합에 초기 운영비·공간·전문 코칭을

지원하며, 청년이 운영하는 사회적 돌봄 기업에 공공 위탁 우선권을 부여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돌봄 공급 확대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③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및 사회적 재생산 기반 확충

부산 청년의 가족 가치관은 빠르게 다원화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혼전동거 수용 76.8%,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 86.2%, 노부모 부양을 가족 의무로 보는 비율 78.7%에 달하는 만큼 정책이 전통적 핵가족 모델만을 전제해서는 광범위한 청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 비혼·한 부모·동거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육아 지원 수혜 조건에서의 가족 형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불안·양육비 부담·경력 단절을 동시에 해소하는 '3대 재생산 장벽 제거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제3차 부산시 청년정책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로 편입해야 한다.

4) 청년 사회통합 및 공동체 재건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부산 청년의 사회적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2024)의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고립·은둔 청년 5,484명 중 63.1%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62.5%는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부산은 전국에서 청년 고독사 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이다. 최은정·정영훈(2018)은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와 강한 연관성을 가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임지혜·김재우(2020)는 친구관계의 단절이 청년 자살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한국리서치(2025)의 세대인식조사에서 83.5%가 노년-청년 세대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이현출(2018)은 이를 '실버 민주주의'의 구조화로 설명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청년 세대의 정치적 이익 대표성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박채림·한창근(2023)의 연구는 공적 신뢰의 약화가 청년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복합적 사회 위기는 경제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연결과 공동체 회복을 핵심 목표로 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주요 실천과제

① 청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및 고립 청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부산시 차원의 ‘청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 청년 조기 발굴 시스템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1년 일본이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책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사례, 영국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하고 국가보건서비스(NHS) 내에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체계를 통합한 사례는, 고독·고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공중보건 과제임을 제도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부산에서는 청년들의 일상 접점 시설과 협력하는 ‘생활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고립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발굴된 청년에게는 전담 케어매니저(Case Manager)를 배정하여 공공 일자리 연계·정신건강 지원·주거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청년 생애 안전망(Youth Life Safety Ne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 복지 서비스가 아닌 고립 상태에서 사회로의 점진적 재연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재통합’ 경로로 설계되어야 한다.

② 청년 복합문제 해결 협의체 및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고용·주거·정신건강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다차원 과제이므로, 단일 부서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센터·복지관이 협력하는 ‘청년 복합문제 해결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립·위기 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부산광역시, 2023). 변금선·이혜림(2023)의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불안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에 따라 구조적으로 차별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개인별 생애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신건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 12회 무료 심리상담 쿠폰을 청년에게 제공하고, 청년 공간(35개소, 2025년 기준) 내 전담 심리상담사를 정기 배치하며, 군 전역·대학 졸업·첫 취업·이직 등 생애 전환기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안전 점검 서비스’를 도입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AI 신뢰도(2.57점)가 정치인(1.81점)을 상회하는 부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AI 챗봇 기반의 1차 정신건강 스크리닝 서비스를 구축하여 심리적 장벽 없이 24시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③ 세대 통합 멘토링·교류 프로그램 체계화

세대 갈등의 심각성(83.5%)을 역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세대 간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한국리서치, 2025). 지역 기업인·전문직·은퇴자와 청년을 1:1로 연결하는 ‘부산 청년-중장년 세대 잇기 멘토링 사업’을 체계화하여 진로 멘토링, 창업 노하우 전수, 지역 네트워크 공유를 지원해야 한다. 청년이 디지털·IT 기술을 노년층에게 교육하고, 노인이 지역 생활 지식과 직무 경험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상호 학습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호혜적 관계 형성을 통한 세대 간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 분기별 세대 교류 행사와 세대 통합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정례화하고,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지역 문화·예술·미식 프로그램에 소규모 공모 지원을 제공하여 부산만의 청년 문화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5) 미래세대 권리·포용 거버넌스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는 청년 세대의 이해를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현출(2018)은 고령화에 따른 ‘실버 민주주의(Silver Democracy)’의 도래가 청년 세대의 정치적 발언권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킨다고 경고하며,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통계청(2024)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2021년의 42.5%인 164만 9천 명으로 급감하고, 2072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04.2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예견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이러한 구조 속에서 현 세대의 단기적 이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은 미래 세대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부담을 전가한다. 그럼에도 현재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청년 참여 비중은 0.7%에 불과하며,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형식적 자문에 머물고 있다(손헌일, 2024). 청년의 공적 신뢰 결핍-정치인 신뢰 1.81점-은 현 거버넌스가 청년에게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전략은 청년이 부산의 현재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래 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실천과제

① 청년정책 공동결정제 도입 및 대의제 청년 거버넌스 운영

청년정책의 실질적 결정권을 청년에게 부여하는 ‘청년정책 공동결정제’를 도입한다. 연간 1억 원 이상의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청년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행정과 청년이 50:50으로 참여하는 ‘공동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부산광역시, 2023). 이를 위해 16개 구·군별로 ‘청년자치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청년 예산의 20% 이상에 대한 자율 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청년 제안 사업에 대해 3개월 이내 서면 회신을 의무화하는 피드백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김상봉·나경태(2022)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여 청년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닌 실질적 결정권과 예산 권한의 부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청년 정책실험실(Policy Lab)’을 운영하여,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예산으로 청년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실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상향식 정책 혁신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② 미래세대 영향평가제 도입 및 청년정책 기반 법제화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구조적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미래세대 영향평가(Future Generations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웨일스(Wales)는 2015년 제정된 ‘미래세대 웰빙법(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Act)’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정책 결정 시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독립적 감시 기구인 ‘미래세대 위원(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을 임명하였다. 이 제도는 세대 간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과 청년 삶의 질 개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산에서는 100억 원 이상 사업, 10년 이상 장기 도시계획, 주요 사회보장 정책 변경 시 미래세대 영향평가를 의무 실시하고 결과를 시의회와 청년의회에 공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현출(2018)이 강조하듯 고령화 시대의 세대 간 정의 실현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③ 청년 자율예산제 확대 및 디지털 참여 예산 플랫폼 구축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0.7%에 불과한 청년 참여 예산 비중을 단계적으로 5%(약 225억 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실질적 재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확대된 예산은 청년자치회·청년 위원회가 사업 기획과 예산 배분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청년 자율예산’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공개 투표(디지털 참여 예산 플랫폼)를 병행하여 정책 대상자

인 일반 청년의 의견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자율예산 집행 결과는 연 1회 ‘부산 청년정책 성과 보고회’를 통해 공개 보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는 단순한 청년 참여 확대가 아니라, 청년정책의 설계-실행-평가 전 과정에서 청년이 실질적 공동 설계자로 기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혁신이다(김기원, 2022).

④ AI 기반 청년 맞춤형 정책 추천 플랫폼 및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현재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미인지율이 높고, 신청 자격의 복잡성(45.2%)과 정보 부족(30.6%)이 주요 접근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정책 전달 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한다(손현일, 2024). 청년이 연령·취업 상태·가족 구성·거주 지역·관심 분야를 입력하면 적합한 부산시·중앙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AI가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해당 사업에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부산 청년정책 나침반’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취업·결혼·임신·이직 등 생애 전환기 청년에게 자동으로 관련 정책을 안내하는 ‘생애 이벤트 알림 기능’을 추가하면, 필요한 시점에 정책을 놓치지 않는 ‘적시 정책(Just-in-Time Policy)’ 체계를 실현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청년정책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책 현황을 빅데이터로 축적하여 향후 청년정책 수요 분석과 성과 평가의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한다.

⑤ 부산 청년정책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평가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부산 청년정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청년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청년정책의 이해)→심화(정책 설계·분석)→전문(정책 연구·평가) 3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아카데미 수료생을 청년자치회·공동결정위원회·정책실험실의 운영 주체로 연결하는 순환 체계를 갖춘다. 아카데미는 청년 정책 역량의 허브로 기능하면서, 청년 주도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를 제도화해야 한다. 나아가 장래 제3차 부산시 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5대 전략 영역(미래 노동 전환 대응, 경제 자립·생활 기반 보장, 사회 재생산·돌봄 생태계 혁신, 사회통합·공동체 재건, 미래세대 권리·포용 거버넌스)을 핵심 정책 축으로 반영해야 한다. 계획 수립 과정부터 청년의회·청년자치회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 삶의 질을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과 청년 체감도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김기현, 2022).

제6장. 결론

1. 연구요약

1) 축소사회와 부산지역 실태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규모와 기능이 장기적으로 수축하는 ‘축소사회’라는 거시적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부산 청년들이 직면한 다차원적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함으로써, 축소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축소사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부산지역의 실태를 인구, 경제, 사회, 공간의 네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산 청년들의 실제 가치관, 정책 수요, 그리고 지역 이동성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축소사회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경제, 사회, 공간 시스템 전반이 연쇄적으로 수축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정의된다. 인구감소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정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사회 시스템의 기능이 축소되며, 과거 성장기에 건설된 물리적 인프라가 과잉·노후화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집중하는 ‘축소도시’보다 더 포괄적이며, 정책적 대응에 있어 인구 외 다른 다차원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산은 이러한 축소사회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인구학적으로 부산 인구는 1995년 정점 대비 16.0% 감소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0.7%를 기록해 축소 진단 기준인 -0.15%의 4.7배에 달하는 급속한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0%에 달하며 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가임기 여성 인구와 노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멸위험지수는 0.490으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부산의 인구 감소가 단순한 이동 문제를 넘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적 소멸’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도 축소 현상이 뚜렷하다. 부산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2015년 9.1만 가구에서 2021년 13.3만 가구로 46.2%나 급증하며 공동체 해체와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전통적인 가족 및 공동체 가치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공간적으로도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고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매력도가 저하되어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축소사회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적으로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과부담 가구' 비율이 현저히 높으며, 높은 월세와 전세금은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자산 빈곤' 상태로 이끌고 있다. 또한, 청년들은 공공기관(40.2%)과 대기업(28.6%)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7.6%에 불과하여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78.3%)와 열악한 복지/노동환경(75.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강력한 요구를 보여준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사회적 관계 단절과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복합적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치적으로 청년 인구의 감소와 낮은 투표율은 청년층의 정치적 대표성 약화로 직결된다. 이는 부동산 문제, 고용 불안, 학자금 대출과 같이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주요 의제에서 소외되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이 '정상적인' 삶의 경로를 상정하면서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인 삶의 경로와 '다차원적 빈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축소사회와 부산지역 청년정책의 과제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왔다. 청년정책 전담조직은 2015년 2명에서 2025년 29명으로 확대되었으며, 팀 단위에서 독립 과 단위로 위상이 격상되었다. 청년정책 예산 역시 2019년 973억 원에서 2025년 4,146억 원으로 약 4.3배 증액되는 등 정책 추진의 강력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러한 조직 및 예산 확대는 부산시가 청년정책을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이다. 2020년 전체 청년정책 예산의 63.1%를 차지했던 일자리 분야의 비중이 2025년에는 12.8%로 급감한 반면, 2020년에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던 교육 분야가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57.6%를 차지하는 최대 분야로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시가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넘어 장기적인 인재 양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로 정책 접근 방식을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부산을 오가는 모든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하는 혁신적인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청년 참여 거버넌스가 확대되었고, ‘청년기쁨두배통장’과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긍정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청년 정책 인지도(예: 청년 마음이음 사업 70.9%가 전혀 모름)와 복잡한 자격 조건으로 인한 정책 체감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청년 정신 건강 문제와 같은 ‘숨겨진 위기’에 대한 정책적 공백이 여전하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청년정책의 공백은 부산 청년의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부산 청년들은 삶의 가치를 물질적 성공보다 예측 가능한 안정과 정서적 웰빙에 두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족’(3.89점)과 ‘건강’(3.87점, 3.84점)을 꼽았으며, ‘돈’(3.59점)과 ‘일’(3.56점)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요 요소 역시 ‘건강 유지’(28.6%)와 ‘화목한 가족 구성’(25.4%)이 경제적 성취(11.7%)보다 우선시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은 불확실한 사회에서 개인이 통제 가능한 영역을 지키려는 ‘생존주의적’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청년들은 노동에 대해 양가적인 인식을 보인다. 81.8%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을 하지 않고 싶다고 응답하여 개인의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동시에 64.8%는 ‘일하는 것은 사회적 의무’라는 전통적 노동 가치를 인정했다. 또한, 45.7%가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여, 노동 소득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부수적인 소득원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이동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부산의 미래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전체 청년의 38.2%가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으며, 특히 20-26세 청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51.6%에 달했다. 이들이 부산을 떠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57.8%)였고,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54.9%)과 ‘수도권 외곽’(15.7%)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의 청년 유출 문제가 단순히 지역의 매력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 등 ‘기회’의 불균형 때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2. 정책제언

1) 축소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과 포괄적 정책 프레임 재설계 필요

인구 감소와 도시 쇠퇴를 현실로 인정하고, 모든 도시를 성장시키려 했던 과거의 팽창적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추가 인프라 투자를 지양하며 기존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는 ‘스마트 축소(Smart Shrinking)’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질적 환경을 개선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책 패러다임 또한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부산을 오가는 모든 청년을 포함하는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는 청년들이 부산을 ‘경험하고 체류하는’ 도시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인구-경제-사회-공간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축소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형 정책 패키지 모델’을 도입하여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핀란드 헬싱키의 ‘오호야모 센터’ 사례와 같이, 청년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기회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산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 기회 부족’이다. 따라서 부산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형 인프라’를 지역 내에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부산에서 교육받고, 취업하며,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의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하여 노동 환경과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워라벨’을 중시하고 유연한 노동 환경을 선호하는 만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자율적 휴가 사용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년들이 재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단순히 현금 지원을 넘어 건전한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청년기쁨두배통장’과 같은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지원 플랜’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정주 의지를 높여야 한다. 청년들의 정주 의향은 연령, 학력, 경제활동 경험 등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15~19세 고교생을 위한 진로 및 교육 지원, 20대 중후반 취업 준비생을 위한 경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 30대 청년을 위한 주거 및 가족 형성 지원 등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통합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매니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 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

청년들의 정책 참여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낮은 인지도와 복잡한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효능감이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예산 편성 및 사업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청년들이 정책의 ‘공동 창조자(Co-creator)’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책의 효능감을 극대화해야 한다. ‘숨겨진 위기’에 대한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부산시의 청년 고독사 발생률이 전국 1위인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신 건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특화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청년 복합문제 해결 협의체’를 구축하여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세대-계층-지역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들이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연금 및 복지 부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수도권-지방 간의 ‘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4) 미래사회 대비한 선제적 정책 도입 및 연구의 발전 과제 제시

축소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미래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감소를 고려하여,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과 주요 영역에 대한 ‘미래세대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한다. 미래세대 영향평가는 세대간 형평성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

기 위한 정책도구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행정 환경에 맞는 제도 설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도입·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청년들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청년들은 비혼 동거, 반려동물 가족화 등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덩크족, 비혼 동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지원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반려동물 가족화’에 대한 높은 인식률을 반영하여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예: 반려동물 친화 공간, 의료비 지원 등)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여 축소사회에 대응해야 한다.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3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글로벌 인턴십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부산을 ‘아시아 청년 허브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친화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만큼, AI 기반의 ‘청년 맞춤형 정책 추천 시스템’과 모든 정책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들이 복잡하고 분산된 정책 정보를 탐색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가 15~29세 청년층을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를 인지하고, 후속 연구에서는 30대 청년층을 포함한 심층 분석 및 정책의 세부 로드맵 구축을 발전 과제로 제언한다.

Abstract

Restructuring Busan Youth Policy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a Shrinking Society

This report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a “Shrinking Society”, where the overall scale of society contracts due to the complex interplay of low birth rates, aging, and youth out-migration. The primary objective is to propose restructuring strategies for Busan’s youth policy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structural changes.

Busan Metropolitan City is facing a structural crisis, with its population declining by 16.0% since its peak in 1995. It is the first major city in Korea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and be classified as at risk of disappearanc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a significant portion of Busan’s youth(38.2%) intend to leave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ue to a lack of jobs(57.8%), their core values are shifting toward emotional stability, such as family and health, over purely material success.

The report suggests mov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growth and expansion” paradigm toward a “Smart Shrinkage” strategy focused on adaptation and regeneration. Five practical strategies are proposed: ① Responding to future labor transitions, ② Ensuring economic independence and basic living infrastructure, ③ Innovating social reproduction and care ecosystems, ④ Rebuilding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 and ⑤ Establishing future-generation rights and inclusive governance. This study aim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Busan and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youth by designing policies that accept population decline as a constant.

참고문헌

1. 보고서

- 구형수(2016), 한국 축소도시 진단 기준. 국토연구원
- 구형수·김태환·이승욱·민범식(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기원(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기현(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2022), 청년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김유빈·강민정·고영우·김영아(2019), 청년 삶의 질 연구(II). 한국노동연구원
- 박선영 외(2021),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K-Startup
- 성은영·임유경·임강륜·이현진(2018), 『축소도시에서 주거지 재생을 위한 스마트 축소정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손헌일(2023),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위한 부산 청년정책 추진 방안. BDI 정책포커스, 1-12
- 손헌일(2024), 『부산시 청년 패널 조사로 살펴본 부산 청년의 노동실태와 정책 방안』. 부산연구원
- 오재환(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소영(20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자료 2019-09
- 이혜영·류방란·김경애·김경희·김민희·이서현(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림(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이슈앤포커스, 39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이상호(2024), 『2024년 지역별 소멸위험지수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이소영(201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자료 2019-09
- 정순기·홍현균·박미화·박승훈·공예림(2024),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 조만·송인호·이창무·전영준(2015),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 KDI
- 주보혜·임정미·노범래·신영규·임새아·정희선(2019), 국제기구와 주요 선형 국가의 고령화 대응 정책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정진 외(202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전략산업의 발전방안.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2023년 12월 보고서)
- 한요셉(2017), 「첫 취업이 늦어질수록 생애 누적소득은 감소한다」. KDI 정책포럼 제267호. 한국개발연구원

2. 논문/학회지

- 강인호(2019), 지방소도시의 도시축소 및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5), 45-71
- 구형수(2017),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위기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규식 외(2023),
- 김명선·이제연(2019), 강원도 기초지자체 지역쇠퇴 분석. GRI 연구논총, 21(3), 125-149
- 김문길(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314, 74-95
- 김상민(2023), 인구와 경제를 고려한 도시축소(urban shrinkage) 진단 및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5(1), 1-24
- 김상봉·나경태(2022),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 13(2), 88-106
- 김영·황정미(2013), 「‘요요 이행’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 김재영·이근희(2023), 인구감소가 경제성장 및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경제논집, 62(2), 93-138
- 김태영 외(2023), 한국 축소도시의 종합계획 평가: 스마트 축소를 향하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 권주안(2021), 청년 1 인가구의 근린 내 생활불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성문(2021), 지방정부의 채무 구조와 재정 건전성. 한국지방재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미선(2022), 「청년 가구 주거 실태의 다양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 박민선(2021), 국내 인구변화 주요 이슈와 대응에 관한 연구. 숲과 나눔
- 박채림·한창근(2023), 「사회적 신뢰가 청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 변금선·이혜림(2023),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2), 127-156
- 송유미·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신영규(2021),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통권 18호, pp.79-90
- 신효주·김민호(2024), 제주지역 ‘청년참여기구’활동 경험의 교육적 의미. 평생학습사회, 20(4), 1-27
- 윤윤규·배기준·윤미례·이상호·최효미·김준영·신인철·정준호(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방법론, 설정 및 평가.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정은·박윤미·김민주(2022),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7(6)
- 이정은·박윤미·김민주(2023),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117, 61-82
- 이정희 외(2023),
- 이현정(2024), 축소도시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현출(2018), 인구의 정치학: 실버민주주의의 도래와 세대 간 정의. 한국정치연구, 27(2), 85-114
- 임지혜·김재우(2020), 「친구관계와 청년층 자살사고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 이삼수·전혜진·이재수(2018), 축소도시의 진단 기준과 사례 분석 및 발생 요인 연구. 주택도시연구, 8(3), 83-100
- 장인수·정찬우(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 GRI 연구논총, 1-28
- 정한울 외(2017),
- 조임곤(2020),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고령화 지표 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3), 1-22
- 주상현(2023), 지역 소멸 대응정책 중요도 분석과 정책적 함의. 지방정부연구, 27(2).
- 최은정·정영훈(2018),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사회복지정책』
- 최재현·박판기(2020), 한국 축소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정책의 방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3(2), 1-13.
- 홍석철(2021),
- 홍유진(2024), 국내외 도시축소 연구의 논의 비교 및 시사점: 언어네트워크 분석 및 토픽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13(2), 173-188

3. 기관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 국무조정실(2024), 『2024 고립·은둔청소년 실태조사』
- 국토연구원(2017), 지방 인구절벽 시대의 '축소도시' 문제, 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하자. 국토정책 Brief
- 국토연구원(2019), 도시재생 쇠퇴 진단지표별 전국 변화 현황(2013-2017)
-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 부산광역시(2023),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
- 부산연구원(2022),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방안
- 서울연구원(2025),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질병관리청(2024),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질병관리청
- 통계청(2024), 『2024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통계청
- 통계청(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통계청(2024),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한국리서치(2024), 『2024 세대인식조사』
- 한국리서치(2025), 『2025 세대인식조사』. 한국리서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2022),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재정제도 개선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 한국은행(2023), 지역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영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순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3년 5월)
- 한국은행(2024), 일본 경제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사례 및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 지방 소멸 측정 지표·가중치·지수 산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축소도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반도미래연구원(2023), 『인구 위기 인식 및 대응 방안』
 KDI(2023),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KDI
 KDI(2024), KDI 경제전망 2024년 상반기. KDI

국토교통부(2025), 2025년 2월 주택통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23),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부산광역시(2021), 제1차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부산광역시(2023),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통계청(2023), 통계청 KOSIS 자료. (각종 인구통계 및 경제활동 지표)
 통계청(2023),
 통계청(2024),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24),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
 통계청(2024), 2024년 고령자 통계
 통계청(2025),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4.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부산닷컴(2014), 영도구·서구·동구 순 도시 재생 시급해 잠재력은 기장군이 1위
 부산닷컴(2023), 2023년 3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3%로 국내 주요 도시 중 유일한 ‘초고령사회’ 진입
 연합뉴스(2024), 지방소멸위험지역, 저숙련직 비중 높아 고용 불균형 심각.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보고서 내 인용)
 청년G대 홈페이지, <https://young.busan.go.kr/index.nm?menuCd=20>
 한국부동산원 빈집에, <https://binzibe.kr/binzibe/binzibplatform/statisticInfo/binzibStatus.do>

5. 국외 자료

Anne Hidalgo.(2020). 「le paris du quart d’heure」.
 ECD (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Can We Get Through the Demographic Crunch?,

- OECD Publishing, Paris
- Eurocities (2024). How Porto Is Reversing Brain Drain to Become a Talent Magnet. Eurocities.
- Hidalgo, A. (2020). Le Paris du Quart d'Heure. Mairie de Paris.
- Kim, J., et al. (2010a). Spatial and Temporal Analysis of Urban Shrinkage in South Korea. *Journal of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136(3).
- Martinez-Fernandez, C., Audirac, I., Fol, S., & Cunningham-Sabot, E. (2012). Shrinking cities: Urban challenges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2), 213-225.
- OECD (2025). OECD Employment Outlook 2025: Can We Get Through the Demographic Crunch? OECD Publishing.
- Pallagst, K. (2008). Shrinking Cities. Planning Challenge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Cities Growing Smaller*. Kent State University's Cleveland Urban Design Collaborative, Kent State University.
- Pallagst, K. M., et al. (2013). *Shrinking Cities: Urban Shrinkage in a Global Context*. Routledge.
- Schilling, J., & Logan, J. (2008). Defining and measuring shrinking citi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 Turok, I., & Mykhnenko, V. (2007). The trajectories of European cities, 1960-2005. *Cities*, 24(3), 165-182.
- Welsh Government (2015).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Cardiff: Welsh Government.
- Wiechmann, T., & Pallagst, K. M. (2012). Urban shrinkage in Germany and the USA: A comparison of transformation patterns and local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2), 261-280.

부록

1.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List
No.

ID

부산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설문조사

부산연구원은 미래세대에 대한 가치관과 미래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축소사회에 대비한 미래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신 견해와 의견은 부산시 노동정책 마련에 소중히 사용될 계획입니다.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에 한해 사용되며, 응답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조사기관인 (재)부산연구원은 1992년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출연 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진은 연구 윤리, 통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재)부산연구원 손현일 책임연구위원 (☎ 051-860-8826, e-mail: hison@bdi.re.kr)

2025년 7월

1.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마다 중요한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	매우 중요
1) 가족	①	②	③	④
2) 친구	①	②	③	④
3) 신체적 건강	①	②	③	④
4) 정신적 건강	①	②	③	④
5) 일(직업)	①	②	③	④
6) 돈	①	②	③	④

2. 아래의 보기들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2개지만 선택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① 가족 ② 친구 ③ 신체적 건강 ④ 정신적 건강 ⑤ 일(직업) ⑥ 돈

3. 미래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음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몸이 건강한 것 ②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
- ③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④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
- ⑤ 노력하여 나의 꿈이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 ⑥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 ⑦ 좋은 학벌(명문대 졸업)을 가지는 것 ⑧ 돈을 많이 버는 것
- ⑨ 기타()

4. 다음의 각 대상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나요?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문항	전혀 신뢰할 수 없음	신뢰할 수 없는 편임	신뢰할 수 있는 편임	매우 신뢰할 수 있음
가족	①	②	③	④
친구	①	②	③	④
정치인	①	②	③	④
언론(뉴스, 신문)	①	②	③	④
유투브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①	②	③	④
인공지능 (예: ChatGPT, 시리, 빅스비 등)	①	②	③	④

5. 다음은 가족구성에 대한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반려동물(식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부모님의 노후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다음은 노동에 대한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일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①	②	③	④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일을 하지 않고 취미 생활 등을 하면서 지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비트코인, 주식 등의 개인적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보다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7. 우리사회에서 다음 각 항목에 제시된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구분	전혀 갈등 없음	별로 갈등 없음	약간 갈등 있음	매우 갈등 심함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①	②	③	④
부유층과 서민층	①	②	③	④
수도권과 지방	①	②	③	④
남성과 여성	①	②	③	④
한국인과 외국인	①	②	③	④

8. 다음은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관련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과학기술은 사회문제(환경, 질병, 빈곤 등)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과학기술 발달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9. 부산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의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있다 ⑤ 매우 있다

9-1. (문항 9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만약 부산을 떠나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자리와 관련된 이유로 (취·창업 준비,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동 등)
 ② 진학(대학/대학원)을 목적으로
 ③ 자녀의 교육, 보육 환경을 위해서
 ④ 자녀 외 동거가족과 관련된 이유로(부모님의 이사, 부모님 부양 등)
 ⑤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직장 등 통근 편의, 집의 크기 확장, 환경 및 건강, 편의시설 등)
 ⑥ 결혼, 독립 등의 이유로 (결혼으로 인한 신혼집 마련, 독립 등)
 ⑦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비 부담, 평수를 줄이는 등)
 ⑧ 기타 ()

9-2. (문항 9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만 응답) 만약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한다면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 ① 서울 ② 경기도/인천 ③ 경남 ④ 울산 ⑤ 대구/경북
 ⑥ 광주/전라권(전남/전북) ⑦ 대전/충강권(충남, 충북, 세종, 강원) ⑧ 제주도 ⑨ 해외

10. 귀하는 부산 시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귀하는 서울에서 태어나 사는 건 스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1.(문항11에서 ④⑤에 응답한 경우만) 귀하는 서울에서 태어나 사는것이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서울에는 명문 학교와 학원이 많아 교육 환경이 우수
 ② 대기업, 공기업, 주요 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더 많은 취업 및 인턴 기회가 주어짐
 ③ 서울 출신 친구, 선후배, 인맥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용이
 ④ 각종 문화, 예술, 정보, 트렌드에 빠르게 접근 가능
 ⑤ 교통, 의료, 복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생활의 질이 높음
 ⑥ 서울에서 태어난 가정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
 ⑦ 기타()

13.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입니다.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출생년도	() 년 ※ 조사대상: 부산거주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거주지역	① 강서구 ② 기장군 ③ 금정구 ④ 남구 ⑤ 동구 ⑥ 동래구 ⑦ 부산진구 ⑧ 북구 ⑨ 사상구 ⑩ 사하구 ⑪ 서구 ⑫ 수영구 ⑬ 연제구 ⑭ 영도구 ⑮ 중구 ⑯ 해운대구
최종학력	①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 포함) ② 대학교 재학 중 (중퇴 포함)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직업	① 학생 ② 회사원 ③ 프리랜서 ④ 취업 및 창업 준비 ⑤ 주부 ⑥ 사업체 운영 ⑦ 무직 ⑧ 기타()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포함)	① 있음 ② 없음
일경험 유무 (가족외의 사람으로부터 임금성격의 수입이 생기는 일)	① 있음 ② 없음
부산거주기간	① 부산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고 있음 ② 유년기(영유아, 초등학교 시절) 이사와 계속 살고 있음 ③ 청소년기(중·고등학교) 이사와 계속 살고 있음 ④ 성인기(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사와 계속 살고 있음 ⑤ 부산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해외포함)으로 이사했다가 최근 돌아왔음
가정의 경제수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장래 살고 싶은 지역	① 부산시 내 ② 부산인근지역(경남, 울산) ③ 서울 ④ 서울 제외 수도권지역(경기, 인천) ⑤ 그 외 지역 ⑥ 해외 ⑦ 알하고 싶지 않음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 첫 일자리의 월급은 얼마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250만원 미만 ② 250만원~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350만원 미만 ④ 35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창의연구 2026-04-359

축소사회, 부산청년정책 재구조화 및 실천전략

저 자 손헌일, 김두례, 권태상, 박봉철, 김세현, 이가현
발 행 인 김영재
발 행 일 2026년 04월
발 행 처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우)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상수도사업본부 8,9F
☎ (051)860-8600, FAX (051)860-8619
홈페이지 <http://www.bdi.re.kr>

I S B N 979-11-6886-359-0 9330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부산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